

#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경제정의연구소



# 〈 목 차 〉

I. 서 문	13
II. 조사 개요	25
1. 조사 배경	26
2. 조사 대상	27
3. 조사 기간 및 방법	27
III. 일반 현황 분석	29
1.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30
2. 취업심사 평균 승인률	35
IV. 부처별 특징분석	39
1. 기획재정부	40
2. 산업통상자원부	51
3. 국토교통부	60
4. 중소벤처기업부	71
5. 공정거래위원회	77
6. 금융위원회	90
7. 국세청	96
8. 금융감독원	107

<b>V. 관피아 근절방안</b> .....	129
1.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	134
2.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	138
3. 퇴직 전 검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	140
4. 퇴직 전 경력세탁 방지 .....	142
5. 퇴직 후 경력세탁 방지 .....	146
6.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	148
7.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 .....	150
8.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의 공개 .....	156
9.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의 확대 .....	160
<b>VI. 부 록</b> .....	165
[부록1] 결정사유 관련 법령 .....	166
[부록2] 8개 부처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및 조사내용 .....	168
[부록3]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	201
[부록4] 경실련 관피아 조사 및 제도개선 T/F .....	231

## 〈 표 목차 〉

[표 1] 제한 기준 .....	30
[표 2] 제한 기관 .....	30
[표 3] 취업심사 절차 .....	31
[표 4]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	31
[표 5] (2016~2021.8.)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	35
[표 6] (2016~2021.8.) 8개 부처별 '4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	37
[표 7] (2016~2021.8.) 8개 부처별 취업심사 가능·승인 결정 추이 .....	38
[표 8] 기재부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	40
[표 9] 기재부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	41
[표 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직 기재부 재취업 현황 .....	42
[표 11] 국제금융센터 원장직 기재부 출신 재취업 현황 .....	43
[표 12] 역대 한국자금융중개(주) 대표이사 사장 이력 현황 .....	44
[표 13]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직 기재부 출신 재취업 현황 .....	48
[표 14] 산업부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	51
[표 15] 산업부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	52
[표 16]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현황 .....	53
[표 17] 2021년 정부의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계획 .....	54
[표 18] (2016~2021.8.) 심사대상자 중 산업부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	57
[표 1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역대 총장 현황 .....	59
[표 20] 국토부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	60

[표 21] 국토부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	61
[표 22] 국토부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	62
[표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부 출신 재취업 현황 .....	66
[표 24] 국토부 출신 한국골재협회 재취업 현황 .....	67
[표 25] 2019년 (주)동명이 낙찰된 국토부 철도사업 현황 .....	68
[표 26] 중기부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	71
[표 27] 중기부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	72
[표 28] 중기부 산하·감독기관 낙하산 현황 .....	72
[표 29] 공정위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	78
[표 30] 공정위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	78
[표 31] (2008~2021.8.) 공정위 산하·감독기관 낙하산 현황 .....	79
[표 32] (2020.2.13.) 대기업 퇴직 간부 채용 강요 관련 대법원 재판 결과 ...	88
[표 33] 금융위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	91
[표 34] 금융위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	91
[표 35] (2016~2021.8.)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위 출신 재취업 현황 .....	92
[표 36] (2016~2021년) 금융위 퇴직공무원의 보험협회 재취업 현황 .....	94
[표 37] 국세청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	97
[표 38] 국세청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	98
[표 39] 주요 법무법인 전관영입 현황 .....	99
[표 40] 대한주정판매(주) 재취업 현황 (※일부 누락) .....	101
[표 41] 2021년 전국 지방세무서 세정협의회 운영 현황 .....	105
[표 42] 금감원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	108
[표 43] 민간기업 재취업자 75명의 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	109

[표 44] 금감원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	109
[표 45] 2016~2021년 시중은행 재취업 현황 .....	111
[표 46] 금감원 퇴직관료의 보험사 재취업 현황 .....	112
[표 47] 금감원 퇴직관료의 증권사 재취업 현황 .....	113
[표 48] (2016~2021.8.) 금감원 퇴직관료의 (주)리드코프 재취업 현황 .....	116
[표 49] 역대 금융보안원 원장 현황 .....	119
[표 50] 역대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현황 .....	120
[표 51] 역대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현황 .....	121
[표 52] (2016~2021.8.) 금감원 출신 법무법인 재취업자 현황 .....	124
[표 53]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관련 입법 현황 .....	131
[표 54] 령 ‘특정 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관련 개정 .....	131
[표 5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부동산’ 관련 개정 .....	132
[표 56] 공직자윤리법 령 제34조 제3항 각 호에 대한 근절방안 .....	136
[표 57] (2016~2021.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현황 .....	151
[표 58] 전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재취업 현황 .....	153
[표 59] 조사 대상자 중 상반된 취업심사 결과 비교표 .....	157
[표 60] 국제금융센터 원장직 재취업 현황 .....	201
[표 61] 국제금융센터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	202
[표 62] 산업부 산하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	204
[표 63]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	207
[표 64] 한국계량측정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	207
[표 65]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	208
[표 66]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	209
[표 6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	210

[표 68] 한국시멘트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0
[표 69]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1
[표 70]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2
[표 71]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2
[표 72] 한국철강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3
[표 73] 한국표준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4
[표 74]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5
[표 75]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6
[표 76] 해외자원개발협회(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6
[표 77] (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8
[표 78] SK텔레콤(주)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9
[표 79] (주)KT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19
[표 8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0
[표 8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1
[표 82] 한국공항공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1
[표 83]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2
[표 84] 한국농어촌공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3
[표 85] 한국부동산원 재취업 현황	224
[표 86] 한국부동산원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5
[표 87] 한국철도공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5
[표 88] 이레일(주)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6
[표 89] 해외건설협회 회장직 재취업 현황	227
[표 90] 해외건설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28
[표 91] (재)경북테크노파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230

## 〈그림 목차〉

[그림 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절차 .....	32
[그림 2]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역대 이사장 현황 .....	50
[그림 3]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중 .....	76
[그림 4]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정관 개정(안) .....	83
[그림 5] 코나아이 카드형 상품권 결제 실적 .....	93
[그림 6] 금감원 퇴직공무원의 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 재취업 현황 .....	125
[그림 7]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 비율 ..	135
[그림 8]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中 경력 기재란 .....	144
[그림 9] 공무원 연금 전액 정지자 수 추이 .....	162



I

서 문

## 관피아 실태 보고서를 내면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팔려나가고 있다.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물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관리·감독업무가 그 업무의 대상이 되는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에 위임되는 현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는 국가기관과 위임받는 민간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인적 고리가 ‘관피아’로 비난받는 재취업 퇴직관료이다. 다음백과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서 정부 부처에서 일하다 관계기관이나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관피아는 매우 뿌리가 깊어 경제개발연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 관피아 개념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들이 국가기구의 권한을 오남용하여 경제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부터 시행된 정부 주도 경제성장 전략은 당연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가 지원할 전략산업의 선정은 물론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 어디에 생산거점을 둘지, 어느 정도의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과 특혜가 주어질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택, 결정했다. 기업에게는 이러한 정부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기업 중 어느 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상관없이 둘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이권)’을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정부는 기업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고 기업은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공직자 또는 의사결정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배정해준 대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고받는 관계가 ‘정경유착’이다. 정경유착의 사전적 정의는 “경제계와 정치권이 부정부

패의 고리로 연결되어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반대로 정치인이 기업에 압력을 가해 불법 정치자금 따위를 받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재직 중 받은 불법 자금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추징금이 각각 2,205억 원과 2,682억 원이었다. 노태우는 완납한 데 반해 전두환은 959억 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독재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온전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료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거나 이익을 추구할 여지는 없었다. 관료는 정치에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

정부 주도면서 동시에 재벌주도의 성장전략에 힘입어 재벌들이 성장하고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불법적인 정경유착은 점차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당 및 정치인 관련해서는 거액의 정치자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2년 대선정국에서 터져 한나라당에게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안긴 수백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벌금 15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근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불법 정치자금에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는 아닐지라도 당연히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다. 대통령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정치권과 재계 사이의 이러한 정경유착이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나타난 변종이 관피아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루어지면서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선거 때마다 ‘참신한 인물 영입’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반복되면서 정치인들의 정책역량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만큼 정치권은 정당의 비전을 내재화하고 구체적인 국정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채 관료의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다. 특히 수평적 정권교체 국면에서는 정치권의 관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관피아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었다.

관피아의 원조는 사법부에서 시작된 ‘전관예우’이다. 전관은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하는 검찰이나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권력이나 금권(경제권력)과 타협하면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퇴직 법조인을 의미한다. 다음백과사전의 의미로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기소하거나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다. 당초에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을 일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하는 ‘전관’의 범위가 사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면서 ‘관피아’에 이르게 되었다.

사법부의 전관예우는 외견상 삼권분립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가장 뿌리가 깊다. 독재 정부 시절 사법부는 존재를 위해서도 정치 권력에 순응하는 관행을 유지하면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국민을 향해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신화를 창조했다.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강한 요구가 분출되었고 실현되었다. 국민의 민주화 투쟁으로 쟁취한 독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사법부는 ‘시험 권력’이라는 존재 기반과 결합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의 독립까지 달성하면서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변신했고, 이는 결국 ‘사법농단’에까지 이르렀다.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도 퇴직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재취업이 의미하는 바가 전관에게 의미하는 바는 국민주권의 수호자이자 공익추구자에서 철저한 사익추구자로의 변신이다. 그래서 이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과거 공익추구자인 판검사 경력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관’은 ‘현재의 전관’을 예우함으로써 자신의 미

래를 준비한다. 전관예우는 퇴직한 판검사가 향유하는 특혜에 그치지 않고 이들에게 특혜를 배려하는 현직 판검사들에게도 공익을 배신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사법부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한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엄연한 사법부의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마저 사법부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는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개업 후 2년간 퇴임 전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지만, 전관예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반대로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다수 법관의 인식 자체가 오히려 전관예우의 일상화 내지 관행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제 전관예우 또는 관피아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3부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스며들어 국민주권과 국민 행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판검사를 위한 전관예우를 해소하는 길은 전관예우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직급 이상의 법조인에게는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나 특히 민간기업에의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변호사로서 활동한다면 국선 변호인으로 봉사하는 길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공익적 활동(대학, 연구소,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 사법 독립을 위해 불가피한 특혜 집중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집중을 유지하려는 ‘사법농단’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입법부는 관피아의 확산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스스로 관피아를 양성하는 데에는 3부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관피아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체계적이거나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일 뿐만 아니라 보좌진의 재직 자체는 더욱 불안정하기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미약하다. 그렇지만 일부 보좌진이나 입법공무원 사이에서는 ‘전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입법부에서 관피아는 입법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원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법안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법안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제도를 통해서도 입법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입법과정에 관료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사실상 국회의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헌법 제40조 및 제52조)이 관피아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입법공무원에 의한 입법 절차의 방해보다 훨씬 심각한 입법권 침해가 행정부, 사법부 출신 국회의원에 의해서 태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가령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에는 반대하고 나선다. 이들은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검사이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한편, 행정부의 정책적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출신 퇴직 관료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입법권을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에도 일부 양도하고 있는 셈이다. 관피아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더불어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청렴의 의무와 국익 우선 의무(헌법 제46조)는 물론 행정부 견제 기능과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충실한지 의문이다.

본래적인 의미의 행정부 관피아의 원조는 기획재정부(또는 재정경제부) 퇴직 관료를 일컫는 ‘모피아(Mofia)’이다. 이들이 산하 기관은 물론 유관협회, 금융회사 등에 퇴직 후 재취업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금융회사와 민간기업에 유리하고 국민(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경제에서 국민주권(헌법 제1조)의 경제적 표현인 소비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외환은행 인수합병 사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국익에도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 현재 기재부는 조달청장, 통계청장, 관세청장 등 대부분 기재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모두 기재부 실장 출신이고, 2021년 말 현재 청와대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국민경제비서관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가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여당의 강한 목소리에도 기재부가 버틸 수 있는 데에는 이러한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세청을 포함하여 4개 산하 기관에 부속된 협회들에도 관피아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들에게 위탁된 국가 권한은 오랜 관행으로 인해 이들 협회를 준(準)국가기관으로 변환시키고 있다. 관세청 퇴직 관료들의 친목 모임으로 출발한 ‘관우회’가 “선진관세행정 지원과 현장 중심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29곳 중 28곳을 관리하는 등 2020년에 374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도 기재부 출신이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중앙회 등 4대 민간금융협회장도 모피아 몫이다. 아울러 한국증권금융, 저축은행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민간기관의 CEO들도 모두 모피아들이다.

행정부 ‘관피아’는 모든 부처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히 우려스러운 사실은 현직 관료들이 정부 입법(헌법 제52조)을 통해 유관 기관이나 협회를 창립하면서 관피아를 위한 (일)자리를 같이 창출하는 현상이다. 관피아의 자력에 의한 관피아의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피아의, 관피아에 의한, 관피아를 위

한’ 국가권력의 잠식 현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대 국회에서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고자 시도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기업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재단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면 소비자를 위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10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상정했으나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소비자 관련 지원과 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예산지원이라 다시 폐기되었다. 이 시도는 ‘소비자 보호’라는 국가의 고유한 공익적 역할을 민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도가 성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 소비자 보호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책임의 외주화’) 정부 지원을 빌미로 재단에 퇴직 관료를 재취업시킴으로써 ‘핑 먹고 알 먹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관피아의 확산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장이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론’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이 이미 폐기된 이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는 개발연대의 국가 주도 성장전략에서 파생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논리로 주로 재벌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 그래서 ‘철밥통’으로 비난받는 공무원의 숫자를 많이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외주화’하는 꿈수가 바로 관피아이기도 하다. 이는 동시에 국가(관료)의 책임을 일부 면제해주는 효과도 가져다주기 때문에 관료에게는 일거양득이다. 관피 아는 형식적으로는 관료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료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피 아는 새로 확대되는 국가기능을 민간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이미 국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민간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증가한다. 당연히 재정지원이 뒤따른다. 그래서 한국에서 ‘작은 정부론’은 허울만 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큰 정부’를 초래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관피아가 장악한 공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2022년 초 언론에 보도되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이 6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전환기 국가교통체계 재정립 방안’을 대한교통학회 컨소시엄에 2021년 12월 발주했다. 2021년 2월에 취임한 김한영 이사장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국피아’)으로 현 장관과 행시 동기로서 철도 ‘민영화론자’로 알려져 있다.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진의 부책임자도 MBC 보도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론자이다. 정권 말기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관피아’로 공기업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철도공단이 민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영화론자 관피에게 책임이 맡겨지면 어떤 사익추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기업을 설립목적(공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사익)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다.

관피아 문제는 퇴직 후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의 미래 재취업 일자리를 위해서 현직에 있는 동안에도 재취업 제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경력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재취업할 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현직 관료가 피감기관에 대한 조사나 감사에서 전직 상관을 마주 대하게 되면 엄정한 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것이 바로 관피아의 존재 이유다. 그리하여 현직에서도 공익과 사익이 뒤엉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피아의 본질은 국가(공)권력의 사유화(민영화)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관료가 부실하거나 위법한 관리·감독이 초래할 수도 있는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민간수탁기관은 관리·감독 권한의 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거나 피감기관이나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로 충당한다. 이 관리·감독 대행 기관의 책임자로 재취업한 관료(관피아)는 국가를 상대로 민간기업(‘경제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2022년 들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단적인 사례이다. 2015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어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거래소는 이사장은 물론 상근감사위원,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금융위원회 관피아에 장악되어 방만 경영과 독점적 폐해가 누적되고 있었다. 몇몇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해당사자인 금융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고 공공기관 지정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정책)가 공익에 비추어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시장에서 관철되는 사익에 의해 조정되는 사례이다. 관피아는 이렇게 해서 국가기능을 잠식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관피아에 대한 규제법으로서 ‘공직사윤리법’이 강화되었지만, 관피아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취업제한 사유가 느슨하여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거의 100% 허용되는 실정이다. 이제는 재취업이 거의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퇴직 관료의 재취업에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로 방어논리가 펼쳐진다. 하지만 국가가 당연히 수호해야 하는 공익이 퇴직 관료에 의해 침해당하고 퇴직 관료와 피감기관의 사익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직업선택의 자유로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특히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자의 재취업은 물론 출국마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자명해진다. 국가가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더욱이 관료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퇴임 후 일자리를 위해 해당 기관에 특혜를 베푸는 부당함을 감안한다면 관피아는 국가에 위협한 존재이다. 국가가 당연히 수호해야 하는 안전이라는 공익이 관피아의 사익을 위해 침해당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가가 사유화(민영화)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외부화에 대한 대안은 다시 내부화하는 길뿐이다.

관피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본방향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정부의 크기를 둘러싸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관료의 수를 포함하는 정부의 크기는 그 다음에 결정되어도 된다. '작은 정부'나 '큰 정부'가 아니라 '일하는 정부' 또는 '스마트정부'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에 만연해 있는 '국가의 사유화'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관피아가 국가 밖으로 가지고 나간 국가의 권한이 다시 국가에 환원되어야 한다.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크기를 둘러싼 논쟁의 한 가운데에서 겉으로 보이는 정부의 크기(관료의 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중간지대를 늘리거나 민간부문에 퇴직 관료가 - 끌려 들어가든 밀고 들어가든 - 연결고리를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만드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한국처럼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열약한 나라에서는 관피아가 강해질수록 소비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침해당하기 쉽고 보호가 부실해질 위험이 크다.

관피아의 소리 없는 확산에는 누구보다 정치권이 책임이 크다. 관료 집단은 전문가이고 정치인은 아마추어라는 비대칭적 구도 속에서 정치인의 무능으로 인해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치인이 관료를 지휘하면서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관료를 앞세우면서 자신은 책임을 면하는 오랜 관행은 흔들림이 없다. 선출권력의 무능이 관피아를 키워주는 온상이 되고 있다.

부처 산하 기관으로서 명백하게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구성원들이 관료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하 기관일지라도 정상적인 위계 구조 속에서 승진과 퇴직이 이루어지는 정부 부처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관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는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실장의 ‘말년’ 보직으로 ‘낙하산’ 인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적인 승진체제를 가져야 한다. 관피아가 초래하는 폐단을 차단하고 관피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부처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여당)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본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정치인이 선출 권력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국민의 위임을 받아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는 역량 사이에 현실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간극을 파고든 것이 관피아다. 이 간극을 메우려면 정치인이 정치를 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정치인 스스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정치가 더 이상 관료 뒤에 숨거나 관료 등에 업혀서 이끌려가는 정치인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관료가 행정부처의 책임자(장·차관)가 되거나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이 되는 선진국은 없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삼권분립 하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관료와 정치인의 경계 또한 분명하게 그어져야 한다. 정치가 정치답지 못한 곳에서 이 경계는 무너지고 관피아는 자라게 되는 것이다. 관피아가 번창하는 나라에서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다.

2022년 1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 호 균

# II

## 조사 개요

# 1. 조사 배경

---

- ‘관피아’란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말함. 관피이는 민관 유착을 형성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습임
-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가 지목되었음. 관재의 원인은 공무원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당시 경실련은 해(海)피아와 안(安)피아의 민간협회 취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sup>1)</sup>
- 또한 그 전부터 경실련은 ‘6개 중앙행정기관 퇴직공직자 194명 취업 현황 분석 발표(2006.12.4.)’를 비롯한, ‘고위공무원 대형로펌 취업현황 분석발표(2011.5.18.)’ 등을 발표하며 취업제한 심사의 유명무실함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음
-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제도 등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다시 한 번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 및 발표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

---

1) 경실련. <http://ccej.or.kr/7253>

## 2. 조사 대상

---

-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
  -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2016. ~ 2021.8.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조사
  - 경실련은 경제정의실현을 가치로 들고 있는 만큼 산업, 재벌 및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 부동산 및 건설 등 경제관련 행정과 정책을 하는 8개 핵심 부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 3. 조사 기간 및 방법

---

- 2016년부터 현재(최근 5년간)까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를 중심으로 경력사항 조사
  -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주요 경력, 재취업 임기동안의 주요 변동사항, 연봉 등 관계 규명
- 언론검색, 각 부처별 홈페이지, 각 재취업기관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기업공시채널 KIND, 조선일보 인물검색 등
- 조사 대상자 외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도 추가로 기술하였음



# III

## 일반 현황 분석

# 1.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 중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을 하고 있음

[표 1] 제한 기준

구분	기관 업무 기준	부서 업무 기준
대상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기관 1급 포함)	3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관련성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2항 각호 업무 재정지원,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계약·검사·검수,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심리·심판,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등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가능 / 취업제한 / 취업승인 / 취업불승인으로 분류됨

[표 2] 제한 기관

구분	기준	
영리 분야	영리 사기업체	자본금 10억 원 및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 원 이상
	협회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 가입
	시장형 공기업	기획재정부 지정·고시
비영리 분야	공직유관단체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
	사립대학 등	사립대학과 그 설립 학교법인
	종합병원 등	종합병원과 그 설립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말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협회’는 6월 고시)

[표 3] 취업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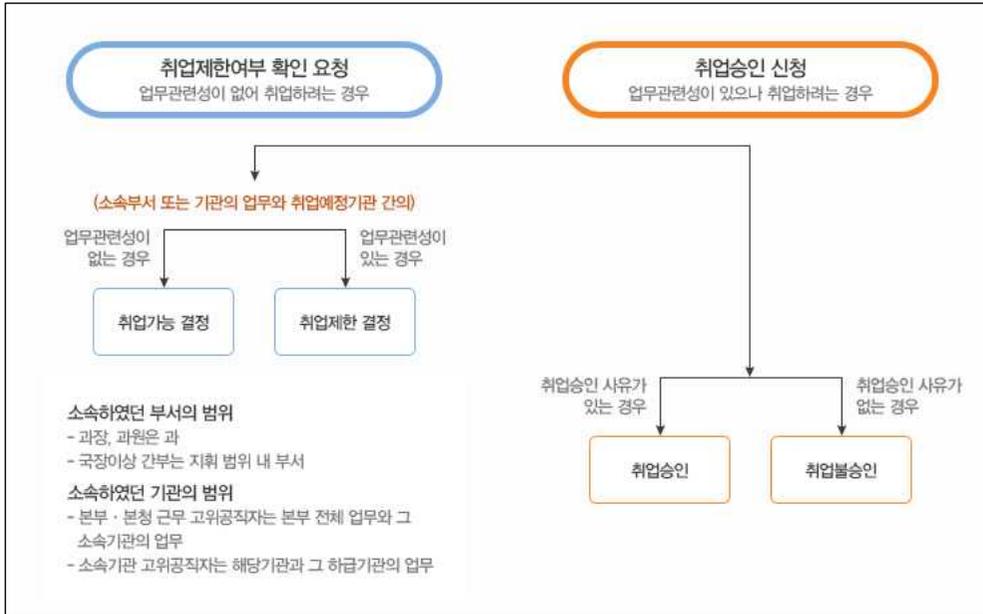
순번	주관	절차
1	퇴직공직자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 취업개시 30일 전 · 제출서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 및 취업예정확인서
2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업무관련성(승인사유) 등 검토의견서 작성 · 소속 중앙행정기관 등에 5일 이내 이송
3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취업심사 대상 여부 확인 · 검토의견서 보완·작성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 이내 이송
4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 요청내용 확인조사 등 자료검토 · 안전상정 및 취업제한(승인)여부 결정
5	심사결과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신청인)에게 각각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됨

[표 4]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위반 내용	제재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법 제29조제1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2호)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림 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절차



(자료: 인사혁신처)

○ 관련 판례

- 취업제한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음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마331 전원재판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헌집26-1, 609]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이후 특정업체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 재취업한 특정 업체를 위해 재직 중에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4급 이상 직원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된다. 나아가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 우선취업도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또한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취업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여 이로 인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형성된 대인관계 등을 이용한 로비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공직자와 영리 사기업체 간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직무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특정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공직 재직 중 취득했던 정보의 활용이나 기존에 형성된 대인관계를 이용한 로비활동 등은 외부에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어 위반행위를 포착해 내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특정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더불어 취업제한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판시하였음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피감독기관인 사기업체등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보호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 2. 취업심사 평균 승인률

### 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률 평균 82.5%

[표 5] (2016~2021.8.)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단위: 명, %)

퇴직 전 소속기관	전체 심사 대상자 (A)	취업 가능 (a)	취업 제한 (b)	취업 승인 (c)	취업 불승인 (d)	승인율 (%)
기획재정부	31	18	1	12	0	96.8
산업통상자원부	94	63	6	24	1	92.6
국토교통부	120	64	27	22	7	71.7
중소벤처기업부	14	7	2	5	0	85.7
공정거래위원회	28	23	2	2	1	89.3
금융위원회	22	10	0	10	2	90.9
국세청	168	115	47	5	1	71.4
금융감독원	111	86	3	19	3	94.6
<b>계</b>	<b>588</b>	<b>386</b>	<b>88</b>	<b>99</b>	<b>15</b>	<b>82.5</b>

\*A=a+b+c+d

\*승인율(%): (a+c)/A\*100

-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여간(2016~2021.08.) 취업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음.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임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시 심사 결과 중 ‘취업가능’ 결정률은 81.43% (474명 중 386명)
- 취업승인 신청 시 심사 결과 중 ‘취업승인’ 결정률은 86.84% (114명 중

99명)

-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쳐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이하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임

## 2.

## ‘4급 이상’ 취업심사 승인을 평균 89.3%

- 4급 이상인 퇴직공직자는 취업과 관련하여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음. 4급 미만 직급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 대부분 단순 집행업무 등을 하는 생계형 재취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률을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음

[표 6] (2016~2021.8.) 8개 부처별 ‘4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단위: 명, %)

퇴직 전 소속기관	4급 이상 대상자 (A)	취업 가능 (a)	취업 제한 (b)	취업 승인 (c)	취업 불승인 (d)	승인율 (%)
기획재정부	31	18	1	12	0	96.8
산업통상자원부	94	63	6	24	1	92.6
국토교통부	86	49	9	21	7	81.4
중소벤처기업부	14	7	2	5	0	85.7
공정거래위원회	27	23	2	1	1	88.9
금융위원회	22	10	0	10	2	90.9
국세청	22	18	3	1	0	86.4
금융감독원	111	86	3	19	3	94.6
<b>계</b>	<b>411</b>	<b>274</b>	<b>26</b>	<b>93</b>	<b>14</b>	<b>89.3</b>

\*4급 이상: 퇴직직급이 1~4급, 직원 1~4급, 가급, 고위공무원, 임원, 전문임기제, 정무직인 자

\*A=a+b+c+d

\*승인율(%): (a+c)/A\*100

- 4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평균 승인률은 89.3%로, 전체 대상자에 비하여 취업가능·승인 비율이 더 상승함. 국토부나 국세청의 경우에는 4급 이상 퇴직자일수록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음

### 3. 취업심사 연도별 승인률

[표 7] (2016~2021.8.) 8개 부처별 취업심사 가능·승인 결정 추이  
(단위: %, 년)

퇴직 전 소속기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8월)	평균
기획재정부	100	100	100	100	75	100	95.8
산업통상자원부	80	92.9	100	94.1	93.3	94.1	92.4
국토교통부	69.6	82.4	59.1	76.2	66.37	84.6	73.1
중소벤처기업부	100	50	100	100	100	66.7	86.1
공정거래위원회	100	100	50	100	100	100	91.7
금융위원회	100	100	50	80	100	100	88.3
국세청	57.9	77.8	64.3	72.5	71.8	86.7	71.8
금융감독원	88	100	90	100	100	92.9	95.1
<b>계</b>	<b>86.9</b>	<b>87.9</b>	<b>76.7</b>	<b>90.4</b>	<b>88.3</b>	<b>90.6</b>	<b>86.8</b>

\*승인율(%): (취업가능+취업승인)/심사대상자 합\*100

- 해가 갈수록 취업심사 가능·승인 결정 추이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전체적으로 매년 전체(8개 부처) 평균이 76~90%을 웃도는 것에 비춰보았을 때, 재취업 심사가 매우 형식적이며 통과하기 쉬움을 알 수 있음

# IV

## 부처별 특징분석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 1. 기 획 재 정 부

## 1. 기획재정부의 사무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음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아우르며 금융·경제 분야를 장악하고 있음.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산하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고 있음

## 2. 취업기관 현황 및 직위

[표 8] 기재부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단위: 명)

취업 유형	취업 기관	계
협회·조합	국제금융센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자본시장연구원	8

시장형 공기업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2
민간기업	삼성전자, 삼성경제연구소, IBK저축은행, LG전자, 한국기업데이터, 삼성생명보험, 일동홀딩스, 한국자금융재, 서울보증보험 등	15
법무·회계·세무법인	-	0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법인 가천학원, 한국부동산원	5
<b>계</b>		<b>30</b>

- 기재부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 31명 중 30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음. 이 중 15명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하였음. 다음으로 협회·조합 8명, 기타 5명, 시장형 공기업 2명 순임

[표 9] 기재부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단위: 명)

퇴직 전 직급	재취업 직위	계
정무직	비상임연구위원(1), 사외이사(2), 초빙연구위원(2)	5
(일반직) 고위공무원	대표이사(2), 부사장(1), 비상임감사(1), 사외이사(1), 사장(2), 상근감사위원(1), 상근부회장(1), 상임이사(1), 원장(2)	12
3급	상무(1), 상임이사(1), 상근감사(1)	3
4급/기술4급	금융연구소장(1), 상임이사(1), 비상임이사(1), 상무(4), 전무(2), 전문위원(1)	10
<b>계</b>		<b>30</b>

- 이 중 장·차관급인 정무직 출신(5명)은 연구원의 연구위원과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갔음. 국장급인 고위공무원(12명) 역시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임. 과장급인 3급/4급(13명)은 대개 상무·전무이사 등의 임원급으로 포진함

### 3. 주요 특징

#### 1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각종 기업정책과 상장업무 관련 자문 등을 하는 민간협회임.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유리한 법제도를 정부에 건의하는 활동도 함. 상근부회장은 내부 출신이 승진해왔으나, 2017년부터 조달청장 출신 인사가 낙하산으로 자리하기 시작함.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2017.2.에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했음

[표 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직 기재부 재취업 현황

직책	성명	취업 시기	주요 경력
상근부회장	김△△	'17.02~20.02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행정지원실장, 부산조달청장
	이△△	'20.02~ 현	충북조달청장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례적으로 정부 관료 출신을 내정하기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 등 유관기관의 고위인사가 상장사협의회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sup>2)</sup>
- (국제금융센터 원장)
  - 국제금융센터는 1999.4.1.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은

2) 임세원·이경운 기자.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에 기재부 출신」. 서울경제 (2017.02.23.자 기사).

행 지원으로 설립됨.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산업은행 총재 출신,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출신, 금융위원회 위원장 출신 등이 원장을 역임했으나,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 국장 출신들이 원장을 해오고 있음

[표 11] 국제금융센터 원장직 기재부 출신 재취업 현황

직책	성명	재직 기간	주요 경력
제5대 원장	정△△	'07.05~'10.05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6대 원장	이△△	'10.05~'13.05	기재부 FTA 국내대책 본부장, 대외경제국장
제7대 원장	김△△	'13.06~'16.06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제8대 원장	정△△	'16.06~'19.06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제9대 원장	최△△	'19.06~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 공공 금융기관(IBK기업은행) 자리 나눠먹기

- IBK 그룹은 낙하산 및 공무원 재취업 단골 공공 금융기관임. 정치권, 금융관료, 행정부 출신 인사가 지속적으로 가는 금융기관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음. IBK은행의 경우 공사에서 잘 드러나지만, 자회사인 저축은행, 연금보험 등은 공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해 자회사로 가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sup>3)</sup>
- IBK는 대대로 기획재정부 등 낙하산 또는 관료출신 자리임(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지분 53.1%)<sup>4)</sup>
- (IBK저축은행) 조사자료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인 전략기획단

3) 탁지훈 기자. 「김해영 “IBK기업은행, 나눠먹기 낙하산 인사 태반”」. 브레이크뉴스 (2017.10.23.자 기사).

4) 김용갑 기자. 「낙하산 천국 기업은행…“나눠먹기식 보은인사 집중”」. 매일경제 (2017.10.23.자 기사).

- 장 또한 IBK저축은행 사외이사로 2년간(2016.11.21.~2017.11.20.) 재직했다가, 2019.8.에는 KB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으로 가는 경로를 보여줌
- (IBK연금보험) 기재부 4급 과장 출신이 2019.7.에 연금보험 금융연구소장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드러남

○ (한국자금융재(주) 대표이사)

- 한국자금융재(주)는 1996.7.18.에 설립되어 콜자금융거래의 중개 및 대차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8.11.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외국환중개업무를, 2000.2.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중개업무를 인가받아 영업 중인 만큼 기재부와 밀접함
- 역대 CEO의 절반 이상이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임<sup>5)</sup>. 조사자료에서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재정관리국장) 출신이 2019.12.에 대표이사로 가는 사례가 나타남

[표 12] 역대 한국자금융재(주) 대표이사 사장 이력 현황

직책	성명	취업 시기	주요 경력
1·2대 대표이사	황 △	1996.11.	대한종합금융 전문이사
3대 대표이사	이△△	2002.3.	기재부 지역경제·상공예산과장
4대 대표이사	김△△	2005.3.	국민은행 부행장, KB데이터시스템 사장
5대 대표이사	오△△	2007.4.	감사원 사무총장
6대 대표이사	김△△	2008.3.	기재부 본부국장
7대 대표이사	한△△	2011.3.	기재부 국장, OECD대표부 경제공사

5) 나경연 기자. 「‘금피아 밥그릇’ 전략한 자금융재…역대 CEO 절반이 ‘기재부 출신’」. 이투데이(2019.12.09.자 기사).

8대 대표이사	권△△	2013.5.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OECD대표부 공사
9대 대표이사	이△△	2016.8.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위 증선위
(현) 10대 대표이사	이△△	2019.12.	기재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재정관리국장

- 공공기관으로도 지정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재취업 단골 기관임<sup>6)</sup>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전무)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전무직은 본래 부회장 자리였으나,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기존 부회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부회장직을 없애고 전무급으로 직급을 낮추기로 한 바 있음. 기존에는 전무직에 퇴직한 금융감독원 출신이 주로 맡았으나, 2018. 05.에 기재부 과장급(4급)이 전무직에 재취업하였음
- 제10대 여신금융협회장(2013~2016년) 역시 기재부(재정경제부) 출신이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카드 업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함<sup>7)</sup>

○ (민간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 (The-K 저축은행 상근감사) 조사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3급 출신이 민간 저축은행으로 가는 사례도 나타남. 최근 저축은행의 보수가 일반 금융권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 기재부 출신이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보험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보증보험은 관피아 논란이 일었던 곳임<sup>8)</sup>

6) 나경연 기자. 「한국자금중개, 사장 꽃을 땀 “공공기관” 비리 터지면 “민간기업”」. 이투데이(2019.12.09.자 기사).  
7) 김수연 기자.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전무로 기재부 출신 필요했다」. 비즈니스포스트(2018.05.07.자 기사).  
8) 곽진산 기자. 「‘관피아’ 논란에 발끈한 노조…서울보증 차기 수장 인선 ‘시끌’」. 이투데이

-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고위공무원) 출신의 경우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로 가는 사례도 나타남. 한국기업데이터는 민영화되었음에도 사실상 대표는 기재부, 감사는 여당, 전무는 신용보증기금의 몫으로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알려짐. 고액 연봉이며, 국정감사나 공시 의무도 없어 기재부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자리 잡았음<sup>9)</sup>
-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 2020. 03. 기재부 정무직 출신이 사외이사로 가는 사례가 나타남

## 2 재벌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 ○ (상근 미등기임원)

- (삼성전자 상무) 기재부 3급의 경우 2016.5.에 삼성전자 상무로 재취업하여 2020년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승진하는 사례가 보임. 2016년은 삼성그룹의 경우 시내면세점 이슈가 있었던 상황으로 현재 재벌 면세점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던 때임. 면세점 제도는 기획재정부 담당으로 큰 이권을 가진 사업 중 하나임
- 당시 시내면세점의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특허제로 되어 있어 삼성, 롯데, SK, 등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이었음.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일어났던 사실이 밝혀졌음. 이로 인해 경쟁제한을 없애고, 가격경쟁(경매방식)으로 바뀌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었음.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발족하여 제도개선 논의를 했으나, 결국 큰 개선 없이 특허제 방식을 유지하도록 결론이 났음
-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기재부 4급 중 2016. 10.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로 취업 후 2018. 10. 삼성생명 상무로 이동하는 사례도 나타났음. 삼성생명

(2020.11.10.자 기사).

9) 김경찬 기자. 「한국기업데이터 사장 이호동 전 기재부 국장 내정」. 한국금융 (2021.03.30.자 기사).

은 삼성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고, 관련하여 보험업법 개정(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한 이슈가 붙어져 있던 상황임

- (LG전자 상무) 기재부 행정예산과장과 재정건전성관리과장 등을 거친 4급 중 2017. 08. LG전자 상무로 가는 사례도 나타남
- 상무로 재취업해있던 2017년에는 산업부와 기재부, 민간 공동으로 미국 LG 전자 세탁기 등 관세 대응을 하던 시기였음. 2018년에는 세이프가드 민관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확대를 하기도 함<sup>10)</sup>
- (두산 부사장) 2018. 08. 기재부 고위공무원(정책기획관) 출신이 두산그룹 경영연구원 부사장으로 가는 사례가 나타남. 이 인사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실장도 지냄. 두산그룹에서는 2010년 이후 기재부 출신을 대거 영입한 것으로 나타남<sup>11)</sup>. 최근 2020년에도 정부에서는 1조원 대 자금을 지원하는 등 두산그룹 살리기 움직임도 있음<sup>12)</sup>

#### ○ (사외이사)

- 기재부 정무직 출신이 금융자본 관련 연구원을 거쳐, 대기업 사외이사 (2019.4. 일동홀딩스, 2020. 03. 신한금융지주)로 가는 경로를 보여 줌
-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무력화되어,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의결을 하는 이른바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음. 아울러 지배주주와 회사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도 함. 기재부는 조세, 금융, 경제정책,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들과 밀접한 정책들이 많은 만큼, 사외이사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0) 권승현 기자. 「정부, 삼성·LG 세탁기 사들여 세이프가드 피해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2018.01.26.자 기사).

11) 한지웅 기자. 「두산그룹, 대한상의·두산인프라 출신 회장님 측근 자리 만들기 한창」. 인베스트조선(2021.03.08.자 기사).

12) 나유리 기자. 「두산에 1조원대 자금지원...두산인프라코어 채권 신속인수제 첫 수혜」. 메트로신문(2020.05.31.자 기사).

### 3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초빙연구원 및 연구위원)
  - 사례에도 나타났듯이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원 자리는 사외이사 등 다른 고위직 자리로 이동하기 전 거쳐 가는 자리로 알려짐<sup>13)</sup>

### 4 기재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가는 자리로 알려졌지만, 기재부 3급 이상 출신들이 임원으로 가는 자리이기도 함. 한국부동산원의 지분은 2021년 기준 기획재정부가 49.4%로 가장 많이 보유 하고, 이어 산업은행이 30.6% 등을 갖고 있었음. 때문에 지분에 의한 기재부 파워로 임원급 출신의 재취업 사례가 있음

[표 13]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직 기재부 출신 재취업 현황

직책	성명	재직 기간	주요 경력
상임이사 (부원장)	정△△	'16.12~'19.12	기재부 예산실 민자사업관리과장
상임이사 (부동산시장 관리본부장)	이△△	'21.06~ 현	기재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추진단 재정정보공개과장

- 이로 인해 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의 캐시카우로 불리고 있음. 지분에 따른 막대한 배당을 받기 때문임. 배당 성향은 2012년 20.3% 이후 꾸준히 확대돼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0.3%, 39.2%에 달했음<sup>14)</sup>

13) 조정현 기자. 「민간 썬크탱크 금융연구원, 고위관료 낙하산에 설왕설래」. MTN뉴스 (2021.07.16.. 자 기사).

○ (한국동서발전 사장)

- 발전공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의 재취업, 낙하산 자리로 알려졌지만,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 등이 있는 기재부의 파워로 인해 기재부 출신들이 임원으로 가는 사례가 나옴<sup>15)</sup>. 발전5사 노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 임명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함<sup>16)</sup>
- 한국동서발전 2016년 사장직에 기재부 고위공무원(사회예산심의관 및 대외경제국장 출신)이 재취업을 했음. 동서발전은 막대한 파이낸싱(PF)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재부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sup>17)</sup>

○ (한국남동발전 임원)

-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의 상임감사는 기재부 장관의 제청이 필요함. 따라서 남동발전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임
- 조사자료를 보면 2018.11. 한국남동발전(주) 비상임이사로 기재부 4급 출신이 가는 사례가 있음

---

14) 서미숙 기자. 「“한국감정원은 정부 캐시카우...순익 40% 정부에 배당”」. 연합뉴스 (2017.10.16.자 기사).

15) 이순혁 기자. 「기재부 ‘낙하산’이 산업부 산하 발전사까지 접수」. 한겨레(2016.01.26.자 기사).

16) 윤대원 기자. 「발전5사 노조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 임명 철회하라” 한목소리」. 전기신문(2021.02.04.자 기사).

17) 박홍용 기자. 「한국동서발전, 4억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발전사업 재원조달 성공」. 서울경제(2017.02.08.자 기사).

## 5 기타 취업심사 대상 외의 사례

### ○ (연초생산안정화재단)

- 기재부가 연초기금사업을 만들고 전관예우하는 사례
- 2021.10.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은 2008년 설립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sup>18)</sup>.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2007년 말까지 징수한 연초 안정화 기금 3,000억 원과 KT&G 주식출연 1,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이었으나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꺾린 한 갑당 5원을 추가 징수해 현재는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으로 기재부 출신들이 재취업하고 있음

[그림 2] 연초생산안정화재단 역대 이사장 현황

구분	성명	임기	주요 약력
제1대	노○○ (1932.11.23.)	2년 (’02.1.15~’04.2.12)	· 충북대 농과대학 학장 · 일담배심의위원회 위원장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제2대	성○○ (1941.10.22.)	11개월 (’04.2.13~’05.1.26)	· 농어촌특별위원회(청와대) 위원 · 농림부 양곡유통위원회 위원장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협동심의회 위원
제3대	강○○ (1936.08.13.)	3년 9개월 (’05.1.27~’08.10.30)	· 충북 농촌진흥청 경임 연구관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대학장 · 첨단 원예 기술개발센터 자문위원
제4대	전○○ (1949.11.19.)	3년 (’08.10.31~’11.10.30)	·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 서기관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1팀장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지원과장
제5대	이○○ (1952.12.10.)	3년 7개월 (’11.10.31~’15.5.7)	· 기획재정부 국고국 ·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 기획재정부 남북경협과장
제6대	권○○ (1957.10.26.)	3년 (’15.5.8~’18.5.7)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파견(4급) · 재정경제부 개발전략과장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제7대	백○○ (1959.12.28.)	3년 1개월 (’18.5.8~’21.6.7)	·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경리팀장 ·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회계결산과장 ·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장
제8대	조○○ (1964.02.23.)	3년 (’21.6.8~’24.6.7)	·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1등 서기관 ·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 남북경협팀장 ·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장

출처: 기재부

(자료: 양향자 의원실 제공)

18) 유일지 기자. 「양향자, “기재부 산하 ‘연초생산안정화재단’, 퇴직자 전관예우 통로”」. 세정일보 (2021.10.05.자 기사).

## 2. 산업통상자원부

### 1.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무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조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음

####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2. 취업기관 현황 및 직위

[표 14] 산업부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단위: 명)

취업 유형	취업 기관	계
협회·조합	대한상공회의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계량측정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38
시장형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등	10
민간기업	두산중공업, SK텔레콤, OCI, 한화에너지, 수원여객운수, SK하이닉스 등	22
법무·회계·세무법인	김장법률사무소	4
기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기술원,	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에너지공단 등	
<b>계</b>		<b>87</b>

- 산업부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 94명 중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음. 이 중 38명이 협회·조합으로 재취업하였음. 다음으로는 민간기업(22명), 기타(13명), 시장형 공기업(10명), 법인(4명) 순임.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사장이나 상임이사급으로 재취업하였음

[표 15] 산업부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단위: 명)

퇴직 전 직급	재취업 직위	계
정무직	사장(2), 사외이사(2), 회장(1), 상근부회장(1)	6
(일반직) 고위공무원	회장(2), 사장(4), 원장(1), 상근부회장(6), 총장(1), 고문(1)	15
연구관	상근부회장(1), 위원(1), 이사(1)	3
3급	원장(2), 대표이사(1), 부회장(3), 부이사장(1), 상무(2), 전무(1), 본부장(1), 감사(3)	14
4급	대표이사, 사장, 센터장, 부이사장, 부회장, 부사장, 본부장, 상무, 전무이사, 이사, 비상임이사, 사무국장, 단장, 임원, 위원, 실장, 팀장	49
<b>계</b>		<b>87</b>

※ 3급: 별정직3급상당 포함

- 산업부의 경우, 4급 출신 퇴직공직자도 대부분 부회장이나 상무로 재취업하였음

### 3. 주요 특징

#### 1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 산업부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면서 퇴직공직자들의 노후 보금자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2017. 04.에 출범한 수소관련 민관 협의체임(수소법 제22조 의거). 2020.10. 기준, 총 88개 회원사를 두고 있음
- 이 협의체의 초대/2대 단장 모두 산업부 출신임. 둘 다 퇴직한 지 2~3개월 내로 본 기관에 재취업한 것을 보았을 때, 단장직에 내정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직은 앞으로도 계속 산업부 출신 퇴직공무원의 자리 대물림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16]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현황

이름	퇴직 전 부서	퇴직 시기	취업 시기	주요경력
신△△	개발지원2팀 팀장	2017년 2월	2017년 5월	지식경제부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지원2팀 팀장 등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초대 단장	재취업임기 3년 ('17.5.~'20.9.)	
이름	퇴직 전 부서	퇴직 시기	취업 시기	주요경력
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	2020년 8월	2020년 10월	산업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실 및 가스산업과

	보과장			가스공사총괄, 국표원 예산홍보팀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과장 등
	취업기관	취업 직위	재취업임기	
	수소융합얼 라이언스추 진단	2대 단장	3년	

- 2020.7. 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 기관'으로 본 기관을 선정하였음. 또한 2021.3. 산업부는 본 기관에 '수소 혁신테스크'를 출범하여 수소 투자기업 밀착 지원을 선포함

[표 17] 2021년 정부의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계획

(단위: 원)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021 예산: 32억 5천만 원		
세부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수소전문기업 지원 및 국제협력사업	△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 수소 국제협력 사업(양자, 다자)	4억
수소산업 통계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	△ 수소전문기업 생태계 조사 및 수소산업통계 조사 △ 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용	2억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포털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 △ 종합정보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	22억
수소경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사업	△ 국민참여이벤트(공모전, 서포터즈, 수소の日 등) △ 홍보 콘텐츠 개발·제작, 주민설명회 지원 등	4억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지원	5천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수소경제 전담기관 사업계획>)

- 2021.3.부터 수소출하센터 구축 사업과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진행중임
-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 개편(2021.9. 개정안 시행)하여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과 그 하부조직으로 2관 4과를 신설하였음. 그 중 '수소정책관'도 신설하였음. 따라서 앞으로도 본 기관에 대한 산업부의 지원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 (탄소산업 관련 기관 신설)

- (탄소나노산업협회) 2020.9. 탄소나노산업협회가 창립되었음.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전무의 자리에 전 산업부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이 재취업하였음(취업제한심사 미 대상자)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2021.2.에 탄소소재법(2020.5.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면서, 산업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승격되었음
  - \* 진흥원은 출범 반년 만에 임금인상 차별과 조직개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음<sup>19)</sup>
  - \* 2021년 정부 예산은 310억 원임. 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 예산으로 연간 국비 700억원 이상 투입이 예상됨
  - \* 진흥원 이사회 이사로 최△△ 현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들어가 있음
- (탄소소재융복합얼라이언스) 2021.4.에 산업부는 탄소소재융복합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음. 이는 수요산업 진흥·유망품목 워킹그룹과 탄소중립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얼라이언스 워킹그룹 참여기업 중 하나인 (주)한국화이버에 2020.12. 이△△ 전 산업부 전자전기과 과장이 대표이사로 재취업하였음

---

19) 강동현 기자. 「임금인상 차별·조직개편 논란…출범 반년 만에 내홍 휩싸인 탄소산업진흥원」. 서울경제(2021.08.25.자 기사).

## 2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 ○ (협화·조합 등의 부회장 등)

- 취업유형별 기관 수를 보면 87명의 재취업자 중 38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협회 조합 등으로 취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43.6% 달함.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협회는 민원창구로 전락하거나 관경유착의 고리가 될 우려가 있음
- **[업무 위탁]** 2018.4. 이△△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전 자유무역협정 정책관) 이 재취업해있는 기간인 2018.5. 산업부는 수출입 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sup>20)</sup>한 사례가 있음. 2021.4. 이△△의 후임으로 변△△ 전 산업부 정책기획관이 동일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함
- **[지원대상 선정]** 2018.4. 이△△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상근부회장(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재취업한 기간인 2020.7. 산업부는 해당 협회를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고도화 기반 조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음
- **[예산 확대]** 2018.6. 최△△ 한국LPG산업협회 상근부회장(전 에너지산업 정책관실 석탄산업과 과장) 재취업한 기간인 2018.9. 산업부가 LPG 배관망 구축사업 예산이 확대되기도 했음. 다만, 산업부는 증액 사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농어촌 마을 주민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증액하였다는 보도(2018.9.13. 산업부 보도 ‘LPG 배관망 구축·보급사업, 해당 지역 주민만족도 우수’)가 있음
- **[예산 확대]** 2019. 08. 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전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과장)가 재취업함. 2020. 11. 정부는 ‘섬유패션산업 한국판뉴딜’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음
- **[정부 T/F 참여]** 2020. 05. 박△△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원장)이 재취업함. 취업기간인 2020.7. 산업부는 ‘해외자

20) 산업부, <수출입공고 개정안> (2018.05.08.).

원개발 혁신 전담조직(T/F)을 출범하였음. 박△△는 해당 T/F의 ‘자원생태계’ 분과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음

- **[협무 협약]** 2020.6. 정△△ 한국시멘트협회 전무이사(전 정보보호담당관실)가 재취업함. 취업기간인 2021.2. 산업부와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그린 뉴딜위원회’를 출범하였음. 또한, 2021.6. 산업은행은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에 5년간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국시멘트협회 및 시멘트 업체 7곳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 3 산업부 관련 기관 재취업

#### ○ (공사/공단 등의 재취업)

- 공사/공단 등은 설립 근거나 재원 등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현실임

[표 18] (2016~2021.08.) 심사대상자 중 산업부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취업 기관명	직책	성명	취업 시기	주요 경력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오△△	‘16.10	산업부 울산자유무역관리원장
	상임이사	김△△	‘19.9	산업부 부산 제조혁신기반과장(파견)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이△△	‘16.11	산업부 제1차관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 본부장	△△△	‘16.11	산업부 4급
	본부장	△△△	‘20.6	산업부 4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이사	김△△	‘17.3	산업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원장
	상임이사	정△△	‘21.2	산업부 비상안전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 과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	‘17.12	산업부 제1차관
	사장	채△△	‘19.7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 경제주석실 산업정책비서관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박△△	‘18.2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상임감사	김△△	‘21.8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정△△	‘18.1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송△△	‘18.4	산업부 울산자유무역관리원 원장
(주)강원랜드	기획관리 본부장	고△△	‘18.10	산업부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송△△	‘19.10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한국남부발전(주)	사장	이△△	‘21.3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21.5	산업부 제1차관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 이사	주△△	‘21.6	산업부 대불자유무역지원관리원 원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첨단의료 기기개발 지원센터 장	홍△△	‘21.6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원장
FITI시험연구원	원장	김△△	‘21.10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 등)

-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의 제17대 사장인 채△△의 임명과정에서 산업부 개입 의혹이 있었음. 지난 2018.11.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장 공모를 냈으나, 산업부에서 임추위 후보 재추천 공문을 보냄. 이후 가스공사는 2019.4.에 재공모를 내어 채△△이 선임된 것임. 즉, 10개월간 공석이던 한국가스공사 사장 자리는 채△△이 후보 적격 요건을 갖춘 후 재선임(내정) 된 것을 의미함<sup>21)</sup>

21) 김아사 기자. 「[단독] 가스공 사장 채희봉 앞치러…‘산업부 화이트리스트’ 의혹」 조선일보 (2021.02.18.자 기사).

- (☞강원랜드 기획관리본부장) 산업부 4급 출신이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한 후, 임기였던 2021.3. 폐특법 개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 (2021.3.2. 국무회의 의결)되었음. 주요 골자는 ▲ 강원랜드 2045년으로 연장, ▲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이익금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의 13%’로 조정(증액), ▲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설임

\*신설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초대 사장 역시 산업부 출신 인사임(산업부에서 통상정책국장과 산업기반실장을 두루 거친 황△△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독식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4년제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교로, 2017년 산단공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음. 대학 설립 때부터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총장직을 독차지해왔음

[표 19]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역대 총장 현황

직책	성명	취업 시기	주요 경력
제1대 총장	김△△	1997.02	공업진흥청장
제2·3대 총장	최△△	1999.1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 차관
제4·5대 총장	최△△	2007.09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제6대 총장	이△△	2014.02	지식경제부 제2차관
제7대 총장	안△△	2018.03	지식경제부 제1차관
제8대 총장	박△△	2019.12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 실장

\*박△△ 제8대 총장의 경우, 선임 당시 교육 비전문가 산업부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이 있었음<sup>22)</sup>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8/7R6TD2OJXVA7DEZHA7FK7KOVY/](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8/7R6TD2OJXVA7DEZHA7FK7KOVY/)

22) 김복만 기자. 「‘사립대’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관피아 회전문’ 비판」. 국방신문 (2019.12.13.자 기사).

<https://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6>

### 3. 국토교통부

#### 1. 국토교통부의 사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정부조직법」 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음

#####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및 주택·건설·철도·항공정책 등을 관장하고 있어, 관련 기관 및 협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2. 취업기관 현황 및 직위

[표 20] 국토부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단위: 명)

취업 유형	취업 기관	계
협회·조합	한국감정평가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교통투자평가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해외건설협회 등	41
시장형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4
민간기업	한국복합물류, 이레일, KR산업, 신영건설, 한국주택시설관리, 용마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17

	등	
법무·회계·세무법인	-	0
기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철도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감정원 등	24
<b>계</b>		<b>86</b>

- 국토부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 120명 중 86명이 취업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음. 이 중 41명이 협회·조합으로 진출하였음. 다음으로 기타 24명, 민간기업 17명, 시장형 공기업 4명 순임

**[표 21] 국토부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단위: 명)

퇴직 전 직급	재취업 직위	계
정무직	회장(2), 사장(2), 비상임이사	5
고위공무원	전무이사, 원장, 대표이사, 상근부회장, 사장, 이사장, 부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 등	16
3급	상근부회장(2), 부사장(1), 상임이사(1)	4
4급	상근부회장, 상무, 고문, 사무처장, 이사장, 사무국장, 전무이사, 감사, 본부장, 부사장 등	45
5급	부사장(3), 일반계약직(1), 부장(1)	5
6급	운영관리소장, 사원, 상무	3
7급	이사, 팀장,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운전원, 주임연구원, 사원, 단순노무직	8
<b>계</b>		<b>86</b>

- 국토부의 경우, 장·차관급인 정무직 출신은 주로 유관 협회나 공사의 대표급으로 갔음. 국장급인 고위공무원들은 유관 협회의 이사장급,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등으로 간 경우가 다수임. 과장급인 3급/4급 역시 임원급으로 재취업하였음

### 3. 주요 특징

#### 1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표 22] 국토부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취업 기관명	직책	성명	재임 기간	주요 경력
전국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성△△	96.08~99.08	건교부 항공국 국장
	이사장	김△△	99.08~02.08	건교부 물류심의관
	이사장	김△△	02.08~05.12	건교부 육상교통국 국장
	이사장	박△△	06.02~09.08	건교부 광역철도과장
	이사장	이△△	09.09~12.09	국토부국토해양발전연구 팀 부이사관
	이사장	조△△	12.10~16.08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이사장	박△△	16.09~19.11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이사장	이△△	19.12~ 현	국토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	조△△	06.11~09.10	건교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
	전무이사	이△△	09.11~12.10	국토해양인재개발원 혁신교육과장
	전무이사	김△△	12.11~15.11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 친수공간과장
	전무이사	김△△	16.01~18.12	국토부 부산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전무이사	오△△	19.01~ 현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국가철도공단 (구. 한국철도시 설공단)	이사장	이△△	06.01~08.07	국토부 물류혁신본부장
	이사장	조△△	08.08~11.08	철도공단 부이사장
	이사장	김△△	11.09~14.8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이사장	강△△	15.02~18.01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이사장	김△△	18.02~21.01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해외건설협회	이사장	김△△	21.02~ 현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회장	홍△△	88.08~95.03	건설부 해외국장
	회장	김△△	95.04~01.01	건설부 차관→ 주택공 사장
	회장	강△△	01.02~03.06	건교부 차관
	회장	유△△	03.08~06.08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회장	이△△	06.09~09.02	상공회의소 부회장
	회장	이△△	09.02~12.02	국토부 제2차관
	회장	최△△	12.02~15.03	건교부 차관
	회장	박△△	15.04~18.07	국토부 제1차관
한국부동산원	회장	이△△	18.07~21.08	서울시립대 교수
	회장	박△△	21.08~ 현	국토부 차관
	원장	손△△	95.03~98.03	건교부 차관
	원장	강△△	98.03~00.08	건교부 차관
	원장	이△△	00.09~01.03	제17대 국회의원
	원장	이△△	01.04~01.11	호남대 총장
	원장	강△△	01.12~04.12	국무조정실
	원장	장△△	04.12~07.12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원장	황△△	07.12~11.01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장	권△△	11.01~14.03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원장	서△△	14.03~17.03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원장	김△△	18.02~21.02	한국감정원
	원장	손△△	21.02~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상임이 사	박△△	16.01~17.12	경기도 교통국장	
상임이 사	이△△	19.05~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1970년 8월에 창립된 국토부 유관 단체임. 1~4대 이사장을 제외하고, 5대 이사장부터 거의 연속적으로 국토부 출신 관료들이 독차지해오고 있음

○ (한국주택협회 전문이사)

- 한국주택협회 전문이사직 역시 국토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이 빈번한 자리임. 전문이사뿐만 아니라 상근부회장직도 국토부 출신 관료의 몫으로 알려져 있음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국가철도공단은 2004년 철도청 건설 부문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하며 출범하였음. 이후 2020.9.에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였음
- 2014년 '철피아' 논란에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은 '청렴 거둬내기' 행사를 시행하는 등 철피아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지만<sup>23)</sup>, 이후 이사장도 버젓이 국토부 출신 관료가 재취업했음. 또한 국가철도공단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설계 용역을 몰아주는 '일감 나눠먹기'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남<sup>24)</sup>

○ (해외건설협회 회장)

- 해외건설협회는 1976년 설립하여 해외 건설활동 지원을 하는 국토부 유관 단체임. 일부를 제외하고, 국토부 차관급 퇴직관료들이 회장직을 맡는 것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음

23) 이정우 기자. 「'철피아' 오명 걷고 새 출발 다짐!」. YTN(2014.12.31.자 기사).

24) 김영일 기자. 「[뒤끝뉴스]국가철도공단의 철피아 관행...퇴직자들 재직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지속?'」. 더 퍼블릭(2021.05.04.자 기사).

- ◇ 홍△△ : 건설부 해외국장 → 해외건설협회 회장 → ('95.08)서울시 행정2부시장
- ◇ 김△△ : 건설부 차관 → 한국주택공사 사장 → 해외건설협회 회장 → ('01.)코람코자산신탁 대표 → ('10.)이지스자산운용 대표
- ◇ 강△△ : 건교부 차관 → 해외건설협회 회장 → ('03.06~'04.12)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05.03)우림건설 계열사 주&지 회장
- ◇ 이△△ : 국토부 제2차관 → 해외건설협회 회장 → ('12.05)제19대 부산 영도구 국회의원
- ◇ 최△△ : 건교부 차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 대한주택공사 사장 → 해외건설협회 회장
- ◇ 박△△ : 국토부 제1차관 → 해외건설협회 회장 → 숭실대 겸임교수

○ (한국부동산원 원장/상임이사)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 등을 하는 국토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임. 한국부동산원은 1995년 제6대 원장부터 대부분 국토부 출신 관료들이 원장직을 독차지해왔음

- ◇ 제11대 장△△ :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 한국부동산원 원장 → ('10.03)☞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표이사
- ◇ 제12대 황△△ :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부동산원 원장 → 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
- ◇ 제13대 권△△ :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 한국부동산원 원장
- ◇ 제14대 서△△ :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 카이스트 초빙교수 → 한국부동산사업학회 회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한국부동산원 원장 → ('20.03)주택산업연구원 임시대표

\* 전 제14대 원장인 서△△의 경우, 2016.12. 그의 '모교(母校)'를 운영하는 호남기독교학원에 한국감정원이 5천만 원을 기부하여 '셀프 기부' 논란이 있었음. 이후 2017.2. 여직원 성희롱으로 불명예 퇴임을 하였음. 퇴임 이후에도

주택산업연구원장 단독 후보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반복해서 유관기관 임원 직을 전전하고 있음. 2020.3.부터 현재 주택산업연구원 임시대표를 수행중

## 2 국토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장 등)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6년에 설립된 국토·건설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 국토부 출신 관료를 영입하고, 본 연구원의 출연금 배정은 고공행진하고 있음
  - (예산증액 사례) 2016년 12월에 국토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출신 관료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장으로 취업하였음. 또한 2020.1.에는 국토부 4급 출신 관료가 본 연구원 본부장으로 재취업하였음. 본 연구원에 국토부가 지원하는 R&D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음

[표 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부 출신 재취업 현황 (단위: 백만 원)

년도	직책	성명	재취업 시기	주요 경력	R&D 예산
2016	-	-	-	-	46,491
2017	건설정책 연구소장	박△△	'16.12.	국토부 예산국토관리 사무소장	48,848
2018	제14대 원장	한△△	'18.01.	국토부→연세대 교수→ 본 연구원 원장	51,944
2019	-	-	-	-	54,711
2020	본부장	△△△	'20.01.	국토부 4급	55,365
2021					63,330

\* 현재 제15대 원장인 김△△은 첫 공채출신의 내부승진(선임연구위원) 사례임

- (한국골재협회 상임부회장)
  - 한국골재협회는 1993년 설립한 「골재채취법」에 의거하여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골재업자 이익단체임. 한국골재협회의 경우 국토부 과장급 출신이 해당 협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부회장직으로 가는 사례가 나옴

[표 24] 국토부 출신 한국골재협회 재취업 현황

직책	성명	재취업 시기	주요 경력	
상임 부회장	유△△	1993.07	건설부 비상계획관	
	...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상임부회장을 두지 않았음*			
	임△△	2011.01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과장	
	△△	2013.12	국토부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심△△	2017.01	국토부 항공정책실 항공자격과장 → 골재협회 부회장 →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원장	
이△△	2020.02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 (재단설립 허가 및 원장 선임 사례) 2017.1.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 항공자격과장이 한국골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취업하였음. 이후 2020.8.에 국토부는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설립을 허가하였고, 해당 낙하산 인사는 본 연구원의 원장으로 선임되었음
- (바닷모래 채취연장 등 특혜 사례) 현행 「골재채취법」상 골재자원 수급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바닷모래 채취를 여러 차례 연장해가며 허가하고 있음. 그러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해양환경 훼손 및 수산자원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는 골재협회의 관피아 낙하산 인사, 서해 바다 모래 채취 조건 충족 없이 강행, 최고위급 인사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허가 강요, 4대강 사업 관계자 연장 관여 등의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sup>25)</sup>. 2017년, 최인호 의원이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

25) 김병곤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 27일 ‘골재채취법’ 개정 대표발의」. 어업IN수산 (2017.06.22.자 기사).

단지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의안번호 2007613)

\* 특히, 2010.9.에 남해 EEZ골재채취단지 지정 1차 변경 시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변경됐음. 이후 2011.11. 임△△ 전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과장이 해당 협회 부회장으로 취임했음. 즉, 관수용으로만 이용되던 바닷모래가 민수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상임부회장에 국토부 낙하산이 내려갔다는 것을 보아, 정부와 골재업계 간 유착관계로 분석됨. 이후 남해 EEZ의 모래채취량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옴<sup>26)</sup>

- (시행령 개정 사례) 2020.2. 뒤를 이어 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이 한국골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취업하였음. 이후 2020.12. 「골재채취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단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하향조정되었음

○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이하 ‘㈜동명’))

- (사업 수주 사례) ㈜동명은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용역업체임. 2019.6. 국토부 3급 공무원이 ㈜동명의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음. 2019년에 ㈜동명은 국토부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5개 주요 철도 입찰에서 삼보·유신·서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4개 사업을 수주하였음이 확인됨<sup>27)</sup>

[표 25] 2019년 ㈜동명이 낙찰된 국토부 철도사업 현황

사업명	컨소시엄	구성 기업
남부내륙철도	삼보 컨소시엄	동명, 서현, 유신
충북선 고속화 사업	동명 컨소시엄	삼보, 서현, 유신
평택~오송 2복선	서현 컨소시엄	삼보, 동명, 유신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유신 컨소시엄	삼보, 동명, 서현

26) 김동호 기자. 「바닷모래채취, 전형적인 외부불경제」. 농수축산신문(2017.03.08.자 기사).

27) 조항일 기자. 「삼보-유신-동명-서현 컨소시엄, 국토부 철도 입찰 ‘짜슬이」. 엔지니어링데일리(2019.11.13.자 기사)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상임부회장)
  - (권한 이양 사례) 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이 2020.5. 해당 협회 실무진인 상임부회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음. 이후 2021.2.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는 내용임

### 3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낙마→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이사장)
  -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의 경우, 2018.5. 당시 한국공항공사의 차기 사장 내정 사실이 알려지자 공사 노조의 반발 등으로 낙마하였음. 이후 2019.1.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업승인을 받아 재취업하였음
-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 취업제한→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
  - 전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의 경우, 2018.11.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음. 이후 2019.1.에 다시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음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취업제한→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근부회장)
  - 전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의 경우, 2019.6.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직에 취업제한결정을 받았음. 이후 2019.12. 건축사공제조합 상근이사

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2020.6.에 다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음

## 4 심사 대상 외 사례

### ○ (주)SR 대표이사)

- 2017.3.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출신이 퇴직 보름 만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주)SR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취임 당시 (주)SR은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었음. 이후 2018.2.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해당 인사는 2018.5. 코레일-SR 통합 반대로 사퇴하였음. 이후 (주)SR 대표이사직은 2018.8.에 전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본부장과 2021.12.에 국토부 출신인 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이어받았음

## 4. 중 소 벤 처 기 업 부

### 1.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정부조직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음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2. 취업기관 현황 및 직위

[표 26] 중기부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단위: 명)

취업 유형	취업 기관	계
협회·조합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금융연구원	7
시장형 공기업	-	0
민간기업	토니모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SK증권	3
법무·회계·세무법인	법무법인 율촌	1
기타	경북테크노파크	1
계		12

- 중기부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 14명 중 12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음. 이 중 7명이 협회·조합으로 진출하였음. 다음으로 민간기업 3명, 법인 1명, 기타 1명 순임

[표 27] 중기부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단위: 명)

퇴직 전 직급	재취업 직위	계
정무직	사외이사(2), 비상임연구위원(1)	3
별정직 고위공무원	전문위원(1)	1
고위공무원	상근부회장(3)	3
3급	상근부회장(1)	1
4급	상근부회장(2), 원장(1), 상무보(1)	4
<b>계</b>		<b>12</b>

- 중기부의 경우, 대부분 유관 협회의 상근부회장(6명)으로 재취업하였음.  
중기부의 업무위탁과 예산지원을 받는 곳들임. 그 밖에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상무보 등의 임원직으로 가는 사례가 있음

### 3. 주요 특징

#### 1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표 28] 중기부 산하·감독기관 낙하산 현황

취업 기관명	직책	성명	재임 기간	주요 경력
중소기업융합 중앙회	상근부회장	심△△	16.07~19.**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상근부회장	이△△	20.01~ 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한국벤처캐피 탈협회	상근부회장	이△△	14.02~17.02	광주전남중기청장
	상근부회장	오△△	17.07~20.07	중기청 대변인

	상근부회장	김△△	20.09~ 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실장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전△△	06.01~2009.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상근부회장	△△△	2009.~2011.	-
	상근부회장	박△△	11.04~201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상근부회장	손△△	15.**~17.**	중기부→중진공 감사
	상근부회장	이△△	17.04~18.03	중기부→한국벤처캐피탈협 회 상근부회장
	상근부회장	김△△	19.11~21.0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 청 청장
중소기업 중앙회	상근부회장	장△△	06.08~09.04	중기청 차장
	상근부회장	송△△	09.04~17.02	중기청 차장
	상근부회장	최△△	17.02~17.07	중기청 차장
	상근부회장	신△△	18.03~18.08	공정위 부위원장
	상근부회장	서△△	18.12~ 현	중기부→민주당 수석전문위원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1994년 설립된 단체임. 여느 중기부 유관 협회처럼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직 역시 중기부 출신의 단골 재취업 처가 되었음. 2016.7.에는 중기부 전북지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출신이, 2020.1.에는 중기부 충북지청장 출신이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였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989년 산업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발족했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상근부회장은 협회 업무 총괄 및 대외업무를 담당함

◇ 오△△ : 중기청 대변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 ('21.07)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 이△△ 전 상근부회장 재직 당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중기부로부터 중소기업 R&D 예산 명목으로 626억 원을 지원받았음

○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 벤처기업협회는 1995년 설립된 벤처기업 단체임. 벤처기업협회의 상근부회장 자리에는 중기청(현 중기부) 국장급들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음

◇ 손△△ :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 →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 ('17.09)창업진흥원 비상임이사  
◇ 이△△ :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 ('18.03)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부 대표 유관단체로, 중기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 승인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명함. 실무를 담당하는 상근부회장직은 1973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관피아들이 자리를 대물림 해왔음  
- 특히 2003년부터 중기부 1급에 해당하는 관료가 자리를 이어왔음. 이들은 상근부회장을 거친 후 대학이나 유관 협회, 기업 등의 임원으로 다시 재취업하는 경향을 보임

◇ 장△△ : 중기청 차장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 ('09.04)중소기업연구원 원장 → 한남대 산학협력부총장 → ('14.10)삼성중공업 사외이사  
◇ 송△△ : 중기청 차장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 ('18.04)중소벤처무역협회 초대 회장  
◇ 최△△ : 중기청 차장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 ('17.07)중기부 초대 차관 → ('19.08)가천대 석좌교수

\* 최△△ 전 상근부회장의 경우, 2019.3. IBK투자증권에 아들을 채용비리로 입사시킨 논란이 있었음

\* 신△△ 전 상근부회장의 경우, 공정위에 재취업 비리로 구속되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함(2018.8. 대법원 무죄판결)

\* 서△△ 현 상근부회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인사 내정으로 중기중앙회 노조가 '코드인사'라며 반발하는 등 낙하산 논란이 있었음

○ (그 밖의 산하기관)

- 그 외에도 여성벤처협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대중소협력재단 등 중기부 산하·유관기관의 요직을 중기부 출신 관료들이 줄지어 독차지하는 양상임

## 2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직은 대외적으로는 연구원들의 연구 보조 및 용역,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임. 하지만, 중기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모피아 의혹이 끊이지 않는 곳임. 전 중기부 장관 역시 2019.4. 퇴임 후 같은 해 12월 심사를 통과하여, 2020년 1월에 한국금융연구원의 비상임연구위원으로 갔음

## 3 중기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 (토니모리 사외이사)

- 2017.7.에 퇴직한 전 중소기업청장이 2018.3.에 토니모리 사외이사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음

- 토니모리는 2006.7.26.에 설립된 주식회사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2021. 기준 건강기능식품판매를 하는 에이투젠을 포함한 9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음

- 이후 2020.1.15.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에 따르면 '10대 핵심과제'로 그린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활성화를 선정하였음. 맞춤형 혁신식품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방안도 포함하고 있음

**[그림 3]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중**

<p><b>9 그린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활성화</b></p> <p>○ 고령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 추세에 따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기술 활성화 필요</p> <p>▷ 농·식품산업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명자원 확보,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 추진</p> <p>- 맞춤형 혁신식품*, 동·식물 치료제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심사규정 효율화·기업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방안 검토</p> <p>* (예) 차세대 대체식품, 메디푸드, 고령친화제품, 건강기능성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농림수산 마이크로바이옴 등</p> <p>- 그린바이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와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바이오 제품 인증제 도입·개선 및 공공부문 우선 구매제 도입 검토</p> <p>☞ 「그린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 마련 (식품·자원바이오반)</p>
---

(출처: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2020.1.15.))

- 주△△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직후이기는 하나, 2020.6.에 (주)토니모리의 자회사이자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개발 기업인 에이투젠이 질병 예방 미생물 개발을 위해 농림부·중기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국책과제 선정업체로 지정되었음<sup>28)</sup>

28) 김민석 기자. 「토니모리 자회사 에이투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국책과제 선정」 COSINKOREA. (2020.06.09.자 기사).

## 5. 공정거래위원회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음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3. 29.>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 또한 공정위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감독기관에 각종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시키거나 지원 및 감독하고 있음

## 2. 취업기관 현황 및 직위

[표 29] 공정위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단위: 명)

취업 유형	취업 기관	계
협회·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	2
시장형 공기업	-	0
민간기업	LG경영개발원, 만도, 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GS리테일, CJ텔레닉스, 쿠팡, 롯데쇼핑 등	19
법무·회계·세무법인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케이씨엘, 김장법률사무소	3
기타	학교법인 경희학원	1
<b>계</b>		<b>25</b>

- 공정위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 28명 중 25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음. 이 중 19명이 민간기업으로 진출하였음. 법무·회계·세무법인 3명, 협회·조합 2명, 기타 1명 순임

[표 30] 공정위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단위: 명)

퇴직 전 직급	재취업 직위	계
정무직	상근부회장(1)	1
3급	고문(1), 자문역(1), 사외이사(3), 상근고문(7), 비상임고문(4), 비상근감사(1), 상무(2), 위원(2), 이사장(1), 임원(1)	21
5급	전문위원(1)	1
<b>계</b>		<b>25</b>

- 공정위의 경우, 주로 장·차관급인 정무직 출신은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였음. 그 외 퇴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의 임원급으로 포진해 있음

### 3. 주요 특징

#### 1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표 31] (2008~2021.8.) 공정위 산하·감독기관 낙하산 현황

취업 기관명	직책	성명	재임 기간	재취업 당시 주요 경력	연봉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김△△	08.8~10.12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132
	부원장	장△△	11.1~13.12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163
	부원장	임△△	14.2~15.11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156
	부원장	김△△	16.1~18.1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110
	부원장	장△△	19.3~21.3	공정위 상임위원	150
	원장		21.7~ 현		145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원장	신△△	08.2~12.1	공정위 심판관리1담당관	130
	원장	김△△	12.1~15.1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159
	원장	배△△	15.3~18.3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157
	원장	신△△	18.3~21.3	공정위 대변인	169
	원장	김△△	21.3~ 현	공정위 상임위원	146
	부원장	박△△	14.1~17.1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	126
	부원장	장△△	17.1~20.1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136
한국공정경쟁 연합회	부원장	박△△	20.4~ 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118
	회장	한△△	07.3~10.2	공정위 제도개선기획단장	-
	회장	김△△	10.3~13.2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
	회장	김△△	13.3~14.1	공정위 상임위원	-
	회장	최△△	16.3~ 19.2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
한국상조 공제조합	회장	신△△	19.3~ 현	공정위→ 연세대 교수 등	-
	이사장	김△△	10.12~13.12	공정위→한국소비자원	184
	이사장	장△△	13.12~16.12	공정위→한국소비자원	223
	이사장	박△△	17.1~18.10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228

	이사장	장△△	20.06~21.8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무급
상조보증 공제조합	이사장	윤△△	13.1~14.6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부단장	113
	이사장	신△△	15.1~18.1	소비자원 상임위원	168
	이사장	이△△	18.1~21.1	한국소비자원	173
	이사장	김△△	21.11.~ 현	대전국세청장	-
직접판매 공제조합	이사장	남△△	09.3~12.3	공정위 주미대사관경쟁협력관	160
	이사장	김△△	12.3~15.5	공정위 주미대사관경쟁협력관	160
	이사장	여△△	15.5~18.5	대통령 경호실장	158
	이사장	오△△	18.9~21.9	감사원 사무총장→ 광고세무법인 고문	-
	이사장	정 △	21.10.~ 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특수판매 공제조합	이사장	신△△	08.4~10.4	공정위 상임위원	165
	이사장	김△△	10.4~11.10	공정위 부위원장	165
	이사장	신△△	12.2~14.12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140
	이사장	고△△	14.12~17.11	동아대 로스쿨 교수	-
	이사장	유△△	17.11~20.11	공정위→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
	이사장	여△△	20.12~ 현	대통령 경호실장→직판조합	-

(자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2008~2016, <https://freedebt553.tistory.com/340>), 공정위(2016~2021.8.))

- 공정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음. 또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공정위의 산하·감독기관의 재취업 관행은 예전부터 계속 국감 등에서 지적을 받아 왔으나 개선된 바가 없음

####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 소관 부처가 재정경제부에서 공정위로 바뀐 이래,

부원장은 모두 공정위 출신이 맡아 온 재취업 단골 기관임. 특히 최근에는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인 자가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거쳐 최초로 공정위 출신 원장이 되었음

- 한국소비자원의 부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임명함. 부원장직은 취업 제한기간 동안 법망을 잠시 피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음. 부원장 임기가 끝나면 이들은 다시 민간 기업이나 단체로 거처를 옮겼음. 일부는 부원장 재직 중 조합에 자리가 나면 임기도 채 마치지 않은 채 중도사퇴하면서 까지 자리를 옮기고 있음

◇ 김△△ :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10.12~'13.12)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 장△△ :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13.12)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 (현)법률사무소 공정 고문  
 ◇ 김△△ :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19.10.~)저축은행중앙회 감사, ('20.06.~) (☞)미코세라믹스 비상근감사  
 ◇ 장△△ : 공정위 상임위원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21.07.~) 한국소비자원 원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부원장/상임이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에 출범한 공정위의 주요 산하기관임. 조정원의 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이 임명함. 초대 원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정위 출신의 재취업 단골 처가 되어왔음

◇ 신△△ : 공정위 심판관리1담당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 법률사무소 공정 고문  
 ◇ 김△△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한화갤러리아 상근고문  
 ◇ 배△△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21.03)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 신△△ : 공정위 대변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KDI 초빙연구위원

\* 2014년, 조정원은 교육훈련비 1807만여 원 중 1300만 원(71.9%)을 김 △△ 전 원장의 ‘CEO 인문학 과정 수강료’로 사용했음<sup>29)</sup>

- 더불어 부원장, 상임이사 자리도 공정위 출신 퇴직 관료들이 독식 중임

###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기업의 공정거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단체로 1994년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음. 본 협회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을촌, 태평양 등 법무법인을 포함하여 수백 개 기업, 법무법인, 경제단체 등이 가입해있는 단체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회장직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정위 출신 퇴직 관료가 자리를 대물림 해왔음

◇ 한△△ : 공정위 제도개선기획단장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 ('10.09~'13.10) 제주테크노파크 초대 원장  
◇ 김△△ : 공정위 상임위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 ('14.01) 공정위 부위원장  
◇ 최△△ :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장 → 한화갤러리아 전무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본 협회는 2017년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로펌 등으로부터 8억 원 가량의 회비를 걷어 공정위와 대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 심받고 있음<sup>30)</sup>

### ○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2010.9. 공정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음. 초대 이사장인 정△△를 제외하고 2대 이사장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공정위 출신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

29) 구교형 기자. 「‘우리 교육비, 원장님이 다 썼네’」. 경향신문(2015.07.23.자 기사).

30)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2018)

- **(일감 몰아주고 재취업)** 2016년 한상공은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公正)’에 6건의 상조관련 법률대리를 모두 맡기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해온 사례가 있음<sup>31)</sup>. 특히 장△△ 전 이사장의 경우, 이사장 퇴임 후 해당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들어갔음

◇ 김△△ :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 법무법인 세종 행정사 → ('19.10)대한상조산업협회 고문
◇ 장△△ :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 단장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고문
◇ 박△△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공정거래/보험 고문단으로 정△△ 전 공정거래위원장, 장△△ 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공정위 퇴직 관료가 자리하고 있음(2021.11. 기준)

- **(교육훈련비 예산 개인적 용도 집행)** 2018년에는 임직원 교육비 지출액의 90%(883만 원 중 800만 원 이상)를 박△△ 전 이사장의 개인교육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음<sup>32)</sup>. 이후 해당 이사장은 중도 사퇴하였음
- 2020.02. 한상공은 박△△ 전 이사장의 고액 연봉 수령이 국감에서 논란이 되자,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였음. 이에 지난 2021.8. 장△△ 이사장이 경영성과급 미지급 문제 등으로 중도 사퇴하면서 현재 이사장 자리는 공석임

31) 이선미 기자. 장레IN뉴스. (2018.10.19.자 기사).

<http://www.sjtv.co.kr/m/view.php?idx=433>

32) 김소리 기자. 「한국상조공제조합 교육훈련비 90% 이사장이 사용」. 더뉴스 (2018.10.24.자 기사)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0>

#### [그림 4]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정관 개정(안)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 (보수 및 여비)</p> <p>① <u>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규정으로 정한다.</u></p> <p>② 비상근임원,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0조 (보수 및 여비)</p> <p>① <u>상근하는 임원과 이사장은 무급 여로 하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규정으로 정한다.</u></p> <p>② 비상근임원,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초대 이사장은 상조업체 대표, 2대 이사장은 경찰서장 출신이었으나, 3대 이사장직을 공정위 출신 퇴직 관료가 자리를 차지했음. 이후 다시 대통령 경호실장,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이사장으로 재취업함. 최근에는 국세청장 출신의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였음. 공정위가 독차지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정권과 관(官의) '낙하산' 자리로 낙점된 것으로 분석됨

\* 2015년 당시, 공정위 출신인 전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사천전문장례식장 매입 의혹이 있었음. 그러나 공정위가 현장조사는 물론 사실 확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됨<sup>33)</sup>. 이후 당시 조합 이사장은 중도 사퇴하였음

33) 조성진 기자. 「송기호 회장 “윤용규 전 공제조합 이사장 비리 밝혀야». 국제뉴스 (2015.02.04.자 기사).

○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2002.12.에 설립한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들의 소비자피해 보상기구임. 2~5대 이사장직에 공정위 출신이 이어오다가, 2015년 6대 이사장부터 청와대 경호실장, 감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른 경로에서 이사장을 배출하는 중임

○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 특수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2002.12.에 설립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공정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 해당 조합 이사장은 1대부터 5대까지 공정위 전 상임위원, 전 부위원장,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재취업했음

◇ 신△△ : 공정위 상임위원 → (재)시장경제연구원 상임이사 → 특판조합 이사장  
◇ 신△△ : 공정위 심판관리1담당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초대 원장 → 특판조합 이사장 → 법률사무소 ‘공정’ 고문, 법무법인 ‘평안’ 고문, (‘19.12)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자문위원  
◇ 유△△ :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 → 특판조합 이사장

\* 김△△ 전 이사장의 경우, 재임기간 18개월 동안 1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2011.10. 조합원들의 반발로 해임됐음<sup>34)</sup>

\* 유△△ 전 이사장 선임 당시, 임추위 구성에 후보자와 인맥이 닿아있어 불공정 논란이 있었음<sup>35)</sup>

34) 「특판조합 이사장 전격해임 조합 운영에 ‘빨간불’」. 파이낸셜뉴스 (2011.11.02.자 기사).

35) 김종민 기자. 「공정위 관리·감독기관 ‘특판공제조합’ 새 이사장 선임 앞두고 불공정 논란」. 뉴시스(2017.11.01.자 기사)

## 2 재벌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 (만도 비상임고문) 공정위 4급의 경우 2016.2. (주)만도의 비상임고문으로 취업한 사례가 있음
  - (부당 감액 규모 축소 발표) 비상임고문으로 재취업해있던 2017.3.에 공정위로부터 3억 원 규모의 하도급 부당 감액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 원 부과 명령을 받았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 부당 감액 규모는 500억 원으로, 공정위가 3억으로 축소 발표한 것이 하청업체 관계자의 제재 신고 끝에 드러났음<sup>36)</sup>
  
- (롯데쇼핑 상근고문) 공정위 4급 중 2016.7.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음
  - (과징금 축소) 2017.5.에 롯데쇼핑은 공정위를 상대로 13억 원의 과징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하였음(2016두51481). 또한 2018.6.에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과징금 재산정 판결을 받아 과징금이 2억 99백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음(2015두3610)
  
- (삼성물산 상근고문) 2016.7. 공정위 4급 출신이 삼성물산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였음
  - (과징금 취소) 2016년 삼성물산은 공정위로부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55억 59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2020.1. 항소심 3심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냄(2016두43312)

36) 김흥수, 오창균 기자. 「[공정위의 민낯②] 짹짹 심사·보고서 미공개…不信만 키웠다」. 시장경제 (2018.07.18.자 기사)

- (포스코건설 자문역) 2016.11. 공정위 4급 퇴직 관료가 포스코건설(주)의 자문역으로 재취업 한 사례도 있음
  - (과징금 축소) 과거 포스코건설은 2013년에 공정위로부터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893억 6300만 원의 과징금납부 명령을 받았었는데, 2019.2.에 항소심에서 과징금이 일부 취소되었음
  - 또한, 2018.6.에는 호남 고속철도 최저가 공사입찰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99.9억 원을 부과받았음.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과징금이 47억 원으로 재부과된 사례도 있음
  
- (삼성전자 고문) 2017.6. 공정위 3급 출신이 삼성전자(주) 고문으로 간 사례가 나타남
  - (과징금 축소) 고문으로 있던 2018.10.에 공기제균기 과장광고로 시정명령과 신문 공표 명령, 과징금 4억 88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항소심에서 1600만 원이 취소된 사례가 있음(2019.10.)
  
- (쿠팡 사외이사) 공정위 4급 서기관 출신은 2016.5. (주)포워드벤처스(현 쿠팡)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하여 법무분야 업무를 맡았음. 이후 또다시 공정위 국장급 출신이 2020.11. 사외이사로 재취업하였음
  - (전관 영입 대응)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를 꾸준히 받아왔음. 이에 쿠팡은 공정위 출신을 영입하여 법적 대응을 해왔음. 공정위 외에도 쿠팡은 다른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계속해서 영입해왔음

◇ (2016.5.~?) △△△ 사외이사 : 전 공정위 4급  
 - 2018.5.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00만 원 부과

- 2018.6. 부정취업 혐의로 수사<sup>37)</sup>

◇ (2020.11.~2023.11.) 김△△ 사외이사 : 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사무처장(직대)

- 2021.8. 공정위에서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함. 쿠팡은 사업자의 자본잠식을 50% 이상으로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받아 33억 원을 부과받은 것임. 또한 조사 당시 한경닷컴은 “쿠팡 조사를 공정위 본부가 아닌 서울지방사무소가 맡기로 한 것은 소극적 대처”라고 비판하였음<sup>38)</sup>.

### 3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 대기업에 퇴직 간부 채용 강요

- 지난 2018년 공정위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민간기업을 압박한 것이 드러남<sup>39)</sup>. 공정위는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하였음

[표 32] (2020.2.13.) 대기업 퇴직 간부 채용 강요 관련 대법원 재판 결과

이름	주요 경력	재판결과
정△△	제18대 공정위 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김△△	제17대 공정위 부위원장	징역 1년 6개월
노△△	제17대 공정위 위원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무 죄

37) 김현철 기자. 「공정위 고위공무원 재취업·전관예우 문제 또 ‘도마’」. NEWS1 (2018.06.21.자 기사).

38) 박지영 기자. 「공정위, 쿠팡 불공정행위 신고건 서울사무소서 엄정 조사중」. NPS통신. (2019.7.1.자 기사)

39) 권혜림 기자. 「‘공정위 퇴직 간부 채용 압박’ 정재찬 집유·김학현 실형 확정」. 중앙일보(2020.02.13.자 기사).

김△△	제16대 공정위 위원장 →고려대 석좌교수→두산중공업 사외이사, 감사위원장→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무 죄
지△△	제15대 공정위 부위원장	무 죄
신△△	제18대 공정위 부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무 죄

- 이후 2018.8.20.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함. 주요 골자로 ▲취업심사 및 재산등록 대상을 4급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의 사건 관련 접촉을 금지하며, ▲취업제한 기관 재취업자의 이력을 10년간 공시하고 있음

#### 4 공정동우회 카르텔 재취업

- ‘공정동우회’는 2001년 결성된 공정위 출신 관료들의 모임임
  - 2016년 김성동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동우회’에 월 10만 원만을 받고 사무실 공간을 내어주어 특혜 논란이 있었음.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의 임원 등이 등기이사로 있기에 공정위·공정경쟁연합회·기업·공정동우회 간의 민관유착 의혹이 있음<sup>40)</sup>

40) 김남일 기자. 「공정위 퇴직자 모임, 기업단체 사무실에 ‘더부살이’ 특혜」. 한겨레 (2016.10.17.자 기사).

## 6. 금융위원회

### 1. 금융위원회의 사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음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금융위는 2008년 (구)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포함)통합 및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짐

## 2. 취업기관 현황 및 직위

[표 33] 금융위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취업 유형	취업 기관	계
협회·조합	한국금융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결제원, 보험연구원 등	11
시장형 공기업	-	0
민간기업	코나아이, 한국자금융증개, KB캐피탈, 알루코, IBK투자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
법무·회계·세무법인	법무법인 태양	1
기타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1
<b>계</b>		<b>20 명</b>

- 금융위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 22명 중 20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음. 이 중 11명이 협회·조합으로 재취업하였음. 주로 생명·손해보험 협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위 유관기관임

[표 34] 금융위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퇴직 전 직급	재취업 직위	계
정무직	초빙연구위원(5), 개방이사(1)	6
고위공무원	비상근고문, 대표이사, 원장, 사외이사	4
전문임기제 가급	상근감사위원, 전문위원	2
3급	전무이사(3) 상근감사위원	4
4급	실장, 전무이사, 상무, 상근감사	4
<b>계</b>		<b>20 명</b>

- 금융위원장/부위원장급 정무직의 경우, 대부분 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하였음. 연구위원직 이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재취업함. 3~4급부터는 보험협회 전무이사 등으로 재취업함

### 3. 주요 특징

#### 1 정무직 보은 취업 및 재취업 전 임시 취업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
  - 금융위 위원장/부위원장급의 재취업은 정무직을 담당한 것에 대한 보은 성격으로 보임. 실제 연구 활동을 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없으며 대가성 프로젝트 등에 이름만 올리는 경우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다른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

[표 35] (2016~2021.8.) 각 연구원 금융위 출신 재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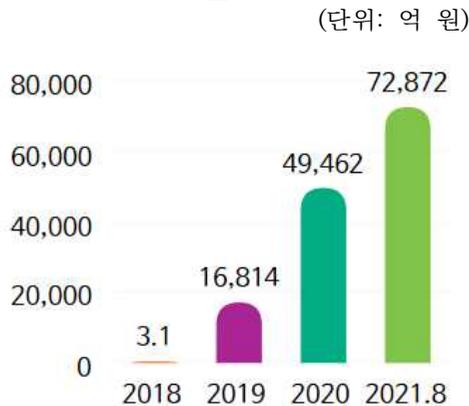
취업 기관명	직책	성명	취업 시기	주요 경력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정△△	2016.06.	금융위 부위원장→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한국거래소 이사장
	초빙연구위원	임△△	2017.10.	금융위 위원장→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19.03.)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20.7.)법무법인 울촌 고문, (‘21.3.)삼성증권 사외이사
	초빙연구위원	김△△	2019.07.	금융위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9.8.)기재부 제1차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정△△	2017.09.	금융위 부위원장→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21.8.)금감원 원장
보험연구원	초빙연구 자문위원	정△△	2019.09.	위와 동일한 인물임.

## 2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 ○ (코나아이 상근 고문 등)

- (특례 부여 1) 2014.6.에 퇴직한 금융위 고위공무원 출신이 2016.2.에 코나아이(주)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한 후, 2019.6. 금융위원회는 코나아이(주)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의무 면제, ▲전자지급결제업과 대부중개업 간 겸영 허용, ▲플랫폼 수수료 수취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되었음. 또한, 2020.6. 금융위는 코나아이(주)를 애큐온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하였음. 이에 따라 코나아이가 분석한 코나 플랫폼 충전 및 결제이력, 상품 구매내역 데이터가 애큐온캐피탈의 대안신용평가서비스에 활용됨
- (특례 부여 2) 또한 코나아이는 2018.12. 카드·모바일형 경기지역화폐 28개 시·군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지방정부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은 기업임. 2021년만 해도 1~8월까지 카드형 발행액만 7조 원에 달하며, 1년 만에 61억 적자에서 190억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기업임

[그림 5] 코나아이 카드형 상품권 결제 실적



※ 2021년은 발행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이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2016년부터 2년간 플랫폼 개발에만 1,500억 원이 들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온 것”이며, “미지급금은 고객 충전금이라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고, 이자 수익 역시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는 것일 뿐 재계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입장임<sup>41)</sup>

### 3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 ○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 금융 관련 각종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관련 협회 재취업은 정책의 공정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계속된 협회의 회장/부회장 자리로의 재취업 역시 협회의 역할의 건전성을 해할 염려가 있음

[표 36] (2016~2021년) 금융위 퇴직공무원의 보험협회 재취업 현황

취업 기관명	직책	성명	취업 시기	주요 경력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	2020.11	금융위 상임위원→한국증권금융사장→한국거래소 이사장
	전무이사	송△△	2016.07	(~'16.05)금융위 감사담당관→생보험전무이사→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김△△	2020.06	('20.04)금융위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	2020.11	('14)금융위 상임위원→('17)한국거래소 이사장
	전무이사	서△△	2016.10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대전지원 지원장
		김△△	2021.03	('20.12)금융위 기획조정관실 감사담당관

41) 신한나 기자. 「[단독] '경기 지역화폐' 코나아이, 수수료로만 올 758억 챙겼다」. 서울경제 (2021.10.06.자 기사).

- 특히 업계 로비 단체 성격이 강한 보험협회의 경우, 과거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낙하산 논란을 막기 위해 부회장직을 없애고 전무직을 신설하였음. 이후 금융위 퇴직자가 전무이사직으로 연이어 가고 있음. 대개 퇴직 후 몇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하였음

### ○ (금융결제원 임원)

- (금융결제원 원장) 금융결제원은 1986년 지급결제 시스템의 주 참가기관인 은행간의 자금결제와 지급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금융결제원은 설립 이후 1대부터 13대까지 모두 한국은행 출신이 원장직을 독식해왔음. 그러나 한은 출신 재취업 인사의 과도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2019.4.에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자가 원장이 되었음

\*지난 국감에서 역대 금융결제원 원장들이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셀프 위촉'하여 3년간 매달 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밝혀지기도 했음<sup>42)</sup>. 이들은 고문료 월 500만 원, 업무추진비 190만 원 등 매달 690만 원을 수령했고, 전용차량과 유류비·실비 지원도 받았음

- (금융결제원 커뮤니케이션실장) 2019.9.에 금융위 홍보전문관(4급) 출신 인사가 금융결제원 커뮤니케이션실장으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음

42) 월다라 기자. 「[2020국감] 역대 금융결제원장 7명, '셀프위촉'으로 3년간 매달 500만원 수령」. 아시아경제 (2020.10.07.자 기사).

## 7. 국 세 청

### 1. 국세청의 사무

- 국세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의 사무를 정의하고 있음

#### 제27조(기획재정부)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전관영입이 매우 활발한 정부부처임. 특히 대형 세무법인과 민간기업에 퇴직 공무원 재취업이 집중되어 있음
- 최근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 퇴임 세무사의 수입제한(1년)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2022.11.24.부터 시행될 예정임

#### 「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입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 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입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입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

족인 경우의 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입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입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입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입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입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시행일: 2022. 11. 24.] 제14조의3

- 본 법의 개정으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며 관내 기업체 또는 세정협의회 회원들로부터 퇴직 후 고문료를 받기로 하는 등의 퇴직 후 고문료 관행이 줄어들 것이 기대됨

## 2. 취업기관 현황 및 직위

[표 37] 국세청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단위: 명)

취업 유형	취업 기관	계
협회·조합	한국금융투자협회	1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
민간기업	맥서브, 삼구아이앤씨,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대한주정판매, 신한금융투자 등	81
법무·회계·세무법인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신승, 세무법인 세연, 세무법인 더택스, 광고세무법인 등	30
기타	코레일테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6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수자원공사,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부산교통공사	
<b>계</b>		<b>120</b>

- 국세청의 경우, 재취업심사를 받은 156명 중 120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민간기업(81명)이나 세무·회계법인(30명) 등으로 자리를 옮겼음.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지방국세청장급 퇴직공무원이 개업한 곳에서 전관영입이 활발함

**[표 38] 국세청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단위: 명)

퇴직 전 직급	재취업 직위	계
고위공무원	비상근감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3
3급	사외이사	2
4급	부사장, 비상임감사(3), 감사, 비상근감사(3), 사외이사(5), 비상임이사	14
5급	사외감사, 감사, 이사, 비상근감사, 팀장, 사외이사, 직원	9
6급	부장, 경비, 책임, 사원, 상무, 전문위원, 팀장, 일용직, 사내변호사, 실장, 미화원, 상근감사, 본부이사, 비상무이사, 기간제근로자 등	61
7급	통번역전문인력, 운전기사, 차장, 전문위원, 사업부과장, 이사, 상무이사, 실장, 부장, 경비원, 과장, 사원, 미화파트, 전기정비보조원, 보일러기사, 사외이사, 차장 등	31
<b>계</b>		<b>120</b>

※ 세무, 운전, 전산급 포함

- 다만, 4급 미만 퇴직자들도 많은 점을 보아 국세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음. 고위공무원~4급 출신 공무원은 사외이사 등 임원급으로, 5급~7급 출신 공무원은 다양한 경로로 재취업하였음

\*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에 따라, 세무공무원 10년이면 세무사 1차 시험 면제이며, 추가로 5급 이상 등이면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면제임. 따라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많음

### 3. 주요 특징

#### 1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표 39] 주요 법무법인 전관영입 현황

(단위: 명)

구분	다솔	광고	신승	더텍스	세연	예일	기타	합계
조사 대상자	5	4	4	2	2	2	25	44
누적 인원	20	45	5	8	8	18	146	250

(출처: 한국세무사회(2021) 등)

#### ○ 단골 세무법인

- 국세청 6~7급 출신들의 경우 세무법인의 전문위원이나 이사, 실장, 팀장, 부장급 실무자로 영입되는 경우가 많았음. 최근 5개년 동안 다솔, 광고, 신승 순으로 가장 많은 전관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음. 누적 기준으로는 광고, 이촌, 하나 순으로 가장 많은 전관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 출신 전관 보유 10위권 이내 주요 세무법인들은 최소 11명 ~ 최대 4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총 250여 명 이상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됨<sup>43)</sup>
- 이들 세무법인의 경우 설립연도와 관계없이 전관의 영입에 따라 단기간

43) 국세청 출신 맨파워 세무법인 순위. *Tax watch* 2021.4.20. 기사.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4/20/0001>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표적으로 2017년경에 김영근(전 대전청장)·박종성(전 조세심판원장)·전군표(전 국세청장)이 설립한 광고 세무·회계법인이 있음

## ○ 기타 회계·법무 법인

- 그 밖에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으로 영입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음. 국세청 출신들이 설립한 회계법인이거나 대형 로펌이 이에 해당함
- 일례로, 조△△(전 성동세무서장) 씨의 경우 현직 시절 법인세 등과 관련하여 법인성실도분석시스템(CAF) 전면 개정 등 큰 공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에 영입된 이후에는 대법원 조세재판연구원 출신들과 함께 “조세 드림팀”을 구성하여 현재는 세무조사·조세불복소송 활동에 전념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조△△ 씨가 개입되어 대법원 판례변경을 이끈 사건으로는 ▲롯데쇼핑 마일리지 포인트 부가가치세 320억 원 불복소송, ▲동부하이텍 법인세 770억 원 취소소송, ▲삼성전자 특허권 관련 법인세 700억 원 취소소송, ▲동부하이텍 법인세 660억 원 취소소송, ▲동부메탈 법인세 590억 원 취소소송, ▲하이트진로 증여세 320억 원 취소소송 등이 있음. 이들 사건은 법원이 판단을 변경하게끔 만든 리딩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음<sup>44)</sup>
- 국세청 출신 전관으로 영입된 조사대상자 중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서 영입된 경우는 단 3명으로 조사돼, 전문자격증 유무가 전관영입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퇴직 전 부서나 지방세무소(수도권)가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44) 5년 걸쳐 영입한 ‘조세 드림팀’, 수백억대 세금 소송서 잇달아 이겨. *조선일보* 2018.10.1. 기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30/2018093001153.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30/2018093001153.html)

## 2 민간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 ○ 낙하산 인사 주류기업

- (대한주정판매(주)) 1972년 설립된 대한주정판매(주)는 술의 직접원료가 되는 주정을 주류회사에 납품하는 곳임. 공기업이 아니나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음
- 전통적으로 국세청 고위공무원 국장급(3급) 출신들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사장/임기 3년)으로 취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무서장급(4급) 출신은 부사장과 감사, 전무로 내려보냈음

[표 40] 대한주정판매(주) 재취업 현황 (※일부 누락)

직책	성명	재임 기간	주요 경력
대표이사	채△△	'01.5.~'04.**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2과장(3급)
대표이사	김△△	'04.8.~'07.8.	본천 감사관
대표이사	김△△	'07.9.~'10.**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대표이사	김△△	'10.11.~'13.**	대전국세청장
대표이사	장△△	'13.3.~'16.**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이사	이△△	'16.5.~'19.**	성동세무서장
대표이사	최△△	'19.9.~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회장	이△△	2003년 전후	국세청 납세지원국장(2급)
부사장	손△△	2010년 전후	강서세무서장
부사장	허△△	2014년 전후	북대구세무서장
부사장	△△△	'16.5.~**	서울 지역 세무서장(4급)
전무이사	현△△	'04.9.~**	중부청 조사3-3과장
전무이사	김△△	'11.**~'14.3.	중부청 조사과장
전무이사	임△△	2014년 이후	국세공무원운영과장
감사	최△△	2004년 전후	서초세무서장→대한주정판매 감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감사	이△△	'04.10~**	서대문세무서장
감사	신△△	2010년 전후	서대구세무서장
감사	김△△	2011년 전후	중부국세청 조사1국2과장

- 2019.9. 국세청 고위직 출신 최△△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 지난 2016.3.에는 서울 지역 세무서장 출신 4급 인사가 부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됨
  - 대한주정판매는 매년 국세청 감사에서 주세법 관련 각종 로비·비리 의혹으로 오르내리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관련 혐의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 그 외에도 한국주류산업협회, 롯데칠성음료, 진로발효, 풍국주정공업, 한국알콜산업, 서안주정공업, 삼화왕관(병마개), 세왕금속공업(병마개) 등 주류 관련 기업에 국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임
- 재벌 불공정거래 및 소득세·증여·양도세 관련 특별·정기 세무조사 대응
- (삼강엠엔티㈜) 삼강엠엔티(주) 2015~2018년간 하도급법 상습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임<sup>45)</sup>. 2016.3. 4급 출신의 정△△(전 북부산세무서장)를 비상임감사로 영입해 관련 세무조사에 대응해 왔음. 지난 2017년 9월경 STX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을 인수하여 삼강에스엔씨를 신설하였다가 같은 해 11월경 매각하여 논란이 되기도 함
  - (성우종합건설(주)) 구 성우종합건설(주)는 2002년부터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계열사 주식 양도과정에서 증여세를 털 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세를 부과받은 전례가 있음. 2006년 국세청과의 불복소송에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음
  - 2016.1. 국세청 6급 출신 인사를 감사로 영입한 바 있음. 이후 2017년경 한일세멘트그룹에 인수됨
  - (대창단조(주)) 증장비 부품 생산업체인 대창단조(주) 역시 재벌 경영권 승계 논란이 있던 회사로 지분 증여·양도세 절감 이슈가 최대 관심사임.

45) 공정위, 삼강엠엔티(주) 등 2개 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2019.03.22.자 보도) [https://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ype=1&report\\_data\\_no=8127](https://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ype=1&report_data_no=8127)

2017.3. 국세청 6급 출신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됨

- **(☞하림지주)** ☞하림지주는 재벌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의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및 국세청 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자주 시달려 왔음. 2019년 2월경 국세청 6급 출신을 수석부장으로 영입하여 대응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음. 최근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 등으로 공정위 및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및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sup>46)</sup>

○ 재취업 회사의 재무제표 허위공시, 주가조작, 횡령 발생

- **(☞보타바이오)** ☞보타바이오는 2015년~2017년에 공시한 재무제표상의 매출원가 허위계상, 무형자산 과대계상,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소액공매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5억1,400만 원, 과태료 1억3,750만 원, 감사인지정 3년을 받았음. 또한 상장폐지 외에도 주가조작 및 횡령 등으로 검찰고발된 바 있음. 사건이 불거졌던 2017.5. 국세청 4급 출신 김△△(전 용인세무서장)을 비상임 감사로 영입한 바 있음. 현재는 ☞위지너스에 인수된 상태
- **(알리코제약☞)** 알리코제약☞는 2017.11. 국세청 고위직 출신 신△△(전 광주지방국세청장)씨를 비상근감사로 영입함. 그러나 이듬해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지연공시 등 공시사항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4,9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2017.6. 국세청 5급 출신 천△△ 전 검찰담당관을 감사로 영입함. 그러나 이후 2019년 및 2020년경 식약처로부터 신주 3개 품목의 인허가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시판이 중단된 상태

46) 「공정위 과징금 이어 특별 세무조사… 하림 일가에 무슨일이」. 조선비즈 (2021.11.17. 자 기사).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ood/2021/11/17/WF2EZ4E3JFDRPDDJREFLPE42Z4/>

- (주)에프앤에프 (주)에프앤에프는 2018.3. 국세청 4급 출신을 감사로 영입함. 그러나 이후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9.86억을 추정받았음
- (주)녹십자웰빙 (주)녹십자웰빙은 2019년경 국세청으로부터 122개의 기획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이듬해 모범납세자 표창상을 받으며 “원가 부풀리기” 의혹 대상에서 제외됨. 지난 2018.11. 국세청 5급 출신이 녹십자웰빙 감사직으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았으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바 있음

○ 금융권 IB영업 및 재취업 증권사 외국인 조세회피 혐의 조사 방해 의혹

- 금융권에서 은행 상임감사 등으로 국세청 전관을 영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은행/증권사 IB영업부 차장/과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우리·하나·부산은행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됨. 대표적으로, 부산은행의 경우 2015년경 불공정 유상증자, 2018년경 엘시티 비리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두 차례 받고, 이듬해 국세청 전관을 영입함
- 특히, 신한금융투자증권 등 14개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TRS 거래 과정에서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6,088억 원 조세회피에 가담 및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방해·거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됨.<sup>47)</sup>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던 2021년 7월 시점에 신한금융투자는 세무7급 직원을 차장으로 영입한 바 있음

47) 「[단독]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 224조…증권사는 국세청 조사‘방해’」. 쿠키뉴스 (2021.7.28.자 기사).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270239>

### 3 공기업 재취업

#### ○ 한국전력공사 사내변호사

-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 개편을 앞두고 대표이사의 누진제 완화에 따른 배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자문 2팀을 만들고 국세청 6급 출신을 사내 변호사로 영입함

### 4 주요 재취업 창구(1): 세정협의회

- ‘세정협의회’는 국세청 산하 지방세무서의 공식 로비 창구 역할을 해왔음. 세정협의회는 지역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국세청 출신 재취업자들과 지방세무서장 간의 민·관 협력기구로서 퇴직자들과의 원만한 유관업무 관계를 유지하고자 지난 50여 년 동안 운영되어왔음. 그간 지역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협의회 회원비 명목으로 “고문료”를 세무서장 등에게 지급하면서 업무상 로비 관계나 퇴직 후 재취업 자리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남<sup>48)</sup>

[표 41] 2021년 전국 지방세무서 세정협의회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서울청	충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27 / 28	24 / 26	14 / 15	17 / 19	15 / 20	14 / 18	18 / 23	129/149
94.4%	92.3%	93.3%	89.5%	75.0%	77.8%	78.3%	86.6%

(출처: 김두관 의원실, 2021년 국정감사)

48) 류형근 기자. 「세무서장 ‘로비 창구’ 된 세정협의회…국세청, 해체 검토(종합)」. NEWSIS (2021.10.06.자 기자).

- 2021년 현재 전국에 129개 세무서별 세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만 509명의 국세청 퇴직자들이 민간기업 법인대표 및 임원 자격으로 지역 세무소와 유착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2021년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무서의 업무추진비나 공용차량이 퇴직자들에게 제공되거나 퇴직을 앞둔 세무서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유용된다는 일부 제보가 사실로 확인 되면서, 세정협의회 해체 등이 검토되고 있음

## 5 주요 재취업 창구(2): 세우회

- 국세청 공제회 성격의 (사)세우회는 현직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 상호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설립(1966.7.20.)된 민간단체로 국세청 공무원들의 퇴직부조 및 융자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세우회는 지난 2008~2010년 국세청 출신 세무·회계·법무법인 출신 퇴직자들이 주축이 되어 대기업 감사나 과세 업무를 봐주기 위한 소통창 구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주류관련 업종 재취업 창구로 잘 알려져 있음
- 지난 2020년 공무원 조직인 세우회가 부동산 임차사업 등 영리사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체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sup>49)</sup>

49) 유일지 기자. 「국세청장도 가입한 ‘세우회’...“당장 해체하고 고발조치하라”」. 세정일보.(2020.10.12.자 기사)

## 8. 금융감독원

### 1. 금융감독원의 사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제38조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감원은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산하 특수법인

임. 금감원이 민간기업의 관리·감독을 맡고있는 만큼, 민간기업으로 진출한 퇴직 관료가 대다수임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sup>50)</sup>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감원 출신 인사가 채용된 직후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은 16.4%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힌 바 있음

## 2. 취업기관 현황 및 직위

[표 42] 금감원 취업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단위: 명)

취업 유형	취업 기관	계
협회·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코스닥협회, 금융보안원, 보험연구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14
시장형 공기업	-	0
민간기업	한국투자증권, 롯데카드, 신한저축은행, 고려휴먼스, 하나금융투자, 한국금융안전 등	75
법무·회계·세무법인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광장 등	14
기타	울산항만공사, 학교법인 단호학원	2
계		105

- 금감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자 111명 중 105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음. 이 중 대다수가 민간기업(75명)으로 재취업하였음. 주로 보험

50)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KDI. (2019.01.15. 발표).

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과 관련된 업체의 감사위원 등으로 갔음. 협회  
 조합 재취업자 14명 역시 대부분 금감원 유관기관으로 갔음

- 민간기업의 경우 대부분 금융권의 감사, 고문, 전무, 사외이사 등으로 감

**[표 43] 민간기업 재취업자 75명의 유형별 취업기관 현황**

(단위: 명)

취업 유형	취업 기관	계
비금융권	삼화페인트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태림페이퍼, 무궁화신타, 한국기업데이터, 두나무, 한화디펜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회계기준원 등	23
상호저축은행	신한, KB, 오케이, JT친애, 대한, 애큐온, 바로, 참, 하나, SBI, 유진	14
증권사(투자, 금융)	한국, 유진, 디에스, 현대차, 키움, 하나, 씨티그룹글로벌마켓, BNK, 한화임팩트, 신한	13
은행(시중, 지방)	전북은행, 부산은행	2
카드사	롯데카드	2
보험회사	흥국화재해상, 삼성생명, 서울보증, 메리츠화재해상, IBK연금	6
대부업체 (캐피탈, 여신, 추심)	리드코프, 고려휴먼스, 연합자산관리,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8
자산운용사(자산운 용)	브이아이자산운용, 하나자산신타, 현대자산운용, 디에스자산운용	4
그 외 금융업(전자금융업)	한국금융안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카카오페이	3
<b>계</b>		<b>75</b>

- 협회/조합의 경우 대부분 감사, 전무, 사외이사, 연구위원으로 갔음

- 법무법인의 경우 대부분 고문이나 전문위원으로 갔음

[표 44] 금감원 직급별 취업직위 분석

(단위: 명)

퇴직 전 직급	재취업 직위	계
임원	원장, 전무, 대표이사, 연구위원, 비상근이사 등	11
직원 1급	고문, 대표이사, 비상근고문, 부사장, 부대표, 자문위원, 비상임감사, 상근부회장	13
직원 2급	감사, 비상임감사, 상근부회장, 사외이사, 전무이사, 컨설턴트, 전문위원, 고문, 본부장 등	59
직원 3급	감사, 사외이사, 전문위원, 상무 등	14
직원 4급	차장, 사원, 실장, 부장, 전문위원 등	8
계		105

- 임원~직원2급의 경우 민간기업 임원급으로, 직원3급은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직원4급은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음

### 3. 주요 특징

#### 1 재벌 · 유관기관 관행적인 재취업

- (은행) 고위직 종착지는 결국 은행 상임감사
  - 퇴직 직후의 은행권 재취업은 대부분 불가능하기에 본 조사의 재취업심사 대상자들(2016-2021.08.)의 경우 단골 재취업 기관에 해당 사항 없음<sup>51)</sup>
  - 그러나 재취업 제한기간이 지난 취업심사 미대상자 중 금감원 고위직 퇴직자들의 경우 재취업이 가능한 타 금융기관이나 관련 협회(고위직 재취업 단골) 등을 거침. 즉,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뒤 은행 상임감사로 재취업하

51) 본 조사 대상자들 중 2명만 지방은행(전북, 부산) 재취업

는 “전통적인 단골 재취업” 금융기관에 해당함

[표 45] 2016~2021년 시중은행 재취업 현황

(취업심사 미대상자 포함)

은행 구분	기관명	재취업 수
시중	국민, 농협(2),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하나	8명
지방	광주(2), 대구(2), 전북(2), 부산, 제주	8명
인터넷전문	케이뱅크	1명
국책	수출입, 중소기업	1명
협회	은행연합회	1명

○ (저축은행)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건전성 문제, 규제환경 변화 대응

-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많은 저축은행이 부실PF를 관리하기 위해 금감원 은행검사국 출신들을 상임감사로 영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2019년경 PF대출 부실관리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 처분을 받고, 2달 만에 금감원 출신을 상근감사위원으로 영입함.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한금융 계열사들의 경우 금감원 출신들을 상근감사로 영입해 왔던 재취업 단골 금융회사에 해당함
- 국내 저축은행들의 경우 일본계 대부업체가 대주주로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2019년경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사건에 연루돼 금감원 제재를 받은 직후 바로 저축은행 및 참저축은행은 금감원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함
- 최근에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sup>52)</sup> 외에도 바젤Ⅲ 건전성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금감원 출신들을 상근감사로 영입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동적 규제(Dynamic Compliance)’환경 대응하기 위해 관련 유경험자들을 영입하는 추세임

52) 상호저축은행법 주요 개정안 (2016-2021): (1) 지점설치 규제 및 임원 연대책임 완화, (2) 신고제 완화 및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 (3) 신용공여 20% 확대, (4) 건전성 등에 대비한 규제 강화 등

- 한편, 하나저축은행은 과거 2014년경 임영호 국회의원 아들의 금감원 부정 채용에 개입됐던 이△△ 인사팀장을 상임감사로 영입했던 것으로 확인됨

○ (보험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신상품 개발·영업 대관업무

**[표 46] 금감원 퇴직관료의 보험사 재취업 현황**

(2016~2021.08. 취업심사대상자 기준)

취업 기관명	취업 시기	직책	성명	주요 경력
홍국화재 해상보험(주)	2020.02.	차장	△△△	금감원 직원4급
삼성생명보험(주)	2020.04.	컨설턴트	△△△	금감원 직원2급
(주)삼성생명금융 서비스보험대리점	2020.07.	상근고문	△△△	금감원 직원2급
서울보증보험(주)	2020.12.	대표이사	유△△	금감원 수석부원장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	2021.01.	윤리경영 실장(전무)	서△△	금감원 금융교육국(직원2급)
IBK연금보험(주)	2021.08.	영업부문장	원△△	금감원 인천지원장(직원2급)

- 전통적으로 보험상품 분쟁이 많았던 보험사들이 금감원 출신들을 영입해 왔음. 일례로, 삼성생명보험(주)은 지난 2019년경 요양성 암보험금 미지급 사건으로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돼 5만5천 명의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받았음. 이후 이듬해 금감원 2급 퇴직자를 컨설턴트로 영입하고, 불복소송을 제기해 2021년 현재 금융위의 법률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sup>53)</sup>
-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다수 보험사가 금감원 출신들

53) 전상현 기자. 「금감원,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제재...금융위 의결서 뒤집힐까」. 뉴데일리경제 (2021.07.13.자 기사).

을 영입하려는 추세임.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근무 경험이 있던 2급 인사 서△△(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씨가 메리츠 화재해상보험(주)의 윤리경영실장(전무)로 영입됨. 그러나 해당 인사는 금감원 재직시절 채용비리 청탁을 받고 정직처분을 받았던 불명예 퇴직 인사로 확인됨

- 또한, 최근 인슈어테크 플랫폼 서비스가 급부상하면서 보험사들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화두로 떠오름.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은 지난 2019년경 금융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했고, 비슷한 금감원 직원 4급 출신을 영입함. 이듬해 2020년경 금감원으로부터 모바일 전자서명 불합리 조치를 받기도 함
- 한편,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나 상품심사 대관영업을 위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출신들을 영입하기도 함. IBK연금보험(주)는 금감원 2급 인사를 영입하여 개인연금·퇴직연금본부장(총괄)을 맡김

○ (증권사) 사모펀드 사태 분쟁조정 및 금감원 증징계 면책 대응

**[표 47] 금감원 퇴직관료의 증권사 재취업 현황**

(2016~2021.08. 취업심사대상자 기준)

취업 기관명	취업 시기	직책	성명	주요 경력
한국투자증권(주)	2016.02.	차장	△△△	특별조사국
(주)유진투자증권	2016.03.	경영임원	문△△	북경사무소
	2021.07.	감사총괄	송△△	금융교육국
(주)신한금융투자	2016.03.	상근감사위원	정△△	북경사무소 홍콩주재원
하나금융투자(주)	2016.08.	차장	△△△	자산운용감독실
	2017.01.	감사총괄	양△△	금융교육국 부국장조사역
	2020.03.	감사총괄	이△△	회계조사국장
한화임팩트(주)	2018.04.	전무	구△△	금감원 임원
디에스투자증권(주)	2019.06.	감사	류△△	감독총괄국
현대차증권(주)	2019.09.	감사총괄	유△△	불법금융대응단

				실장
키움증권(주)	2020.04.	감사총괄	김△△	직원2급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주)	2020.03.	상근감사	△△△	직원2급
(주)BNK투자증권	2020.05.	전무	△△△	직원2급

- 지난 2020년경 DLF 및 사모펀드(라이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태를 계기로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되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출신들을 이사회 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원(전무)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도됨
-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매사(증권사, 은행) 및 수탁사(금융지주사) CEO의 “면책”을 위해 금감원 2급 고위직 전관인사를 대거 영입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있음. 어찌 되었든 영입한 결과, CEO 3명만 직무정지, 나머지 11명은 주의·경고를 받게 됨. 물론, 라이프펀드 사건의 수탁사인 신한금융투자 대표의 경우 중징계(직무정지)를 피하지 못했음
- 반면, NH투자증권 경우 2020.3. 금감원으로부터 한 차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재취업 심사 미대상자를 같은 달 즉시 영입하여 이후 금감원 제재심에 즉각 대응했고 그 덕분에 문책경고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도록 하는 데 일조했던 것으로 의심됨
- 특히,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KB증권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을 전관영입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로 금감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함.<sup>54)</sup> 참고로, 증권사 외에도 본 조사와는 별개로 같은 시기에 DLF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출신 전관인사를 활용해 솜방망이 처벌(중징계 면책)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들에는 신한·하나금융그룹이 있었음
- 그 밖에도, 키움증권은 잦은 전산 민원에 대응하여 금감원 출신을 영입하

54) 금감원과 신경전 벌인 KB증권…감사임원에 금감원 前 부원장보 내정. 조선비즈 2021.2.5. 기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5/202102050202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5/2021020502024.html)

였으며, 현대차증권 및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신설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출신 재취업심사 미대상자들을 영입함

○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사태 환매중단 대응 및 투자상품 대관영업

-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2개 자산운용사 역시 금감원의 현장 회계감리 검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2급 출신들을 같은 시기에 영입함. 지난 2019년, VI자산운용(주) (구 하이자산운용)은 영국계 H2O자산운용 펀드에 4,600억을 투자했다가 환매중단 된 바 있음<sup>55)</sup>. 또한 같은 해 (주)현대자산운용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중단 됨. 두 상품 모두 부실자산 투자로 현재 금감원 등 수사기관에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임
- (주)하나자산신탁 및 (주)무궁화신탁의 부동산 리츠나 디에스자산운용(주)의 벤처캐피탈 영업을 위해 금감원 2급이상 고위직 인사들이 영입돼 판매사에 투자상품 판매영업을 담당하고 있음

○ (투자전문회사/대부업) 한화재벌·우리금융의 M&A전쟁과 IB진출

- 2021년 투자전문회사로 변신한 한화임팩트(구 한화종합화학(주))는 지난 2015년 한화 그룹에 인수돼 재벌 3세(김희철 대표이사)의 경영권 승계로 이슈가 된 회사임. 한화그룹은 계열사 사업영역을 화학과 투자로 나눠 수소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IT기술 투자컨설팅, 시장조사, 경영자문을 위해 금감원 임원 구△△씨를 신설합병한 한화임팩트 전무로 영입함. 현재 한화임팩트는 IPO 준비중에 있음
- 순수 국내자본으로 설립된 대부업체인 (주)리드코프는 과거 DK그룹 계열사 (DK그룹 비상임감사 역시 금감원 1급 재취업자)였으나 2021.9. 현재 한화그룹으로 인수돼 현재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를 앞두고 있음

55) 황의영 기자. 「이번엔 해외 재간접 공모펀드서 4600억원 환매 중단」. 중앙일보 (2020.09.07.자 기사).

[표 48] (2016~2021.08) 금감원 퇴직관료의 (주)리드코프 재취업 현황

취업 시기	직책	성명	주요 경력
2016.12.	준법관리실장	신△△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부국장 (직원 2급)
2019.03.	실장	△△△	금감원 인적자원개발실 (직원 4급)
2019.12.	이사	△△△	금감원 직원3급

- 리드코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 3명의 금감원 출신들을 계속 영입하며, 다른 대부업체들과 같이 부실 저축은행들을 인수/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겨왔음. 그러나 현재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메이슨캐피탈(주)(2021.4. 인수)의 사모펀드를 통해 소유했던 국내 저축은행들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예정하고 있음

\* 메이슨캐피탈은 2014년경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으로 인한 손해 문제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미화 2억 불 상당의 ISDS 소송중임.

\* 전통적으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국내 저축은행을 소유해왔음. 만약 리드코프가 저축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관행을 깬 최초의 금융그룹이 됨. 정치적으로는 “애국 M&A”로 의미가 있겠으나, “재벌의 사금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 등 관련 출신들이 대부업체에서 어떤 IB역할을 해왔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금융캐피탈(주)은 2020년경 우리금융그룹이 구 아주캐피탈을 신설합병해 설립된 회사임. 지난 2018년에 아주캐피탈 내부감사총괄 임원으로 영입한 금감원 출신이 현재까지 상근하고 있음

○ (여신전문회사) 재벌기업 현대·롯데 계열사 대관업무

- 과거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에 있었던 2급 직원이 2016.10.에 현대커머셜(주)의 산업금융담당 이사로 재취업함. 또한 2021.1. 금감원 3급 직원이

현대캐피탈(주)의 정책지원실장(상무)으로 영입된 바 있음

- 한편, 롯데카드(주)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2016년 재무건전성 부실, 2017년 카드론 대출 부적절, 2020년 신용정보 관리 부실 판정을 받고서 금감원 출신들을 상근감사(위원/상무)로 잇따라 영입함

#### ○ (전자금융업) 핀테크 정책연구 및 빅데이터 전문가 영입

- (주)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상장을 앞두고 2021.8. 금감원 노조위원장 출신 수석조사역 추△△ 씨를 영입함. 이를 두고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있음<sup>56)</sup>. 추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오랫동안 금감원 상근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선캠프나 정치권 금융감독체계 개편 대응 등 대관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대내외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왔던 노동계 인사이기도 함
- 한국기업데이터(주) 역시 핀테크 관련 빅데이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임원)를 역임한 정△△ 씨를 전무이사로 영입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했음. 과거 사라졌던 부사장직을 부활시켰기 때문임. 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노조가 “절차나 기준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이라며 반발하였음. 이후에도 외부 임원들이 계속 영입되자 회사, 주주, 금융당국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 중임<sup>57)</sup>

####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규제 대응

-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주)는 최근 금감원 2급인 핀테크현장자문역 부국장을 영입함(2021.5.)

56) 이종화 기자. 「“카카오, 최근 9개월간 검·경·청와대 등 권력기관 퇴직자 집중 채용”」. UPI뉴스 (2021.9.27.자 기사).

57) 박주환 기자. 「한국기업데이터, 감사·이사 선임 두고 또 ‘낙하산’ 뒷말...검증절차 개선 목소리」. 투데이신문 (2021.06.24.자 기사).

○ (기타 비금융) 감사업무, 자금차입, M&A 및 우회상장, 불공정거래 대응

- 재벌 비금융계열사 중 화학·중공업·군수 기업<sup>58)</sup>의 상임감사나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았음
- 중견 상장기업들의 경우 각종 제조업 분야에서 부사장이나 고문으로 금감원 1~2급 출신들을 영입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 역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뒤이어 M&A 공·방<sup>59)</sup>이나 우회상장<sup>60)</sup>을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으로 영입하는 경우도 있었음
- 특히, 금감원 출신들을 불공정거래 방패막이로 영입한 기업들도 있었음. 2018년경 태림페이퍼(주)는 하청업체 갑질로 인한 자살사건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음. 재무담당 부사장 김△△(전 금감원 금융혁신국장)과 신한은행(주거래 은행)이 사모펀드 게이트 연루 의심을 받고 있음
- \* 현재 태림페이퍼의 상근감사에는 전 신한은행 신사중앙지점장이 맡고 있으며, 같은 계열사인 태림포장의 상근감사에는 전 신한은행 CIB영업본부장이 맡고 있음<sup>61)</sup>
- 한편, 대원강업(주) 경우 2019.3. 한은 부총재보 출신 사외이사 및 금감원 직원2급 출신 상근감사를 영입함에 따라 전직 고위 임원을 방패막이로 활용한다는 비판 있음<sup>62)</sup>

58) 롯데케미칼(주), 두산인프라코어(주), SK루브리컨츠(주), 한화디펜스(주), 그 밖에도 (주)삼성경제연구소, 교보리얼코(주)

59)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주) 관련하여, '박씨 일가의 그림자' M&A 이슈메이커 자베즈파트너스의 정제. *비즈니스한국* 2018.3.9 기사: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009>

60) 루미마이크로(주)

61) [단독]영화 '베테랑' 속 갑질이 현실로...하청업체사장 '자살' 부른 태림그룹. *Fetv* 2018.11.15.기사: <https://www.fetv.co.kr/mobile/article.html?no=15551>

62) 기업들 '한은 OB 모시기' 나선 까닭. *한국경제* 2019.10.6.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0661631>

## 2 유관기관 고위직 재취업

### ○ (금융보안원) 원장

- 금융보안원은 기존 금융결제원·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와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한 금융보안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5년 출범하였음. 초대 원장부터 현재까지 모두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 원장직을 차지하고 있음

[표 49] 역대 금융보안원 원장 현황

취업 시기	직책	성명	주요 경력
2015.04.	제1대 원장	김△△	금감원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 금융보안연구원장
2015.12.	제2대 원장	허△△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2018.04.	제3대 원장	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2021.12.	제4대 원장	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담당 부원장보

- (경력세탁) 이들은 금융보안원 원장직을 지낸 후 주요 은행 감사로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제1대 원장을 지낸 김△△씨는 이후 NH농협은행 상근감사에 선임됐음(2016.3). 제2대 원장을 지낸 허△△씨는 금보원장 임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신한은행 상임감사를 이동했음(2018). 제3대 원장을 지낸 김△△씨 역시 국민은행 상임감사로 갔음(2021.12.)
-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마이데이터(MyData)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및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핀테크가 부상하면서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장 자리보다 더 인기있는 자리로 알려짐<sup>63)</sup>. 3년 임기 보장과 함께 임기가 끝난 다음 금융사 등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임

63) 이현정 기자. 「금융보안원장, 금감원장보다 인기...물밑경쟁 치열」. 연합인포맥스 (2021.06.30.자 기사).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4953>

○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심사대상자 외]

- 전통적으로 한국은행 이사/부총재보 출신이 원장직을 도맡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금감원 출신 고위직들이 한국금융연수원장 자리를 독차지해왔음

[표 50] 역대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현황

취업 시기	직책	성명	주요 경력
1976.06.	제1·2대 원장	서△△	-
1982.06.	제3·4대 원장	장△△	-
1985.09.	제5대 원장	하△△	-
1988.09.	제6·7대 원장	김△△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1994.09.	제8·9대 원장	김△△	한국은행 이사
1998.04.	제10대 원장	김△△	한국은행 이사
2000.04.	제11대 원장	이△△	한국은행 부총재보
2003.04.	제12대 원장	강△△	한국은행 부총재보
2006.04.	제13대 원장	정△△	한국은행 부총재보
2009.04.	제14대 원장	김△△	한국은행, 고려대 초빙교수
2012.04.	제15대 원장	이△△	금감원 부원장
2015.10.	제16대 원장	조△△	금감원 부원장
2018.04.	제17대 원장	문△△	금감원 상임감사, 손해보험협회 회장
2021.04.	제18대 원장	서△△	금감원 수석부원장

- 특히 제16대 원장인 조△△ 씨 선임 당시, 연수원 금융노조는 “경남기업 특혜비리 사건에 연루된 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후보에서 제외해 달라”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음<sup>64)</sup>

64) 배혜정 기자. 「금융연수원지부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연수원장 선임 반대”」. 매일노동뉴스 (2015.08.05.자 기사).

○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 전통적으로 금감원 1~2급 퇴직자들이 상근부회장직을 독차지해왔음. 코스닥협회의 경우 금융계 출신이 회장을, 금감원 출신이 부회장 자리를 내정함. 이에 따라 2017.4.부터 금감원 2급 창원지원장을 지냈던 송△△ 씨가 부회장직을 수행했으며, 2021.7.부터는 금감원 1급 금감원협력관 실장을 지냈던 강△△ 씨가 부회장으로 취임함

[표 51] 역대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현황

취업 시기	직책	성명	주요 경력
2002.05.	제1대 상근부회장	정△△	한국증권업협회 전무이사, 건설증권 사장
2005.04.	제2대 상근부회장	김△△	금감원 증권검사국
2011.03.	제3대 상근부회장	김△△	금감원 증권검사1국장, 연구위원
2017.07.	제4대 상근부회장	송△△	금감원 창원지원장
2021.07.	제5대 상근부회장	강△△	금감원 금융협력관 실장

- (경력세탁) 이들은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한 후, 일반기업 감사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제2대 상근부회장을 지낸 김△△씨의 경우 에스에너지 감사와 파인테크닉스 사외이사로, 제4대 상근부회장을 지낸 송△△씨는 신한금융투자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갔음

○ (하청업체) 씨에이에스 전문위원

- (주)씨에이에스는 금감원의 IT 개발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하청업체임.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 각종 전산 시스템의 유지·개발·보수를 하며 금감원의 전산업무를 대체해옴. 해당 기업은 최근 빅데이터, AI 등 정보기술관리 및 전산감리 주관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용역사업을 독점하고 있음

2016.8.에 금감원 2급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 (NPO/연구원) 선임·초빙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전통적으로 금융위원장들의 퇴직 후 인사로 내정되는 재취업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음.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연합회 총회와 이사회 구성원이 거의 동일함. 연합회와 연구원 감사직을 서로 겸임할 정도로 깊은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금감원 임원들이 퇴직 후 선임연구원으로 종종 재취업하는 단골 기관 중 하나임<sup>65)</sup>
- (자본시장연구원) 전통적으로 금융위 부위원장급 인사들이 퇴직 후 인사로 내정되는 재취업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음. 석·박사급 선임연구원이나 현장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임원들을 초빙연구원으로 데려오는 단골 기관 중 하나임
- (보험연구원) 금감원 임원이나 2급 출신들이 초빙연구원으로 종종 재취업하는 단골 기관 중 하나
- (기타) 그 외에도 연구실적이나 현장경험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개발원 등 민간연구기관의 전문위원이나 초빙연구원으로 재취업하기도 함

### 3 청와대·기재부 낙하산식 재취업

○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 기재부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울보증보험(☞)은 부동산·채권신용보증을 하는 종합보험회사임.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에 두루 파견됐던 고위직들이 전통적으로 대표이사로 내정됨
- 지난 2017년, 한 차례 낙하산 관료인사 관행을 깨고 내부인사가 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으나, 2020.12. 기재부·금융위·금감원 경력이 있는 유△△

65) 조정현 기자. 「민간 씽크탱크 금융연구원, 고위관료 낙하산에 설왕설래」. MTN뉴스 (2021.07.16.자 기사).

씨가 대표이사로 내정되면서 관피아 체제로 다시 회귀함. 유△△ 씨는 2020.6. 금감원 수석부원장에서 물러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임. 재취업 당시 서울보증보험 노조로부터 “모피아와 전복라인 정치권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낙하산 의혹을 받기도 했음<sup>66)</sup>

○ (연합자산관리) 감사·부장

- 전통적으로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로 잘 알려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경 설립됐음. 주요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총 8개 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민·관출자한 회사로서 정부주도로 기업 부실채권 인수·회수 및 자금대여 등을 하는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민관협력기관임
- 2016년경 금감원 1급 출신 고위직 2명이 해당 기업의 감사로 재취업하려다 ‘제한/불승인’ 판정을 받은 바 있음. 반면, 비교적 직급이 낮은 금감원 4급 출신은 2019년경에 해당 기업의 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함

## 4 대형로펌 재취업

○ (대형로펌) 고문 및 전문위원

- 금감원 취업심사대상자 중 14명이 대형로펌에 모두 성공적으로 재취업했음이 드러남. 이 중 11명은 ‘취업제한’ 심사만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이 나타남. 나머지 3명도 ‘취업승인’ 심사를 받고 재취업에 성공함
- 전통적으로 국세청 출신들과 더불어 금감원 회계조사·관리국 및 자본시장조사국 출신들이 가장 많았음. 이에 따라 재취업자들은 대부분 불법금융

66) 이미정 기자. 「‘관피아 논란’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내정자, 노조 반발 해소할까」. 시사위크 (2020.11.13.자 기사.)

집행, 금융규제 대응, 기타 금융사 세무 관련 회계감리·검사 업무를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동적 규제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형로펌들이 혁신금융업무에 경험이 있는 퇴직자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는 추세임<sup>67)</sup>

[표 52] (2016~2021.8.) 금감원 출신 법무법인 재취업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울촌	김앤장	광장	태평양	기타
고문	1	-	1	1	1
전문위원	3	3	2	1	1
합계	4	3	3	2	2

- (고문) 과거에는 금감원장 등 금감원 2급이상 출신들이 비상임고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기업이나 금융사들의 감사위원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음. 주로 국내 파생/증권시장 사건이나 기업공시 문제를 독립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해 왔음. 최근에는 혁신 디지털 금융 대응과 관련하여 금감원 2급 출신들이 상임고문으로 영입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들 모두 '취업제한' 심사만으로 퇴직 직후 재취업에 성공함
- (전문위원) 전통적으로 금감원 출신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2~4급 퇴직관료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음. 투자공시·금융회계 등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회계감리 실무자 또는 부실 금융상품이나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소송이나 각종 분쟁조정을 위해 금감원의 검사업무 경력에 있는 변호사나 실무자가 영입되는 경우가 대다수. 마찬가지로 '취업제한/승인' 심사를 받고 퇴직 직후 재취업에 모두 성공함

67) 법무법인 울촌, 핀테크 아우르는 금융 드림팀...파생상품 소송·카카오페이 자문 성과. *매일경제* 2021.4.20. 기사: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21/04/377110/>  
 법무법인 태평양, IT 이해도 높은 전문가 포진...디지털 혁신그룹 출범시켜. *매일경제* 2021.4.20. 기사: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21/04/377105/>

## 5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

### ○ 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

- 고려휴먼스는 금융사 아웃소싱업체임. 금감원 퇴직관료가 고려휴먼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재취업제한기간(2~3년)을 거친 후, 금융사의 감사로 다시 취업하는 ‘경력 세탁’ 사례가 있음

[그림 6] 금감원 퇴직공무원의 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 재취업 현황



- 2014년에 영입된 이△△ 전 부원장보의 경우, 2014.3.에 금감원 감사실 국장으로 재직 중 대구은행 감사로 내정됐으나 ‘낙하산 논란<sup>68)</sup>’ 때문에 고사했음. 이후 고려휴먼스(주)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채운 뒤, 2016.6.9. 신한카드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음. 신한카드 전임 감사의 임기가 2016.3.까지였고, 사외이사들도 2016.3.에 선임됐음. 반면 이△△는 2016.6.에 임명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정확히 해당 인사가 퇴직한 지 2년인 된 시점임<sup>69)</sup>
- 2016년에 영입된 조△△ 전 일반은행검사국장의 경우, 일반은행검사국장을 지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취업

68) 홍재원 기자. 「금감원, 현직 국장 지방은행 ‘낙하산 감사’ 철회」. 경향비즈 (2014.03.13.자 기사)

69) 이△△의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뒤 2년임(법개정으로 2015.03. 이후 퇴직자부터 3년 제한)

승인을 받았음. 이후 조성열은 2020.3.16. 하나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음. 이후 2021.08.27.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음

- 2020.3.13.에 영입된 이△△ 전 부원장보의 경우, 금감원 재직 당시 변호사 특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2017.9.13.)<sup>70)</sup> 받은 비리 공직자임. 또한 2015년~2017년 사이에 그의 딸, 조카, 지인 등 총 3명이 3년에 걸쳐 우리은행에 부정하게 들어갔음. 신한은행에도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음. 고려휴먼스(주)는 2020.5.4.에 경호관련 인력업체 고려휴먼스DS를 자회사로 분사했음. 이△△ 대표이사의 전과기록이 자칫 고객사의 업체 선정 시 결격사유로 작용할 것을 고려해 분할 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됨<sup>71)</sup>. 현재 고려휴먼스(주) 홈페이지에서는 윤수연 씨가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음

## 6 재취업 특이사례

### ○ (중앙회·조합) 건전성 감시/대응

- (신협중앙회) 순회감독역 암행어사제도

신협중앙회·조합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순회감독역’을 활용한 상시 검사체계 및 지역 조합 암행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16년경 금감원 2급 출신이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로, 3급 출신이 순회감독으로 재취업함. 이후 2017.12. 금감원은 ‘순회감독역’을 활용한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것을 신협중앙회에 촉구한 바, 신협중앙회가 순회감독역의 조사 결과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기도 함<sup>72)</sup>. 순회감독역은 암행어사제도로 지역 신협을 수시 점검하는 중앙회 소속 계약직원임

70) 유제원 기자. 「‘변호사 특혜채용’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 선고…사표 수리」. 이뉴스투데이 (2017.09.13.자 기사)

71) 최승진,한상현 기자. 「금감원 낙하산의 피난처된 ‘고려휴먼스’」. 매일경제 (2020.09.15.자 기사)

72) 원충희 기자. 「금감원, 신협중앙회 ‘순회감독역’ 강화 촉구」. 더벨(2017.12.12.자 기사).

-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 구축 및 퇴직연금 상품 편입

저축은행중앙회는 2018.6. 금감원 2급 출신을 전무이사로 영입함. 하△△씨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뱅킹 전략을 수립/실행하였고, 저축은행의 예금 및 적금이 퇴직연금의 상품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수신 채널을 다양화하였음.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소개됨.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이직함

-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감사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중앙회 산하 지역 조합임. 2016.5. 암행어사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 2급 출신이 비상임감사로 영입된 것으로 추정됨



V

**관피아 근절방안**

○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5년간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임. 매년 평균 76~90%을 웃도는 높은 승인율을 보여왔음.
- 둘째, 주요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 정무직 보은 취업 및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 등이 있었음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관련 입법 진행 현황

[표 53]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관련 입법 현황

제안자 (의안번호)	주요 내용	진행상황
전주혜 의원 등 (2110524)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안 제30조제3항제8호).	위원회 상정 (‘21.9.13.)
김승원 의원 등 (2108695)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로 규정되어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안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	위원회 법안소위 (‘21.3.17.)
추경호 의원 등 (2102584)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하고,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위원회 법안소위 (‘20.9.10.)
서동용 의원 등 (2102320)	대통령령으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일부 교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	위원회 법안소위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삭제)	(‘20.11.17. )
정부 (2101087)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9조제1항제2호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고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함.	공포 (‘20.12.22. )
박용진 의원 등 (2100543)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제7항 삭제).	위원회 법안소위 (‘20.9.10.)

- 제21대 국회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거나 업무관련성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현재 위원회 법안소위 계류중임

○ 최근 관련 개정

- (2020.3.10) 공정위와 국방 출연연구기관의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음.

[표 54] 령 ‘특정 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관련 개정

조 문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제4항 9의3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제3조 제4항 16호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 (2021.4.1.) 또한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의 이슈로 부동산 관련 업무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와 기관별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

[표 5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부동산’ 관련 개정

조 문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제1항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u> 1. ~12. (현행과 같음)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u>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u>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 6	<신설>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u>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u>

		<p>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u>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u>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

- 이하에서는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관련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근절방안을 제시함

# 1.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 1.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각 호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을 할 수 있음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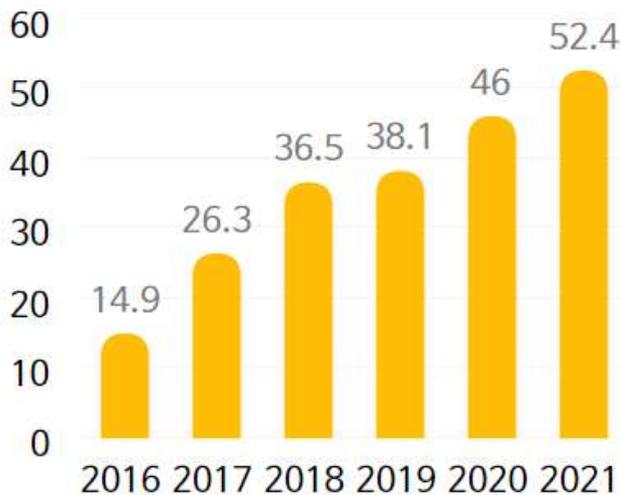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하였음 (2016년 14.9%→ 2021년 52.4%)<sup>73)</sup>

[그림 7]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 비율

(단위: %)



출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자료(2021 행정안전위원회)

- 이처럼 예외 규정으로 인해 일관성 없이 취업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73) 이동환 기자. 「김형동 “文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재취업 승인을 3배↑」. 연합뉴스 (21.09.14.자 기사).

## 2. 근절방안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취업승인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 포괄적인 사유로 변질됨으로써 취업승인을 받는 퇴직공직자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해당 공직자의 정년을 사실상 법정 연령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특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에서 타인의 지원 또는 종사를 배제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아울러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문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해당될 때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임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열거된 9가지 ‘특별한 사유’ 중 재취업을 허용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표 56] 공직자윤리법령 제34조 제3항 각 호에 대한 근절방안

조 문	근절방안
제1호	국가안보, 국가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은 너무 포괄적 개념이어서 좀 더 구체화 시켜야 함.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있어야 할 것임
제2호	두 번째 사유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면직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
제3호	공익을 구현하는 재취업이라 평가될 수 있겠으나 “경영개선”은 ‘특별한 사유’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매우 포괄적인 사유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취업을 막는 부작용을 수반함. 굳이 퇴직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1인의 취업 증가는 “경영개선”을 가져다주므로 (재)취업의 필요조건이지 ‘특별한 사유’로 간주할 수 없음
제4호	자격증 소지가 특별한 사유가 되려면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매우 희소하여 대안을 찾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제5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위법적인 정년연장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타인의 경쟁이나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과도한 특혜임
제6호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했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도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제7호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모든 재취업에서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재취업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로 간주할 수 없음
제8호	퇴직공직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특별한 사유’로 간주할 수 없음
제9호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경력을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해야 함. 오로지 이 요건을 이유로 재취업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다른 한 사람의 취업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이 될 것이기 때문임. 사회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섬(minus-sum) 게임임. 처음부터 어떤 한 개인이 민간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했다라면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재취업대상기관(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퇴직공직자를 시한부로 채용하기보다 신규 채용에서부터 정년까지 고용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일 것임

- 9가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수정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공직자윤리법 제1조)을 추구해야 할 것임

## 2.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기업체의 취업 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규정하고 있음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8., 2014. 6. 25., 2015. 3. 30., 2020. 6. 2.>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고시에 따르면, 영리분야는 1만 6,030개이며, 이 가운데 영리사기업체는 1만 5,818개, 법무법인 등 44개, 회계법인 61개, 세무법인 10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임

- 최근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직 취업사례와 같이 ‘깜깜이 취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sup>74)</sup>

74) 최정훈 기자. 「심사 없이 화천대유 고문 맡은 권순일...與野 “제도 개선 해야” 한 목소리

- ‘화천대유’의 설립자본금은 3억 1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었음
- 권△△ 전 대법관은 2020.9. 대법관 퇴임 후, 2020년 연말 즈음하여 취업심사 없이 화천대유의 고문직으로 재취업하였음. 이에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천억원 대의 배당금을 받게 될 회사가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제외된 것은 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2021년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2. 근절방안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단서를 달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및 외형거래액에 상관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퇴직 고위공직자가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여기서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정의에 따름

-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퇴직 후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여할 수 있으려면 민간기업에 대한 취업은 엄격히 제한(금지)되어야 할 것임

---

리(종합)」。 이데일리 (2021.10.08.자 기사).

### 3.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 1.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최근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이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 임명되어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음<sup>75)</sup>

- 2020.7. 임△ 구청장(행복재단 이사장)은 출자·출연기관인 동구행복재단 이사회를 열어 공로연수에 들어간 김△△ 전 부구청장(지방부이사관 3급)을 행복재단 대표이사로 임명하였음. 행복재단 대표이사직은 임기 1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퇴직 전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서 현행법상 문제가 없음
- 그러나, 일각에선 내년 지선을 앞두고 동구행복재단이 장애인복지관, 문화센터, 미디어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민 접촉이 많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2. 근절방안

- 공무원 복무규정 상 퇴직 전 겸직을 통한 관피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한 규제가 필요함
- 겸직 금지가 유일하게 당장의 영리 취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허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미실현 이익” 또는 “미래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75) 문승용 기자. 「퇴직 앞둔 간부 공무원 출자기관에 선임...‘관피아 방지법’도 뚫었다?」. 더팩트 (2021.01.12.자 기사).

<http://news.tf.co.kr/read/national/1836891.htm>

## 4. 퇴직 전 경력세탁 방지

### 1. 현황 및 문제점

- 구 공직자윤리법(2011.7.29. 개정 전의 것)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 이후 퇴직예정자가 공직 퇴직 전에 일정기간 의도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부서 등으로 발령을 받아 취업제한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2011.7.29.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개정되었음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이하 생략)

**제34조(취업승인)**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7. 생략)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이하 생략)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에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5년이라는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2012헌마331)
- 그러나 여전히 ‘퇴직 전 5년’이라는 한계점을 이용해 퇴직 후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경력세탁’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국회 행안위 소속 홍익표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당시 조사한 공정위 퇴직자 16명이 ‘퇴직 5년 이전’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일했지만, ‘퇴직 전 5년’ 동안에는 재취업이 가능한 부서로 ‘경력세탁’ 과정을 거쳤음<sup>76)</sup>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임용 당시부터 퇴직까지의 근무이력인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 전의 기록까지 모두 담겨있음

76) 김규남 기자. 「퇴임 공직자 ‘경력세탁’ 재취업 가능...“제도 허점 보완해야” 지적」. 한겨레 (2018.10.23.자 기사).

## [그림 8]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중 경력 기재란

(을-2)  
경력

일련번호	기 간		직급·직위	부서	담당 사무	발령청	기록자 인
1	부터	까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85mm×467mm(백상지 150g/㎡)

- 기재사항: 기간, 직급·직위, 부서, 담당 사무, 발령청, 기록자 인

- 이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경력세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퇴직 전 5년의 경력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일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2. 근절방안

- 공직자윤리법 제33조와 제34조를 개정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을 하기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의 업무가 감사실, 민원부서, 지방사무소 등 ‘업무관련성’과 관계가 없는 곳이 연속적으로 있으면 적어도 그 전 근무경력 5년을 더 심사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sup>77)</sup>

77) 김규남 기자. 「퇴임 공직자 ‘경력세탁’ 재취업 가능...“제도 허점 보완해야” 지적」. 한겨레 (2018.10.23.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7064.html#csidxae6fa814ad1af49916e107bd6912061>

- 이는 모든 취업심사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10년의 경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10년은 과도하게 긴 기간이 아니며, 고의적인 경력 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 '퇴직 전 경력세탁 방지를 위한 5년 규정'은 중대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음.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로서 거론되는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경력"이 이 기간 동안에는 발효되지 않기 때문임. 가령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임
- '5년 제한' 규정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함. "퇴직 전 5년 이내에"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대한민국 공직자 인사가 순환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이 이루어지려면 부서가 아니라 부처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재취업 제한이 이루어져야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 업무연관성을 차단하고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취업 5년 제한" 규정은 공직자윤리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재취업을 허용하기 위한 '알리바이' 구실을 하고 있음

## 5. 퇴직 후 경력세탁 방지

### 1.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간('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음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통상 재취업한 이후의 임기는 3년 혹은 2년임. 취업제한기간 '3년'이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3년 동안 경력세탁을 한 뒤 유관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례 ①] 금감원 부원장보 3인 → 금융보안원 원장 → 주요 은행 상근감사
  - [사례 ②] 금감원 고위직 2인 → 고려휴먼스(주) 대표이사 → 금융권 감사위원
  - [사례 ③] 공정위 고위직 2인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 2. 근절방안

-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개정하여,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5년’간으로 늘리면 경력세탁을 부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는 앞의 ‘퇴직 전 경력세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기간의 설정이 ‘알리바이’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윤리법’이 안고 있는 내재적 모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법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재취업제한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제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명확한 사유를 열거하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취업에 관한 한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목적은 “원칙 제한, 예외 허용”인데 반해, 제17조와 시행령은 반대로 “원칙 허용, 예외 제한”으로 되어 있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성공률이 100%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음
  - 나아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재취업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를 열거함으로써 모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특히 ‘밀접한 업무 연관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재취업을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재취업을 불허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음

## 6.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임 (2021.5.18. 제정/2022.5.19. 시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음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채용 제한,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직문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가 그 기준임
  
- 관피아와 관련해선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꼽을 수 있음
  - 해당 법률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법 제15조)하도록 하여 전·현직 공직자 간 접촉 과정 투명화 및 부패통로 차단을 도모하고 있음

(신고의무자) 모든 공직자

(신고내용)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적용제외)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함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 위반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다만,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행위가 ①골프, ②여행, ③사행성 오락에 한정되어 있어 식사나 그 밖의 사적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함
  - 권익위에서 발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2021.6.)에 따르면,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를 접촉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또한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이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2년 이후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접촉은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2. 근절방안

- 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 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함
- 또한,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의 예외 조항 내 '2년'을 취업제한 기간과 맞춰 '3년'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경실련 개선방안에 따르면 5년이 바람직할 것임)
- 앞서 인용한 현재 판결문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로비활동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하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7.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

### 1. 현황 및 문제점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 설치(공직자윤리법 제9조)

- (목적) 재산등록사향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
-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둠

##### ○ 구성(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기능 및 권한

-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처리,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의 승인, ▲ 그밖에 공직자윤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재산공개 및 기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명단

[표 57] (2016~2021.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현황

연도	구분	직책	성명	비고
2016	위원장	전 대법관	민△△	위촉직
	부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김△△	당연직
2017	위원장	전 대법관	민△△	위촉직
	부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김△△	당연직
2018	위원장	전 대법관	박△△	위촉직
	부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김△△	당연직
2019	위원장	전 대법관	박△△	위촉직
	부위원장	인사혁신처장	황△△	당연직
2020	위원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	위촉직
	부위원장	인사혁신처장	황△△	당연직
2021	위원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	위촉직
	부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김△△	당연직

(자료: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청구 결과 / 2016년~2021년 8월)

- 임기 : 위촉위원(2년, 1차 연임 가능), 임명위원(재직기간)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그 밖의 위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음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5호**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년 상반기에 공직자윤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 이유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음

- 2019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명단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일정시간이 되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음<sup>78)</sup>

○ 그러나, 2022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공직자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재취업 여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확인 승인을 심사·결정을 하는 곳이니만큼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퇴임 후에 얼마든지 재

78) 2019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브리핑. (2019.03.14.)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21694>

취업을 할 수 있는 공직자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재취업 여부를 조사하였음

[표 58] 전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재취업 현황  
(2016년~2021년 8월)

이름	위원회 직위	위원회 임기	재취업 시기	재취업 기관	재취업 직위	주요 경력
민△△	위원장	‘16.02~’ 18.02	‘19~ 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대법원 대법관
박△△	위원장	‘18.03~’ 20.03	‘20~ 현	법무법인 YK	고문	대법원 대법관
			‘20~ 현	(사)윽음	이사장	
김△△	부위원장	‘16.07~’ 17.07	? ~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제2대 인사혁신처장
김△△	부위원장	‘17.07~’ 18.12	‘21.1~현	유엔 국제공무원 위원회	위원	연세대 교수, 제3대 인사혁신처장
			‘22~ 현	공무원재해 보상연금위 원회	위원장	
황△△	부위원장	‘18.12~’ 21.03	‘21.6~현	공무원연금 공단	이사장	제4대 인사혁신처장

- (사)윽음은 법무법인YK가 출범한 공익 사단법인임
- 유엔 국제공무원위원회 위원은 선출직임(임기: 2021년~2024년)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설치된 조직임(2018.9.21. 설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리임

- 이처럼 심사기구의 위원장을 법관이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법관 자체가 ‘전관예우’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국 현실에서 심의기구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매우 부적절함. 이는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과 같음

## 2. 근절방안

- 인사혁신처는 2019년에 공언한 바를 지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전부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실 심사를 근절해야 할 것임
-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는 것이 공직자 취업제한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9조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를 법조인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 먼저 당연직인 부위원장 1인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한 것은 설득력이 있으나 위원장을 관행적으로 전 대법관이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는 것은 법규상의 자격요건은 충족시킬지라도 ‘전관예우’의 (잠재적) 수혜자들로 하여금 ‘관피아’를 감독하도록 설계된 구조 자체가 모순적임
  - 심사위원의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없는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조인을 위촉하고자 한다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적은 변호사 출신 인사를 위촉하는 것이 윤리위원회 자체를 이해충돌의 소지가 적은 기구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공직자윤리위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3

명의 자격요건을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미래)관피아(예비)관피아를 심사하도록 하여 윤리위원회를 ‘셀프서비스기구’로 희화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8.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의 공개

### 1.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 규정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6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음

**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또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2020.6.2.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공개 항목에 추가되었음

-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거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또한 「인사혁신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라 취업심사 검토의견서와 회의자료, 회의록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p>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조의 적용사례</p> <p>13.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취업승인 검토의견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비공개 서면의결('07.4월) 및 업무의 공정성 차원]</p> <p>14.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p>
--

□ 상반된 취업심사 결과

- 퇴직을 앞둔 비슷한 직급의 공무원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곳에 취업하려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든 사례가 발견되었음

[표 59] 조사 대상자 중 상반된 취업심사 결과 비교표

퇴직 전 소속기관	퇴직 직급	취업 시기	취업기관	취업직위	심사결과	결정사유
공정위	4급	'18.05.	(주)SK하이닉스	고문	취업가능	비공개
공정위	4급	'18.05.	(주)SK하이닉스	고문	취업제한	비공개
공정위	4급	'18.05.	(주)SK하이닉스	고문	취업불승인	비공개
국토부	4급	'17.09.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관리 본부장	취업제한	비공개
국토부	4급	'17.10.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관리 본부장	취업승인	비공개
국토부	4급	'18.11.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	취업제한	비공개
국토부	4급	'19.02.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	취업가능	비공개
국토부	4급	'19.06.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사무처장	취업제한	비공개
국토부	4급	'19.08.	대한건설단체	사무처장	취업가능	비공개

			총연합회			
금감원	임원	'18.03.	금융보안원	원장	취업제한	비공개
금감원	임원	'18.04.	금융보안원	원장	취업승인	비공개
산업부	3급	'17.01.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부회장	취업제한	비공개
산업부	4급	'17.04.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부회장	취업가능	비공개
산업부	4급	'19.11.	한국에너지기기 산업진흥회	상근부회 장	취업제한	비공개
산업부	4급	'19.11.	한국에너지기기 산업진흥회	상근부회 장	취업승인	비공개
중기부	별정 직	'21.07.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취업제한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8호
중기부	별정 직	'21.08.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취업승인	영 제34조제3 항제8호, 제9호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자료(2016.~2021.8.)

- 결정사유 공개 이후(2020.6.이후)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기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2명이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취업심사를 받았음

- 전자는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와 8호를 이유로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음

-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반면, 후자는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8호와 제9호를 이유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음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둘 다 중기부의 별정직 고위공무원임에도, 전자는 “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를 받고, 후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것임. 그러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 관련 조항만을 단순 나열하는 것으로는 결정결과에 대하여 납득하기가 어려움. 더 구체적인 사유의 공개가 필요함

## 2. 근절방안

- 이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더라도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 비공개 대상으로 있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삭제하고, 령 제35조의6을 개정하여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 항목에 추가하여야 함

## 9. 공무원 퇴직연금 정지 대상의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기준 퇴직공무원의 1인당 평균연금수령액<sup>79)</sup>은 242만 원임<sup>80)</sup>
- 공무원 연금 정지 제도 현황
  -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퇴직 공무원이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공무원 퇴직연금이 전액 정지됨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79) 연도 말 기준 퇴직연금수급자 및 유족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

80) 공무원연금공단(2022).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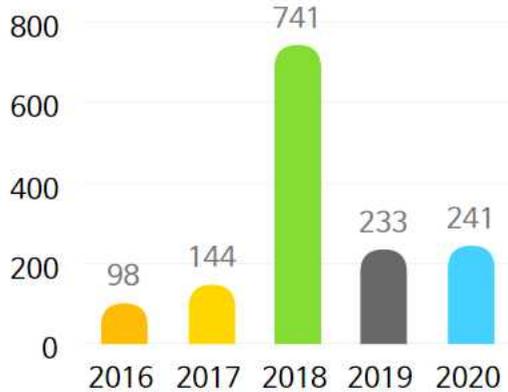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연금지급 전액 정지

- 연금지급 전액 정지 대상자(소득정지): 2022년을 기준으로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35만 원)의 1.6배인 월 856만 원(근로소득 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됨
- 정지기간(「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됨

[그림 9] 공무원 연금 전액 정지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유독 많은 2018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공무원 연금 정지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이 출범 당시 주무부처 장관의 ‘100만 원 설립자 출자’ 등을 이유로 내세워 전액 출자·출연기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sup>81)</sup>
- 이 외에 역대 연봉을 받는 재취업자는 연금지급의 일부가 정지됨.
  - **일부 정지 대상:**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연금 외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구간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지급 정지됨. 다만 매달 받는 본인 연금액의 1/2이 최대 연금 일부 정지 금액임

81) 최광숙 기자. 「[단독] 재취업 퇴직공무원도 연금 평평.. ‘원칙대로 정지’ 공공기관 17% 뿐」. 서울PN (2020-01-20자 기사).

- 공무원 연금 절반 정지자 현황(억대 연봉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출신 6,278명이 재취업·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았음<sup>82)</sup>. 이는 연금 외 소득이 연 1억 원을 넘어서서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정지된 인원을 집계한 것임. 2016년 5,297명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퇴직 공무원 중 재취업한 자가 받는 억대 연봉은 곧 민관유착 유희의 씨앗이 될 수 있음. 퇴직연금 전액 정지 및 일부 정지 대상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2. 근절방안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민간기업 포함)’을 포함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연금과 연봉 중 택일하도록 함으로써 연금과 연봉의 이중수급 특혜를 근절해야 함
- 다만 국민연금처럼 지급유예에 따른 연금 증액 혜택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임

82) 「“퇴직 공무원 6천278명 억대 연봉 재취업...국세청 출신 23.14%”」. 매일경제 (2021.10.08.자 기사).



VI

부 록

## [부록1] 결정사유 관련 법령

### □ 업무관련성 판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취업승인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부록2] 8개 부처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및 조사내용

### 1. 기획재정부

번호	퇴직 직급	퇴직 시기	취업 기관	취업 직위	취업 시기	심사 결과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1	고위공무원	2015년 12월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2016년 1월(심사 후)	취업승인	김△△	사회예산 심의관	~'17.06
2	3급	2016년 4월	삼성전자(주)	상무	2016년 5월	취업가능	김△△	국제금융 과장	~현재
3	고위공무원	2016년 5월	국제금융센터	원장	2016년 5월(심사 후)	취업승인	정△△	대외경제 국장	~'19.06
4	4급	2016년 9월	(주)삼성경제연구소	상무	2016년 10월	취업가능	박△△	국제기구 과장	~'18.4.
5	고위공무원	2015년 10월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2016년 11월	취업가능	변△△	FTA국내 대책본부 전략기획 단장	~'17.11
6	3급	2016년 11월	한국감정원	상임이사	2016년 12월	취업가능	정△△	민자사업 관리과장	~'19.12
7	고위공무원	2017년 2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2017년 2월(심사 후)	취업승인	김△△	부산조달 청장	~'20.02
8	3급	2017년 3월	더케이저축은행(주)	상근감사	2017년 4월	취업가능	강△△	운영지원 과장	~'20.03
9	정무직	2017년 6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2017년 6월(심사 후)	취업승인	최△△	제1차관	~'18.06
10	4급	2017년 7월	LG전자(주)	상무	2017년 8월(심사 후)	취업가능	강△△	재정건설정책관리과장	~현재
11	고위공무원	2017년 12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사장	2018년 2월	취업가능	송△△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1.03.
12	4급	2016년 9월	삼성생명보험(주)	상무	2018년 4월	취업가능	박△△	국제기구 과장	~현재 (승진)
13	4급	2018년 3월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전무	2018년 5월	취업가능	오△△	운영지원 과장	~현재
14	4급	2018년 7월	한국내화건설자재협회	전무이사	2018년 9월	취업가능	△△△	-	-
15	고위공무원	2018년 8월	디엘아이(주)	부사장	2018년 10월	취업가능	김△△	정책기획관	~현재

16	4급	2018년 6월	한국남동발전(주)	비상임이사	2018년 11월	취업가능	이△△	기금사업과장	~현재
17	정무직	2017년 5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8년 12월(심사 후)	취업승인	최△△	제1차관	~'20.05
18	정무직	2017년 6월	(주)일동홀딩스	사외이사	2019년 4월	취업가능	최△△	제1차관	~현재
19	고위공무원	2019년 4월	국제금융센터	원장	2019년 6월	취업승인	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현재
20	4급	2019년 6월	(주)방림	상무이사	2019년 7월	취업가능	△△	기획재정담당관	~현재
21	4급	2019년 7월	IBK연금보험(주)	금융연구소장	2019년 7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22	4급	2019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위원	2019년 9월	취업가능	△△△	-	-
23	고위공무원	2019년 10월	한국자금중개(주)	대표이사	2019년 12월	취업승인	이△△	재정관리관	~현재
24	고위공무원	2019년 12월	학교법인 가천학원	비상임감사	2020년 3월	취업승인	△△△	-	-
25	고위공무원	2018년 12월	한국감정원	상임이사	2020년 4월	취업승인	△△△	-	-
26	정무직	2017년 6월	신한금융투자(주)	사외이사	2020년 3월	취업승인	최△△	제1차관	~현재
27	4급	2019년 3월	동부건설(주)	주민감시원	2019년 8월	취업제한	-	-	-
28	일반직고위공무원	2021년 2월	한국기업데이터(주)	대표이사	2021년 4월	취업가능	이△△	재정관리국장	~현재
29	일반직고위공무원	2021년 3월	서울보증보험(주)	상근감사위원	2021년 5월	취업승인	안△△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현재
30	기술4급	2021년 5월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2021년 6월	취업가능	이△△	재정정보공개과장	~현재
31	정무직	2021년 4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1년 6월	취업승인	△△△	-	-

## 2. 산업통상자원부

번호	퇴직 직급	퇴직 시기	취업 기관	취업 직위	취업 시기	심사 결과	이 름	퇴직 전 부서	임기
1	3급	2015년 4월	두산중공업(주)	전무	2016년 3월(심사 후)	취업가능	나△△	소재부품정 책과장	~현재
2	3급	2016년 3월	대한상공회의 소	유통물류 진흥원장	2016년 5월	취업가능	서△△	통상정책총 괄과장	~현재
3	4급	2016년 3월	대한타이어산 업협회	부회장	2016년 5월	취업가능	△△△	-	-
4	4급	2016년 3월	한국금속포장 산업협회	상근부회 장	2016년 5월	취업가능	△△△	-	-
5	3급	2016년 6월	한국계량측정 협회	부회장	2016년 7월(심사 후)	취업가능	박△△	지역발전위 원회 정책홍보관( 파견)	3년
6	4급	2016년 7월	대한타이어산 업협회	부회장	2016년 7월(심사 후)	취업가능	정△△	동부광산보 안사무소장	~현재
7	4급	2016년 7월	SK텔레콤(주)	상무	2016년 9월	취업가능	△△△	-	-
8	4급	2016년 9월	한국가스안전 공사	상임이사	2016년 10월	취업가능	오△△	울산자유무 역관리원장	2년
9	3급	2016년 8월	한국전지산업 협회	부회장	2016년 9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10	정무직	2016년 8월	한국수력원자 력(주)	사장	2016년 11월	취업승인	이△△	제1차관	~'18.01
11	4급	2016년 10월	한국광기술원	경영지원 본부장	2016년 11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12	고위공무원	2016년 11월	한국전자정보 통신산업진흥 회	상근부회 장	2016년 12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13	4급	2016년 11월	(주)테라젠이텍 스	부사장	2017년 1월	취업가능	△△△	-	-
14	4급	2016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협회	인력양성 실장	2017년 1월	취업가능	△△△	-	-
15	고위공무원	2014년 4월	(주)포스코경영 연구원	전무	2016년 2월	취업제한	-	-	-
16	3급	2016년 8월	한국플랜트산 업협회	부회장	2017년 1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17	연구관	2016년 12월	한국전기산업 진흥회	상근부회 장	2017년 2월	취업가능	송△△	생활제품안 전과장	3년
18	4급	2017년 1월	한국지역난방 공사	상임이사	2017년 3월	취업가능	김△△	대불자유무 역지역관리 원장	~'19.03

19	3급	2016년 8월	한국항공우주 기술연구조합	부이사장	2017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유△△	FTA종합지원센터 단장	~'17.11
20	3급	2016년 8월	한국항공우주 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2017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유△△	FTA종합지원센터 단장	~'17.11
21	고위공무원	2016년 11월	한국도시가스협회	상근부회장	2017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윤△△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3년
22	연구관	2017년 3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17년 4월	취업가능	△△△	-	-
23	4급	2017년 4월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17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박△△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24	4급	2017년 2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2017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신△△	개발지원2팀장	~'20.09
25	고위공무원	2016년 12월	한국가스공사	사장	2017년 9월(심사 후)	취업승인	정△△	제1차관	~'18.08
26	고위공무원	2015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17년 11월(심사 후)	취업승인	김△△	기획조정실장	2년 2개월
27	고위공무원	2017년 11월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2018년 1월	취업승인	박△△	기획조정실장	~'21.2
28	고위공무원	2017년 11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2018년 1월	취업승인	정△△	국가기술표준원장	~'21.04
29	3급	2017년 11월	OCI(주)	상무	2018년 1월	취업가능	정△△	산업기술정책과장	2년
30	고위공무원	2017년 11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2018년 3월	취업승인	이△△	통상교섭실장	3년
31	정무직	2017년 7월	롯데정밀화학(주)	사외이사	2018년 3월(심사 후)	취업승인	우△△	제2차관	~'20.04
32	고위공무원	2018년 3월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2018년 4월	취업승인	이△△	FTA정책관	3년
33	고위공무원	2017년 9월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18년 4월	취업승인	△△△	-	-
34	4급	2018년 3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18년 4월(심사 후)	취업승인	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년
35	3급	2018년 3월	SK디스커버리(주)	상무	2018년 5월	취업가능	김△△	기계로봇과장	-
36	4급	2018년 3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2018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37	4급	2018년 3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2018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송△△	울산자유무역관리원장	2년
38	4급	2017년 2월	한국LPG산업인협회	상근부회장	2018년 5월	취업가능	이△△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
39	4급	2018년 3월	한국LPG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18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최△△	석탄산업과장	~현재

40	4급	2018년 3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018년 5월	취업가능	하△△	주 멕시코 대사관 상무관	3년
41	4급	2018년 4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18년 6월	취업승인	△△△	-	-
42	4급	2018년 3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2018년 6월	취업가능	△△△	-	-
43	4급	2018년 7월	(주)강원랜드	기획관리 본부장	2018년 10월	취업가능	고△△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21.11
44	정무직	2017년 6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2018년 12월(심사 후)	취업승인	정△△	제1차관	2년
45	4급	2016년 5월	(주)KT	팀장	2018년 2월	취업가능	△△△	-	-
46	4급	2016년 7월	SK이노베이션(주)	상무	2019년 2월	취업가능	△△△	-	-
47	고위공무원	2018년 10월	한국가스공사	사장	2019년 7월	취업승인	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3년
48	4급	2019년 6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2019년 8월	취업가능	송△△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2년
49	4급	2019년 4월	한화파워시스템(주)	상무	2019년 8월	취업가능	△△△	-	-
50	연구관	2019년 6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사	2019년 8월	취업가능	최△△	국표원 제량측정제도과장	3년
51	4급	2019년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2019년 9월	취업가능	김△△	제조혁신기반과장	2년
52	4급	2019년 8월	한국계량측정협회	상근부회장	2019년 10월	취업가능	김△△	-	-
53	4급	2018년 3월	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사무국장	2019년 10월	취업가능	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현재
54	4급	2019년 8월	한화케미칼(주)	상무	2019년 11월	취업가능	윤△△	FTA협상총괄과장	~현재
55	4급	2019년 9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2019년 11월	취업가능	문△△	대불자유무역관리원장	3년
56	4급	2019년 9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19년 11월	취업가능	△△△	-	-
57	4급	2019년 9월	한국에너지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019년 11월	취업제한	-	-	-
58	고위공무원	2019년 10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2019년 12월	취업승인	박△△	산업혁신성장실장	~'23.12
59	4급	2019년 9월	한국에너지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2019년 11월(심사 후)	취업승인	용△△	남부광산안전보안사무소장	3년
60	정무직	2017년 7월	(주)에스코홀딩스	사외이사	2020년 3월	취업승인	우△△	제2차관	2년

61	4급	2019년 4월	한화에너지(주)	상무	2019년 12월	취업가능	△△△	-	-
62	4급	2018년 9월	수원여객운수(주)	부사장	2019년 1월	취업가능	최△△	-	-
63	정무직	2017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2020년 2월	취업승인	우△△	제2차관	~현재
64	4급	2019년 5월	뉴파워프라즈마(주)	사장	2020년 2월	취업가능	△△△	-	-
65	3급	2017년 11월	오씨아이페로(주)	대표이사	2020년 5월	취업가능	△△△	-	-
66	고위공무원	2019년 7월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5월(심사 후)	취업승인	박△△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3년
67	4급	2020년 4월	한국광기술원	본부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	-	-
68	4급	2018년 10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2020년 5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69	4급	2020년 4월	한국시멘트협회	전무이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정△△	정보보호담당관실	-
70	3급	2020년 4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6월	취업가능	최△△	산업재난담당관	-
71	4급	2020년 6월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8월	취업가능	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3년
72	4급	2019년 9월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2020년 9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73	4급	2020년 8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2020년 10월	취업가능	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3년
74	4급	2020년 8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혁신본부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2년
75	3급	2018년 3월	SK가스(주)	사업개발본부장	2020년 12월	취업가능	김△△	기계로봇과장	-
76	고위공무원	2020년 10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020년 12월	취업승인	김△△	장관 정책보좌관	3년
77	고위공무원	2018년 1월	(주)두크	자문역	2020년 6월	취업제한	-	-	-
78	4급	2019년 5월	(주)한국화이버	대표이사	2020년 12월	취업가능	이△△	전자전기과장	-
79	3급	2019년 8월	(주)씨엔에스자산관리	감사	2021년 3월	취업가능	박△△	기계로봇과장	3년
80	3급	2019년 8월	(주)오리온테크놀리지	감사	2021년 3월	취업가능	박△△	기계로봇과장	3년
81	일반직고위공무원	2021년 2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2021년 4월	취업승인	강△△	무역위 상임위원	3년
82	일반직고위공무원	2021년 2월	한국남부발전(주)	사장	2021년 3월	취업승인	이△△	국가기술표준원장	3년

83	일반직고위 공무원	2021년 3월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 장	2021년 4월	취업승인	변△△	정책기획관	3년
84	정무직	2020년 11월	한국전력공사	사장	2021년 5월	취업승인	정△△	제1차관	3년
85	4급	2021년 3월	SK건설(주)	담당임원	2021년 5월	취업가능	△△△	-	-
86	4급	2021년 4월	한국전시산업 진흥회	상근부회 장	2021년 7월	취업승인	장△△	불공정무역 조사과장	3년
87	4급	2019년 8월	한화에너지(주)	상무	2021년 6월	취업가능	△△△	-	-
88	4급	2021년 4월	한국에너지공 단	기후대응 이사	2021년 6월	취업가능	주△△	대불자유무 역지역관리 원장	2년
89	4급	2021년 4월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 재단	첨단의료 기기개발 지원센터 장	2021년 6월	취업가능	홍△△	마산자유무 역지역관리 원장	-
90	4급	2021년 5월	SK이노베이 션(주)	상무	2021년 7월	취업불승 인	-	-	-
91	4급	2021년 5월	한국냉동공조 산업협회	상근부회 장	2021년 7월	취업가능	△△△	-	-
92	별정직3급 상당	2021년 2월	한국동서발전 (주)	상임감사 위원	2021년 8월	취업가능	김△△	장관 정책보좌관	2년
93	3급	2021년 6월	FITI시험연구 원	원장	2021년 10월	취업가능	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3년
94	4급	2021년 5월	SK하이닉스(주)	담당임원	2021년 8월	취업가능	△△△	-	-

### 3. 국토교통부

번호	퇴직 직급	퇴직 시기	취업 기관	취업 직위	취업 시기	심사 결과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1	4급	2015년 10월	한국감정평가협회	상근부회장	2016년 2월	취업가능	곽△△	건축재정과장	-
2	고위공무원	2015년 12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2016년 2월	취업가능	손△△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18.05
3	4급	2015년 12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2016년 7월	취업가능	김△△	부산국토청관리국장	~'18.12
4	4급	2015년 12월	한국항공진흥협회	총괄본부장	2016년 4월	취업가능	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
5	4급	2015년 2월	한국복합물류(주)	상근고문	2016년 5월	취업가능	문△△	철도사고조사위 사무국장	-
6	4급	2016년 5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2016년 6월	취업가능	강△△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	-
7	3급	2016년 4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상임부회장	2017년 1월	취업가능	이△△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	3년 4개월
8	7급	2015년 6월	(주)삼보기술단	이사	2015년 11월	취업가능	△△△	-	-
9	4급	2016년 2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2016년 8월	취업가능	박△△	익산국토청관리국장	3년
10	4급	2015년 12월	교통투자평가협회	사무국장	2016년 7월(심사 후)	취업가능	양△△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
11	4급	2016년 2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진단본부장	2016년 9월	취업불승인	-	-	-
12	4급	2016년 2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	2016년 9월	취업가능	박△△	종전부동산 기획과장	3년
13	4급	2016년 6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상임감사	2016년 9월	취업가능	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
14	4급	2016년 3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상임부회장	2017년 4월	취업가능	이△△	용산공원공원정책과장	4년
15	4급	2016년 8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장	2016년 12월	취업가능	박△△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

16	4급	2016년 4월	한국골재협회	상임부회장	2017년 1월	취업가능	심△△	항공정책실 항공자격과 장	3년
17	5급	2015년 12월	(주)경화엔지니어링	관리부 부회장	2016년 3월	취업제한	-	-	-
18	5급	2014년 6월	(주)금성산업	부사장	2016년 3월	취업제한	-	-	-
19	7급	2015년 12월	(주)건화	자산관리 팀장	2016년 2월	취업가능	△△△	-	-
20	5급	2016년 4월	한국기술개발 (주)	사장	2016년 5월	취업제한	-	-	-
21	5급	2015년 12월	(주)아리지	고문	2016년 1월	취업제한	-	-	-
22	6급	2015년 4월	(주)서브윈	경비 및 현장관리	2016년 6월	취업제한	-	-	-
23	7급	2014년 6월	(주)농협유통	차량주유	2016년 1월	취업제한	-	-	-
24	고위공무원	2017년 2월	한국감정원	원장	2017년 4월	취업승인	낙마	-	-
25	고위공무원	2017년 2월	이레일(주)	대표이사	2017년 4월	취업가능	임△△	부산국토관 리청장	-
26	고위공무원	2016년 5월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 장	2017년 5월	취업승인	정△△	기조실장	-
27	4급	2016년 11월	(주)한국건설관 리공사	감사	2017년 5월	취업가능	김△△	하천운영과 장	3년
28	4급	2017년 4월	공간정보산업 협회	본부장	2017년 6월	취업가능	김△△	부산국토청 영주국토관 리사무소장	~'20.02
29	4급	2017년 4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 협회	상근부회 장	2017년 5월(심사 후)	취업가능	양△△	부산국토청 대구국토관 리사무소장	3년
30	7급	2015년 6월	(주)서우건설산 업	건설현장 일용직	2016년 6월	취업제한	-	-	-
31	4급	2017년 6월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 장	2017년 7월(심사 후)	취업가능	이△△	국토지리정 보원 운영지원과	-
32	4급	2017년 8월	항공안전기술 원	기획관리 본부장	2017년 9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33	4급	2017년 8월	항공안전기술 원	기획관리 본부장	2017년 10월(심사 후)	취업승인	△△△	-	2년
34	6급	2017년 8월	(주)KR산업	고속도로 운영관리 소장	2017년 10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35	고위공무원	2017년 9월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017년 11월(심사 후)	취업승인	권△△	서울국토관리청장	3년
36	5급	2017년 6월	(주)용마엔지니어링	부사장	2017년 11월(심사 후)	취업가능	△△△	대전국토청 건설관리실	-
37	4급	2016년 12월	(주)평화엔지니어링	부사장	2017년 12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38	5급	2016년 12월	케이에스엠기술(주)	부사장	2017년 1월	취업가능	△△△	-	-
39	7급	2016년 6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2017년 1월	취업가능	△△△	-	-
40	7급	2017년 2월	신영건설(주)	계약직	2017년 6월	취업가능	△△△	-	-
41	6급	2017년 6월	케이에스엠기술(주)	부사장	2017년 7월	취업제한	-	-	-
42	고위공무원	2018년 2월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2018년 3월	취업승인	김△△	대전국토관리청장	3년
43	7급	2017년 2월	한국도로공사	운전원	2017년 11월	취업가능	△△△	-	-
44	정무직	2015년 10월	해외건설협회	회장	2018년 4월(심사 후)	취업승인	낙마	-	-
45	4급	2018년 3월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사무국장	2018년 5월	취업제한	-	-	-
46	4급	2016년 11월	한국랜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	2018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이△△	서울국토청 하천국장	~'21.05
47	고위공무원	2018년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2018년 5월(심사 후)	취업승인	전△△	국토정보정책관	2년
48	고위공무원	2017년 9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2018년 5월(심사 후)	취업승인	낙마	-	-
49	4급	2018년 3월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사무국장	2018년 6월(심사 후)	취업승인	△△△	-	-
50	6급	2017년 6월	한국주택시설관리(주)	사원	2017년 7월	취업가능	△△△	-	-
51	7급	2017년 6월	(주)흥국	사원	2017년 8월	취업제한	-	-	-
52	5급	2015년 11월	영창중공업(주)	직원	2017년 7월	취업제한	-	-	-
53	4급	2017년 11월	한국교통카드산업협회	사무국장	2018년 8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54	4급	2017년 12월	의왕도시공사	사장	2018년 10월	취업가능	낙마	-	-

55	고위공무원	2018년 9월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2018년 10월(심사 후)	취업불승인	-	-	-
56	고위공무원	2017년 9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이사장	2018년 12월	취업승인	서△△	항공정책실장	~'21.12
57	4급	2018년 9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	2018년 11월(심사 후)	취업제한	66년 동일인물	-	-
58	4급	2018년 10월	한국감정원	상임이사	2019년 1월	취업불승인	-	-	-
59	4급	2017년 12월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2018년 12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60	7급	2018년 6월	(주)맥서브	경비원	2018년 12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61	4급	2018년 8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이사	2018년 12월(심사 후)	취업가능	박△△	서울항공청관리국장	-
62	7급	2017년 12월	인성종합건설(주)	주임연구원	2018년 2월	취업가능	△△△	-	-
63	고위공무원	2018년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19년 1월(심사 후)	취업승인	구△△	항공정책실장	~'20.09
64	고위공무원	2018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2019년 2월	취업승인	박△△	철도안전정책관	3년
65	4급	2018년 10월	항공안전기술원	기획관리본부장	2019년 2월	취업승인	△△△	-	-
66	4급	2018년 9월	한국주택협회	전무이사	2019년 1월(심사 후)	취업가능	오△△	서울항공청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
67	고위공무원	2018년 9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2019년 2월(심사 후)	취업불승인	-	-	-
68	정무직	2018년 12월	한국철도공사	사장	2019년 3월	취업승인	손△△	제1차관	~'22.03
69	고위공무원	2018년 10월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2019년 3월(심사 후)	취업승인	김△△	서울항공청장	3년
70	4급	2019년 1월	한국감정원	본부장	2019년 4월	취업가능	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운영지원과장	~'22.05
71	3급	2019년 4월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2019년 6월	취업가능	△△△	-	-

72	4급	2019년 6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2019년 6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73	고위공무원	2019년 3월	기계설비건설공계조합	이사장	2019년 7월	취업가능	이△△	서울지방항공청장	3년
74	6급	2017년 2월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2018년 8월	취업가능	△△△	-	-
75	6급	2016년 6월	삼보종합건설☞	일용직	2018년 10월	취업제한	-	-	-
76	4급	2015년 9월	☞웨이버스	부사장	2018년 9월	취업가능	△△△	-	-
77	4급	2019년 7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2019년 8월(심사 후)	취업가능	안△△	국토부 대변인실	~'19.10
78	4급	2019년 6월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2019년 10월	취업가능	신△△	대전국토청 도로국장	~'21.11
79	4급	2019년 2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2019년 11월	취업가능	이△△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3년
80	4급	2019년 8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	2019년 11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81	4급	2019년 9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2020년 1월	취업가능	△△△	-	-
82	4급	2019년 6월	건축사공계조합	상근이사	2019년 12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83	6급	2017년 6월	한전KDN☞	일용직	2019년 3월	취업제한	-	-	-
84	4급	2019년 10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	2020년 2월	취업가능	△△△	-	-
85	4급	2019년 10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상근부회장	2020년 2월	취업가능	김△△	지역재조사 기획단 사업총괄과장	3년
86	4급	2019년 10월	한국골재협회	상임부회장	2020년 2월	취업가능	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3년
87	4급	2020년 1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상임부회장	2020년 4월	취업가능	안△△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3년
88	정무직	2019년 5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20년 4월	취업불승인	-	-	-
89	3급	2020년 2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이사	2020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90	4급	2020년 3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2020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91	4급	2020년 2월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공제조 합	이사장	2020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92	정무직	2019년 12월	서울교통공사	비상임이 사	2020년 6월(심사 후)	취업승인	김△△	제2차관	3년
93	4급	2019년 6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 합회	상근부회 장	2020년 6월(심사 후)	취업가능	△△△	대구국토관 리사무소장	3년
94	7급	2019년 12월	한국전력기술 (주)	사원	2019년 12월	취업가능	△△△	-	-
95	6급	2019년 6월	한국도로공사	운전원	2019년 11월	취업제한	-	-	-
96	7급	2018년 12월	한국도로공사	운전원	2019년 11월	취업제한	-	-	-
97	4급	2018년 12월	대상이앤씨(주)	계약직	2019년 11월	취업제한	-	-	-
98	4급	2017년 12월	동진산업(주)	부산사업 본부장	2019년 9월	취업제한	-	-	-
99	고위공무원	2020년 4월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겸 기획운영 본부장	2020년 7월(심사 후)	취업불승 인	-	-	-
100	4급	2019년 8월	한국도로시설 안전산업협회	선임부회 장	2020년 9월(심사 후)	취업가능	△△△	-	2년
101	4급	2020년 9월	한국지능형교 통체계협회	상근부회 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김△△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하천국장	2년
102	5급	2020년 6월	(주)용마엔지니 어링	부사장	2020년 12월	취업가능	△△△	-	-
103	고위공무원	2019년 12월	한국교통안전 공단	이사장	2020년 12월(심사 후)	취업승인	권△△	항공정책실 장	3년
104	정무직	2019년 12월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	2021년 1월	취업승인	김△△	제2차관	3년
105	5급	2019년 12월	한국농어촌공 사	일반계약 직	2020년 1월	취업제한	-	-	-
106	6급	2017년 6월	한전KDN(주)	일용직	2020년 3월	취업제한	-	-	-
107	7급	2017년 6월	계룡건설산업 (주)	단순노무 직	2020년 3월	취업가능	△△△	-	-

108	5급	201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일반계약직	2020년 4월	취업승인	△△△	-	-
109	일반직고위 공무원	2020년 4월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2021년 3월	취업불승인	-	-	-
110	별정직고위 공무원	2020년 12월	한국철도공사	대외협력부장	2021년 4월	취업승인	△△△	-	-
111	기술4급	2019년 5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021년 4월	취업가능	△△△	-	-
112	3급	2021년 1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취업가능	김△△	국가공간정보센터장	-
113	4급	2021년 5월	현대자동차(주)	상무	2021년 6월	취업가능	△△△	-	-
114	기술4급	2021년 3월	항공안전기술원	기획혁신본부장	2021년 6월	취업가능	이△△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
115	기술4급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	2020년 8월	취업가능	△△△	-	-
116	5급	2019년 12월	(주)통일감정평가법인	부장	2020년 7월	취업가능	△△△	-	-
117	정무직	2020년 11월	해외건설협회	회장	2021년 7월	취업승인	박△△	제1차관	3년
118	시설6급	2021년 6월	(주)우빈기술공사	부장	2021년 7월	취업제한	-	-	-
119	일반직고위 공무원	2020년 12월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2021년 8월	취업승인	△△△	-	-
120	4급	2021년 6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2021년 8월	취업가능	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2년

## 4. 중소벤처기업부

번호	퇴직 직급	퇴직 시기	취업 기관	취업 직위	취업 시기	심사 결과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1	4급	2016년 5월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 회장	2016년 7월	취업가능	심△△	전북지방 청 창업성장 지원과장	-
2	3급	2017년 4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 회장	2017년 5월(심사 후)	취업가능	오△△	대변인	3년
3	4급	2017년 8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 회장	2017년 9월(심사 후)	취업제한	-	-	-
4	정무직	2017년 7월	☞토니모리	사외이사	2018년 3월	취업가능	주△△	중소기업 청장	2년
5	정무직	2017년 7월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사외이사	2018년 10월(심사 후)	취업가능	주△△	중소기업 청장	3년
6	고위공무원	2018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 회장	2018년 12월	취업승인	서△△	정책기획관	~'21.12
7	고위공무원	2018년 12월	벤처기업협회	상근부 회장	2019년 11월	취업승인	김△△	광주지방 청장	~'21.01
8	정무직	2019년 4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2020년 1월	취업승인	홍△△	장관	1년
9	4급	2019년 11월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 회장	2020년 1월	취업가능	이△△	충북지방 청장	-
10	고위공무원	2020년 6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 회장	2020년 8월	취업승인	김△△	소상공인 정책실장	3년
11	4급	2020년 6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2020년 11월	취업가능	하△△	울산지방 청장	2년
12	4급	2021년 3월	SK증권☞	상무보	2021년 4월	취업가능	이△△	미래산업 팀장	~현재
13	별정직고위공무원	2021년 1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1년 7월	취업제한	-	-	-
14	별정직고위공무원	2021년 1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1년 8월	취업승인	△△△	-	-

## 5. 공정거래위원회

번호	퇴직 직급	퇴직 시기	취업 기관	취업 직위	취업 시기	심사 결과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1	4급	2015년 12월	☞LG경영개발원	비상근 고문	2016년 3월	취업가능	김△△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	-
2	4급	2015년 12월	☞만도	비상임 고문	2016년 2월	취업가능	한△△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 부단장	-
3	3급	2016년 1월	기아자동차☞	기획실C SR담당	2016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권△△	감사담당관	3년
4	4급	2016년 1월	☞현대백화점	상근고문역	2016년 4월	취업가능	강△△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장	2년
5	4급	2015년 6월	☞GS리테일	비상근 자문	2016년 5월	취업가능	△△△	-	-
6	4급	2016년 4월	☞CJ텔레닉스	상근고문	2016년 5월(심사 후)	취업가능	설△△	대구사무소장	-
7	4급	2016년 4월	☞포워드벤처스	이사	2016년 5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8	4급	2015년 10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 상근고문	2016년 7월	취업가능	임△△	광주사무소장	-
9	4급	2016년 4월	삼성물산☞	상근고문	2016년 7월	취업가능	서△△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장	-
10	4급	2016년 9월	포스코건설☞	자문역	2016년 11월	취업가능	왕△△	광주사무소장	-
11	4급	2016년 9월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2017년 1월	취업가능	박△△	제조하도급개선과장	~'18.12
12	4급	2017년 1월	법무법인광장	전문위원	2017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박△△	창조행정법무담당관	~현재
13	3급	2017년 2월	삼성전자☞	고문	2017년 6월	취업가능	△△△	국제카르텔과장	2년
14	4급	2015년 12월	제일약품☞	사외이사	2017년 9월	취업가능	김△△	규제개혁 작업단 부단장	~'23.03
15	정무직	2018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8년 3월	취업승인	신△△	부위원장	~'21.03
16	고위공무원	2015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	2017년 1월	취업제한	-	-	-

17	4급	2018년 3월	SK하이닉스 (주)	고문	2018년 5월	취업가능	△△△	-	-
18	4급	2018년 6월	계룡산업(주)	비상근 고문	2018년 8월	취업가능	△△△	-	-
19	4급	2018년 3월	(주)SK하이닉 스	고문	2018년 5월	취업제한	-	-	-
20	4급	2018년 3월	(주)SK하이닉 스	고문	2018년 5월	취업불승 인	△△		
21	5급	2019년 5월	법무법인 케이씨엘	전문위 원	2019년 7월	취업승인	윤△△	송무담당 관	~현재
22	4급	2018년 3월	학교법인 경희학원	비상근 감사	2019년 6월(심사 후)	취업가능	나△△	고객지원 담당관	~'22.07
23	4급	2019년 6월	한국콜마홀딩 스(주)	상근고 문	2019년 8월	취업가능	김△△	광주지방 사무소장	-
24	4급	2020년 1월	김장법률사무 소	위원	2020년 2월	취업가능	전△△	본부 과장	~현재
25	4급	2020년 3월	한화파워시스 템(주)	상무	2020년 6월	취업가능	김△△	서기관	-
26	4급	2020년 3월	한화디펜스(주)	상무	2021년 1월	취업가능	김△△	-	-
27	4급	2019년 6월	(주)에이에스에 이전주	사외이 사	2021년 2월	취업가능	△△△	-	-
28	4급	2021년 6월	(주)호반건설	임원	2021년 8월	취업가능	△△△	-	-

## 6. 금융위원회

번호	퇴직 직급	퇴직 시기	취업 기관	취업 직위	취업 시기	심사 결과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1	고위공무원	2014년 6월	코나아이 <sup>(주)</sup>	비상근 고문	2016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		-
2	정무직	2016년 1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2016년 6월	취업승인	정△△	부위원장	-
3	3급	2016년 5월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2016년 7월(심사 후)	취업가능	송△△	감사담당관	4년
4	고위공무원	2016년 7월	한국자금중개 <sup>(주)</sup>	대표이사	2016년 8월	취업승인	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9.08
5	3급	2015년 3월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2016년 10월	취업가능	홍△△	기획재정담당관	2년
6	정무직	2017년 7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7년 8월(심사 후)	취업승인	임△△	위원장	-
7	정무직	2017년 7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7년 9월(심사 후)	취업승인	정△△	부위원장	-
8	전문임기제 가급	2017년 7월	KB캐피탈 <sup>(주)</sup>	상근감사위원	2018년 3월	취업가능	서△△	국제협력관 국장	~'21.03
9	고위공무원	2017년 7월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2018년 10월	취업불승인	-	-	-
10	고위공무원	2019년 3월	금융결제원	원장	2019년 4월	취업승인	김△△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3년
11	정무직	2017년 7월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개방이사	2018년 8월	취업가능	정△△	부위원장	1년
12	정무직	2019년 5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9년 7월	취업승인	김△△	부위원장	1년
13	정무직	2017년 7월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자문위원	2019년 9월	취업승인	정△△	부위원장	-
14	정무직	2019년 9월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2019년 11월	취업불승인	-	-	-
15	고위공무원	2019년 2월	<sup>(주)</sup> 알루코	사외이사	2020년 3월	취업가능	임△△	대변인	~'23.03
16	4급	2018년 5월	금융결제원	커뮤니케이션실장	2019년 9월	취업가능	이△△	홍보전문관	-
17	4급	2020년 4월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2020년 6월	취업승인	김△△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3년

18	3급	2020년 5월	IBK투자증권 (주)	상근감 사위원	2020년 7월	취업가능	이△△	금융정보 분석원 기획행정 실장	2년
19	전문임기제 가급	2020년 12월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 원	2021년 2월	취업승인	△△△	-	-
20	4급	2021년 1월	삼성화재해상 보험(주)	상무	2021년 2월	취업가능	김△△	기업회계 감독팀장	-
21	3급	2020년 12월	손해보험협회	전무	2021년 3월	취업승인	김△△	기획조정 관실 감사담당 관	3년
22	4급	2020년 6월	(주)티케이케미 칼	상근감 사	2021년 4월	취업가능	이△△	FIU 기획행정 실 상호평가 대응팀장	3년

## 7. 국세청

번호	퇴직 직급	퇴직 시기	취업 기관	취업 직위	취업 시기	심사 결과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1	4급	2015년 6월	삼강엔터테인먼트	비상임감사	2016년 3월(심사 후)	취업가능	정△△	북부산세무서장	3년
2	4급	2014년 6월	한솔홈데코	사외이사	2016년 3월(심사 후)	취업가능	조△△	성동세무서장	~'20.03
3	4급	2016년 3월	대한주정판매	부사장	2016년 5월	취업가능	△△△	세무서장	-
4	6급	2015년 8월	세무법인명인 원주지점	직원	2016년 6월	취업가능	△△△	중부청	-
5	6급	2015년 6월	세무법인이우	사무장	2015년 10월	취업가능	△△△	대전청	-
6	7급	2014년 3월	케이티캐피탈	통번역전문인력	2015년 12월	취업가능	△△△	-	-
7	7급	2015년 7월	삼구아이앤씨	운전기사	2015년 7월	취업가능	△△△	-	-
8	6급	2015년 6월	대동고려삼	사원	2015년 7월	취업제한	-	-	-
9	6급	2015년 8월	답코리아세무법인	세법교육전담직원	2015년 9월	취업제한	-	-	-
10	6급	2014년 6월	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 금속공업협동조합	사무보조	2015년 9월	취업제한	-	-	-
11	7급	2016년 8월	CJ제일제당	차장	2016년 12월	취업가능	△△△	-	-
12	7급	2015년 1월	법무법인 바른	전문위원	2016년 12월	취업가능	△△△	서울청	-
13	4급	2015년 6월	디피엔케이	비상근감사	2016년 4월	취업제한	-	-	-
14	5급	2015년 6월	넥스틴	사외감사	2016년 3월	취업가능	장△△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3년
15	6급	2015년 10월	성우종합건설	감사	2016년 1월	취업가능	△△△	-	-
16	5급	2014년 2월	김장법률사무소	세무사	2016년 2월	취업제한	-	-	-
17	6급	2015년 2월	리더스금융판매	사원	2016년 4월	취업제한	-	-	-
18	6급	2015년 6월	안세회계법인	직원	2016년 7월	취업제한	-	-	-
19	6급	2015년 6월	금강건설	현장근로자	2015년 12월	취업제한	-	-	-

20	6급	2016년 12월	골드클래스(주)	계약사원	2017년 2월	취업가능	△△△	-	-
21	6급	2015년 7월	예일세무법인	세무팀본 부장	2017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	충부청	-
22	6급	2016년 2월	대창단조(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7년 3월	취업가능	송△△	부산청 중부산세무 조사 조사과	3년
23	6급	2015년 9월	세무법인다솔	직원관리 본부장	2017년 4월	취업가능	△△△	서울청	-
24	6급	2016년 12월	세무법인다솔	전문위원	2017년 4월	취업가능	△△△	서울청	-
25	6급	2016년 12월	세무법인다솔	전문위원	2017년 4월	취업가능	△△△	서울청	-
26	7급	2017년 2월	NH투자증권 (주)	WM사업 부 과장	2017년 4월	취업가능	△△△	-	-
27	7급	2017년 3월	한영회계법인	통번역직	2017년 5월	취업가능	△△△	국세청	-
28	6급	2016년 12월	이현세무법인	자문위원	2017년 5월	취업가능	조△△	서울지방국 세청 조사국	-
29	4급	2016년 6월	(주)보타바이오	비상임감 사	2017년 5월(심사 후)	취업가능	김△△	용인세무서 장	3년
30	7급	2014년 9월	안진회계법인	이사	2016년 9월	취업가능	△△△	서울청	-
31	6급	2015년 10월	(주)동승	상무	2016년 9월	취업가능	△△△	-	-
32	6급	2014년 12월	(주)맥서브	사원	2016년 10월	취업가능	△△△	-	-
33	6급	2015년 1월	(주)911무인경 비시스템	경비대원	2016년 8월	취업가능	△△△	-	-
34	6급	2016년 8월	대성세무법인	고문	2016년 10월	취업제한	-	-	-
35	6급	2015년 6월	(주)해정건설	공사현장 일용직	2016년 7월	취업제한	-	-	-
36	6급	2015년 12월	(주)월앤비전	보안원	2016년 12월	취업제한	-	-	-
37	7급	2017년 7월	(주)우리은행	차장	2017년 9월	취업가능	△△△	-	-
38	6급	2017년 6월	광교세무법인	부장	2017년 8월	취업가능	△△△	서울청	-
39	6급	2015년 9월	대신증권(주)	차장	2017년 9월	취업가능	△△△	-	-
40	고위공무 원	2015년 12월	알리코계약(주)	비상근감 사	2017년 11월	취업승인	신△△	광주지방국 세청장	~'21.11
41	6급	2017년 6월	세무법인다솔	전문위원	2017년 11월	취업가능	△△△	서울청	-
42	4급	2015년 6월	(주)휴비즈	비상근감 사	2017년 5월	취업가능	△△△	-	-

43	5급	2015년 7월	(주)메디톡스	감사	2017년 6월	취업가능	천△△	감찰담당관	~현재
44	6급	2016년 12월	세인세무법인	전산관리	2017년 4월	취업제한	-	-	-
45	6급	2015년 6월	(주)명일	보관직사원	2017년 1월	취업제한	-	-	-
46	7급	2016년 9월	참세무법인	사원	2017년 5월	취업제한	-	-	-
47	4급	2015년 12월	에스퓨얼셀(주)	비상근감사	2018년 1월	취업가능	서△△	분당세무서장	~현재(사외이사)
48	5급	2017년 12월	세무법인로고스	직원	2018년 3월	취업가능	△△△	서울청	-
49	4급	2017년 12월	(주)에프앤에프	감사	2018년 3월	취업가능	△△△	-	-
50	6급	2017년 6월	일성신약(주)	경비	2018년 1월	취업가능	△△△	-	-
51	7급	2016년 4월	(주)골든크라운	상무이사	2017년 7월	취업가능	△△△	-	-
52	6급	2017년 6월	(주)우승산업	부장	2017년 7월	취업가능	△△△	-	-
53	6급	2016년 2월	케이엠티	부장	2017년 7월	취업가능	△△△	-	-
54	7급	2017년 6월	(주)씨엔에스자산관리	기전기사	2017년 9월	취업제한	-	-	-
55	5급	2018년 6월	고려세무법인	이사	2018년 7월(심사 후)	취업승인	△△△	서울청	-
56	7급	2018년 8월	(주)KEB하나은행	차장	2018년 10월	취업가능	△△△	-	-
57	5급	2016년 12월	이니스트에스티(주)	비상근감사	2018년 9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58	5급	2016년 12월	(주)녹십자웰빙	감사	2018년 11월	취업불승인	-	-	-
59	4급	2018년 6월	(주)이렌시스	비상근감사	2019년 1월	취업가능	김△△	동수원세무서장	~'22.12
60	6급	2017년 4월	신생공업(주)	재경부장	2018년 12월	취업가능	△△△	-	-
61	7급	2015년 12월	세무법인호연	실장	2018년 4월	취업가능	△△△	서울청	-
62	6급	2017년 8월	씨모피셔사이언티픽솔루션스	책임	2018년 2월	취업가능	△△△	-	-
63	7급	2016년 2월	세무법인신승	실장	2018년 3월	취업가능	△△△	중부청	-
64	6급	2016년 12월	자이에스앤디(주)	경비	2018년 6월	취업가능	△△△	-	-
65	7급	2017년 10월	(주)모심푸드	생산직원	2018년 2월	취업가능	△△△	-	-
66	6급	2015년 12월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경비	2018년 2월	취업가능	△△△	-	-

67	7급	2017년 12월	가림종합건설 (주)	일용직	2018년 5월	취업제한	-	-	-
68	4급	2015년 12월	청광종합건설 (주)	비상근감 사	2018년 3월	취업제한	-	-	-
69	6급	2017년 12월	(주)화동뉴텍	생산팀사 원	2018년 4월	취업제한	-	-	-
70	7급	2017년 12월	(주)하이노서 비스	청소원	2018년 5월	취업제한	-	-	-
71	5급	2017년 10월	지스마트글로벌 빌주식회사	사외이사	2018년 3월	취업제한	-	-	-
72	7급	2016년 8월	(주)휴콤	방재직	2018년 4월	취업제한	-	-	-
73	6급	2017년 6월	(주)테크윈	현장안전 관리직원	2018년 3월	취업제한	-	-	-
74	6급	2016년 2월	중앙구시설관 리공단	미회원	2018년 3월	취업제한	-	-	-
75	6급	2018년 12월	한국금융투자 협회	사원	2019년 1월	취업승인	△△△	-	-
76	6급	2018년 6월	(주)하림지주	수석부장	2019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77	6급	2019년 1월	(주)알에프텍	상무	2019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78	6급	2018년 12월	세무법인 세연	전문위원	2019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	서울청	-
79	6급	2018년 12월	인정세무법인	팀장	2019년 4월	취업승인	△△△	광주청	-
80	7급	2018년 6월	세무법인 신승	부장	2019년 4월	취업가능	△△△	충부청	-
81	3급	2018년 12월	(주)경동인베스 트	사외이사	2019년 4월	취업가능	이△△	충부지방국 세청 납세자보호 1담당관	-
82	6급	2017년 12월	(주)김앤드이	일용직	2018년 10월	취업가능	△△△	-	-
83	6급	2019년 3월	한국전력공사	사내번호 사	2019년 3월	취업가능	△△△	-	-
84	7급	2017년 6월	코레일테크(주)	시설관리 원	2018년 7월	취업가능	△△△	-	-
85	6급	2018년 6월	세무법인 올림	직원	2018년 8월	취업가능	△△△	서울청	-
86	7급	2016년 12월	(주)캡스텍	경비원	2018년 9월	취업가능	△△△	-	-
87	6급	2017년 6월	삼일제약(주)	경비원	2018년 7월	취업가능	△△△	-	-
88	7급	2018년 6월	(주)남부건설	경비원	2018년 10월	취업가능	△△△	-	-
89	7급	2018년 6월	(주)조은세이프	경비원	2018년 10월	취업가능	△△△	-	-

90	6급	2018년 12월	(☞)그라비티	사외이사	2019년 5월	취업가능	△△△	-	-
91	6급	2017년 12월	세무법인 세연	팀장	2019년 6월	취업가능	△△△	인천청	-
92	7급	2019년 4월	NH투자증권 (☞)	과장	2019년 6월	취업가능	△△△	-	-
93	6급	2019년 4월	(☞)부산은행	과장	2019년 7월	취업승인	△△△	-	-
94	7급	2016년 8월	(☞)맥서브	사원	2018년 8월	취업가능	△△△	-	-
95	7급	2017년 7월	대봉엘에프영 어조합법인	대리	2018년 10월	취업제한	-	-	-
96	7급	2017년 2월	(☞)이마트에브 리데이	영업보조	2018년 7월	취업제한	-	-	-
97	6급	2017년 12월	다우종합건설 (☞)	일용직	2018년 11월	취업제한	-	-	-
98	7급	2016년 12월	(☞)수산인더스 트리	전기정비 보조	2018년 11월	취업제한	-	-	-
99	6급	2016년 10월	정진회계법인	고문	2018년 11월	취업제한	-	-	-
100	6급	2019년 6월	태성회계법인	부장	2019년 8월	취업가능	△△△	서울청	-
101	7급	2019년 7월	(☞)우리은행	과장	2019년 9월	취업가능	△△△	-	-
102	7급	2016년 12월	옵티멀에너지 서비스(☞)	전기정비 보조원	2019년 9월	취업가능	△△△	-	-
103	고위공무원 원	2019년 6월	대한주정판매 (☞)	대표이사	2019년 9월	취업가능	최△△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3년
104	6급	2018년 6월	인일회계법인	실장	2019년 10월	취업가능	△△△	-	-
105	7급	2018년 12월	우리관리(☞)	미화파트	2019년 8월	취업가능	△△△	-	-
106	6급	2017년 12월	광고회계법인	사원	2019년 3월	취업가능	△△△	-	-
107	6급	2017년 6월	(☞)세안텍스	미화원	2019년 1월	취업가능	△△△	-	-
108	6급	2018년 8월	KT텔레캅(☞)	경비원	2019년 1월	취업가능	△△△	-	-
109	6급	2016년 12월	세무법인 다솔	계약직	2019년 2월	취업제한	-	-	-
110	6급	2018년 12월	대원종합관리 (☞)	전기대리	2019년 4월	취업제한	-	-	-
111	7급	2016년 12월	(☞)부강티엔씨	직영반장	2019년 3월	취업제한	-	-	-
112	5급	2018년 10월	광고세무법인	부장	2019년 5월	취업제한	-	-	-
113	6급	2018년 3월	에일세무법인	공인회계 사	2019년 1월	취업제한	-	-	-

114	6급	2016년 12월	㈜아주관리	보안대원	2019년 5월	취업제한	-	-	-
115	6급	2016년 10월	성원산업개발 ㈜	경비원	2019년 4월	취업가능	△△△	-	-
116	6급	2016년 6월	㈜휴비스	조경관리 원	2019년 3월	취업제한	-	-	-
117	5급	2019년 12월	광교세무법인	팀장	2020년 3월	취업가능	△△△	-	-
118	6급	2019년 12월	㈜우진플라임	상근감사	2020년 3월	취업가능	박△△	영등포세무 서 별인납세과	3년
119	7급	2020년 1월	쿠팡㈜	사원	2020년 3월	취업가능	△△△	-	-
120	6급	2020년 1월	세무법인 더택스	변호사	2020년 3월	취업가능	△△△	-	-
121	3급	2017년 12월	제이씨현시스 템㈜	사외이사	2020년 3월	취업가능	김△△	성동세무서 장	3년
122	6급	2020년 2월	신승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2020년 4월	취업가능	△△△	-	-
123	고위공무 원	2018년 6월	㈜디지털대성	사외이사	2020년 3월(심사 후)	취업가능	남△△	중부시장국 세청 정세송무국 장	3년
124	4급	2019년 6월	㈜경신희딩스	비상임감 사	2020년 3월(심사 후)	취업가능	△△△	서기관	-
125	6급	2019년 1월	제이준코스메 틱㈜	기타비상 무이사	2020년 3월	취업가능	윤△△	서울지방국 세청 송무국송무 3과	3년
126	4급	2019년 6월	우리조명㈜	사외이사	2020년 3월	취업가능	최△△	서초세무서 장	3년
127	7급	2018년 10월	㈜서연탐매탈	사외이사	2020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배△△	조사관	2년
128	4급	2017년 12월	우리들계약㈜	사외이사	2020년 6월	취업가능	이△△	잠실세무서 장	3년
129	6급	2018년 6월	㈜프로에스콤	특수경비 대원	2019년 8월	취업가능	△△△	-	-
130	7급	2018년 12월	광인산업㈜	보일러기 사	2019년 8월	취업가능	△△△	-	-
131	7급	2017년 12월	㈜김앤드이	단순일용 직	2019년 10월	취업제한	-	-	-
132	4급	2017년 6월	성도이현회계 법인	고문	2019년 9월	취업제한	-	-	-
133	6급	2018년 2월	쉬프트정보통 신㈜	운전직	2019년 10월	취업제한	-	-	-
134	7급	2019년 6월	한양시스템㈜	보안대원	2019년 11월	취업제한	-	-	-
135	6급	2016년 12월	㈜로이안	경비원	2019년 9월	취업가능	△△△	-	-

136	6급	2020년 6월	☞LG화학	선임	2020년 7월	취업가능	△△△	-	-
137	5급	2018년 12월	☞티에스아이	사외이사	2020년 7월 (심사 후)	취업가능	감△△	삼성세무서 법인1과장	3년
138	6급	2020년 4월	세무법인 신승	실장	2020년 10월	취업가능	△△△	-	-
139	6급	2020년 10월	삼성생명보험 ☞	세무자문	2021년 1월	취업가능	△△△	-	-
140	7급	2020년 11월	한국투자증권 ☞	차장	2020년 12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141	6급	2017년 12월	☞정도설비	일용직	2020년 3월	취업가능	△△△	-	-
142	7급	2019년 12월	백상기업☞	미회원	2020년 6월	취업가능	△△△	-	-
143	6급	2018년 12월	☞다하리	건물관리 사무소장	2020년 3월	취업가능	△△△	-	-
144	5급	2019년 6월	☞수성	사외이사	2020년 1월	취업가능	△△△	-	-
145	6급	2018년 6월	☞고암	보안요원	2020년 4월	취업가능	△△△	-	-
146	6급	2020년 1월	에스오일☞	전임법무 원	2020년 1월	취업가능	△△△	-	-
147	7급	2019년 12월	☞아이비에스 인터스트리	미회원	2020년 1월	취업제한	-	-	-
148	6급	2018년 12월	☞이오티앤디	경비대원	2020년 5월	취업제한	-	-	-
149	6급	2019년 12월	세무법인 자성	디엘텍스 지점 직원	2020년 1월	취업제한	-	-	-
150	6급	2018년 6월	이촌세무법인	시간제근 무자	2020년 4월	취업제한	-	-	-
151	5급	2020년 6월	이성씨앤아이 ☞	고문	2020년 6월	취업제한	-	-	-
152	7급	2019년 12월	대림산업☞	사원	2020년 1월	취업제한	-	-	-
153	6급	2017년 6월	청주시시설관 리공단	기간제근 로자	2020년 6월	취업가능	△△△	-	-
154	6급	2019년 4월	세무법인 터텍스	사원	2021년 2월	취업가능	△△△	-	-
155	4급	2020년 6월	한솔인티큐브 ☞	사외이사	2021년 3월	취업가능	김△△	용산세무서 장	3년
156	6급	2020년 6월	미추홀세무법 인	관리부장	2021년 3월	취업가능	△△△	-	-
157	5급	2020년 10월	☞타이거일렉	비상근감 사	2021년 4월	취업가능	김△△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3년
158	4급	2019년 6월	☞CMG계약	사외이사	2021년 3월	취업가능	박△△	마포세무서 장	3년

159	4급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 공사	비상임이 사	2021년 5월	취업가능	△△△	-	-
160	세무6급	2021년 4월	충북테크노파 크	선임	2021년 5월	취업가능	△△△	-	-
161	전산6급	2019년 6월	한국수자원공 사	사무보조	2020년 12월	취업가능	△△△	-	-
162	세무7급	2021년 6월	신한금융투자 (주)	차장	2021년 7월	취업가능	△△△	-	-
163	세무6급	2021년 6월	대신건설산업 (주)	상무이사	2021년 7월	취업가능	△△△	-	-
164	운전7급	2017년 12월	(주)삼구아이엔 씨	운전기사	2020년 9월	취업가능	△△△	-	-
165	방호7급	2019년 12월	(주)맥서브	환경미화 원	2020년 10월	취업제한	-	-	-
166	사무운영7 급	2020년 2월	한국환경공단	자원관리 도우미	2020년 9월	취업제한	-	-	-
167	세무6급	2021년 6월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재무이사	2021년 9월	취업가능	△△△	-	-
168	세무7급	2021년 4월	부산교통공사	운영9급	2021년 8월	취업가능	△△△	-	-

## 8. 금융감독원

번호	퇴직 직급	퇴직 시기	취업 기관	취업 직위	취업 시기	심사 결과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1	직원4급	2016년 1월	한국투자증권(☞)	차장	2016년 2월	취업승인	△△△	-	-
2	직원3급	2016년 1월	삼화페인트공업(☞)	상임감사	2016년 2월	취업가능	박△△	대구지원	~'21.02
3	직원2급	2016년 2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감독이사	2016년 3월	취업가능	장△△	저축은행감독국장	4년
4	직원2급	2016년 2월	롯데카드(☞)	감사	2016년 3월	취업가능	임△△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3년
5	직원2급	2015년 6월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2016년 3월(심사 후)	취업가능	김△△	일반은행 검사국	
6	직원2급	2016년 3월	(☞)유진투자증권	경영임원	2016년 3월	취업가능	문△△	북경사무소장	4년
7	직원2급	2016년 3월	(☞)신한금융투자	상근감사위원	2016년 3월(심사 후)	취업가능	정△△	북경사무소(홍콩주재원)	4년
8	직원1급	2016년 4월	연합자산관리(☞)	감사	2016년 5월	취업제한	-	-	-
9	직원1급	2015년 3월	두산인프라코어(☞)	고문	2016년 5월	취업가능	변△△	거시감독국	-
10	직원2급	2014년 12월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감사	2016년 5월	취업가능	이△△	감독총괄국 법무실	-
11	직원1급	2016년 4월	연합자산관리(☞)	감사	2016년 6월	취업불승인	-	-	-
12	직원1급	2016년 6월	KB생명보험(☞)	전문이사	2016년 7월	취업불승인	-	-	-
13	직원2급	2016년 4월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16년 6월(심사 후)	취업가능	김△△	금융교육국	-
14	직원1급	2016년 6월	고려휴먼스(☞)	대표이사	2016년 6월(심사 후)	취업가능	조△△	일반은행 검사국장	4년
15	직원1급	2015년 3월	디에스자산운용(☞)	비상근고문	2016년 7월	취업가능	천△△	거시감독국	-
16	직원1급	2016년 7월	태림페이퍼(☞)	부사장	2016년 8월	취업가능	김△△	금융혁신국장	-
17	직원2급	2015년 6월	(☞)씨에이에스	전문위원	2016년 8월	취업가능	박△△	소비자보호총괄국	-
18	직원1급	2016년 4월	SK루브리컨츠(☞)	고문	2016년 8월	취업가능	조△△	금융교육국	-

19	직원4급	2015년 10월	하나금융투자(주)	차장	2016년 8월	취업승인	△△△	자산운용 감독실	-
20	직원2급	2016년 7월	(주)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16년 9월	취업가능	남△△	제주지원 장	-
21	직원2급	2016년 9월	현대캐머셜(주)	산업금융 담당이사	2016년 10월	취업가능	노△△	인재개발 원	5년
22	직원1급	2016년 6월	프라이스워터하 우스쿠퍼스컨설 팅	부대표	2016년 11월	취업승인	△△△	금융교육 국	-
23	직원2급	2016년 11월	하나금융투자(주)	상무	2017년 1월	취업가능	양△△	금융교육 국 부국장조 사역	2년
24	직원2급	2015년 6월	(주)리드코프	준법관리실 장	2016년 12월	취업가능	신△△	특수은행 검사국 부국장	-
25	직원4급	2014년 2월	(주)연합뉴스	사원	2016년 2월	취업가능	서△△	공보실	-
26	직원1급	2017년 2월	이레오토모티브 시스템(주)	고문	2017년 3월	취업가능	조△△	금융혁신 국	-
27	직원2급	2017년 2월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2017년 4월	취업가능	송△△	총무국	-
28	직원3급	2017년 6월	(주)오케이저축은 행	상무	2017년 7월	취업가능	나△△	여신전문 검사실 검사3팀	-
29	직원3급	2015년 12월	신용협동조합중 앙회	순회감독역	2016년 5월	취업가능	최△△	특수은행 검사국	-
30	직원2급	2018년 1월	아주캐피탈(주)	부사장	2018년 2월	취업가능	전△△	총무국	-
31	임원	2017년 11월	금융보안원	원장	2018년 3월	취업제한	-	-	-
32	직원2급	2018년 2월	(주)전북은행	상임감사위원	2018년 3월	취업가능	신△△	금융혁신 국	~현재
33	임원	2017년 11월	금융보안원	원장	2018년 4월	취업승인	김△△	은행담당 부원장보	-
34	임원	2017년 11월	한화종합화학(주)	전무	2018년 4월	취업가능	△△△	임원실	-
35	임원	2017년 11월	한국금융안전(주)	대표이사	2018년 5월	취업가능	류△△	임원실	-
36	임원	2017년 10월	보험연구원	초빙연구 자문위원	2018년 6월	취업승인	△△△	-	-
37	직원2급	2018년 6월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	2018년 7월	취업가능	하△△	불법금융 대응단	~'21.07
38	직원2급	2018년 4월	울산항만공사	비상임감사	2018년 10월	취업가능	이△△	금융중심 지원센터	-
39	임원	2018년 3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8년 10월(심 사 후)	취업승인	△△△	임원실	-

40	직원2급	2019년 1월	대원강업(주)	상근감사	2019년 3월	취업가능	이△△	금융교육 국	3년
41	직원2급	2018년 12월	JT친애저축은행 (주)	사외이사	2019년 3월	취업가능	최△△	금융교육 국 부국장	3년
42	직원2급	2018년 12월	루미마이크로(주)	사외이사	2019년 4월	취업가능	김△△	인적자원 개발실 부국장	3년
43	직원2급	2019년 3월	(주)무궁화신탁	고문	2019년 4월	취업가능	△△△	인적자원 개발실	-
44	직원2급	2018년 12월	대부업및대부중 개업협회	강사	2019년 5월	취업가능	△△△	인적자원 개발실	-
45	직원2급	2018년 12월	(주)대한저축은행	상임감사	2019년 4월	취업가능	△△△	금융교육 국	-
46	직원4급	2018년 9월	(주)리트코	실장	2019년 3월	취업가능	△△△	인적자원 개발실	-
47	직원2급	2019년 5월	디에스투자증권 (주)	감사	2019년 6월	취업가능	류△△	감독총괄 국 검사지원 단	-
48	직원2급	2019년 6월	현대차증권(주)	상무	2019년 9월	취업가능	유△△	불법금융 대응단 실장	3년
49	임원	2017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19년 9월	취업승인	△△△	-	-
50	직원4급	2019년 7월	연합자산관리(주)	부장	2019년 9월	취업가능	△△△	-	-
51	임원	2018년 3월	학교법인 단호학원	비상근이사	2019년 10월	취업가능	△△△	-	-
52	직원3급	2019년 11월	(주)리드코프	이사	2019년 12월	취업가능	△△△	-	-
53	직원4급	2019년 10월	흥국화재해상보 험(주)	차장	2020년 2월	취업승인	△△△	-	-
54	직원2급	2019년 12월	(주)부산은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2020년 2월	취업가능	△△△	-	-
55	직원2급	2018년 12월	(주)애큐온저축은 행	전무	2020년 2월	취업가능	최△△	금융교육 국 부국장	1년
56	직원1급	2019년 12월	동성계약(주)	고문	2020년 3월	취업승인	△△△	-	-
57	직원2급	2020년 1월	브이아이자산운 용(주)	상임감사	2020년 3월	취업가능	△△△	-	-
58	직원2급	2020년 2월	하나금융투자(주)	상무	2020년 3월	취업가능	이△△	회계조사 국장	3년
59	직원2급	2019년 12월	(주)바로저축은행	감사업무 집행임원	2020년 3월	취업가능	이△△	-	-
60	직원2급	2020년 2월	키움증권(주)	전무	2020년 4월	취업가능	김△△	-	~'20.12
61	직원2급	2020년 2월	씨티그룹글로벌 마켓증권(주)	상근감사	2020년 3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62	직원2급	2019년 12월	(☞)참저축은행	사외이사	2020년 4월	취업가능	오△△	-	-
63	직원2급	2019년 12월	삼성생명보험(☞)	컨설턴트	2020년 4월	취업가능	△△△	-	-
64	직원2급	2019년 5월	(☞)하나자산신탁	상근감사위원	2020년 4월	취업가능	이△△	충북지원 장	-
65	직원4급	2020년 3월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2020년 4월(심사 후)	취업승인	△△△	-	-
66	임원	2020년 3월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년 4월(심사 후)	취업승인	△△△	-	-
67	직원2급	2020년 3월	롯데카드(☞)	상무	2020년 4월	취업가능	고△△	은행리스 크업무실 장	-
68	직원2급	2018년 12월	오성첨단소재(☞)	사외이사	2020년 4월(심사 후)	취업가능	김△△	인적자원 개발실 부국장	-
69	직원2급	2020년 3월	법무법인 태평양	수석전문위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	-	-
70	직원2급	2020년 3월	(☞)BNK투자증권	전무	2020년 5월	취업가능	△△△	-	-
71	직원2급	2020년 3월	(☞)하나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0년 5월	취업가능	이△△	총무국 인사팀장	-
72	직원2급	2020년 4월	(☞)SBI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0년 6월	취업가능	정△△	핀테크현 장자문단 장	-
73	직원2급	2020년 5월	(☞)삼성생명금융 서비스보험대리 점	상근고문	2020년 7월	취업가능	△△△	-	-
74	직원2급	2020년 5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0년 7월	취업가능	이△△	픽테크혁 신실	-
75	직원2급	2020년 7월	보험개발원	계리전문위원	2020년 9월	취업승인	△△△	-	-
76	직원2급	2019년 3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20년 11월	취업가능	이△△	금감원 부원장	-
77	직원2급	2020년 9월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2021년 1월	취업가능	임△△	도료사무 소장	-
78	임원	2020년 6월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2020-12 -01	취업승인	유△△	수석부원 장	-
79	직원1급	2020년 3월	(☞)디모아	자문위원	2020-12 -01	취업가능	△△△	-	-
80	직원3급	2019년 6월	(☞)씨에이에스	위원	2020년 12월	취업가능	△△△	소비자보 호총괄국	-
81	직원2급	2020년 3월	메리츠화재해상 보험(☞)	전무	2021년 1월	취업가능	서△△	금융교육 국	-
82	직원2급	2020년 11월	(☞)유진저축은행	감사	2020년 12월	취업가능	우△△	금융교육 국	-

83	직원1급	2020년 11월	디케이(☞)	비상임감사	2020년 12월	취업가능	△△△	-	-
84	직원2급	2019년 3월	(☞)현대자산운용	고문	2021년 2월	취업가능	△△△	-	-
85	직원3급	2020년 12월	(☞)참저축은행	사외이사	2021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이△△	-	-
86	직원3급	2021년 1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1년 3월	취업가능	임△△	회계관리 국	-
87	직원3급	2021년 1월	현대캐피탈(☞)	정책지원실 장	2021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정△△	-	-
88	직원4급	2020년 12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1년 2월(심사 후)	취업가능	△△△	-	-
89	직원3급	2021년 2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21년 4월	취업가능	△△△	-	-
90	직원2급	2021년 2월	한국금융투자협 회	자율규제본 부장	2021년 4월	취업가능	이△△	금융교육 국장	-
91	직원2급	2021년 2월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 원	2021년 4월	취업가능	정△△	거시감독 국	-
92	직원3급	2021년 3월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2021년 5월	취업승인	조△	회계조사 국	-
93	임원	2020년 11월	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	2021년 6월	취업승인	△△△	-	3년
94	임원	2020년 11월	한국기업데이터 (☞)	전문이사	2021년 5월	취업승인	정△△	소비자권 익보호 부원장보	-
95	직원3급	2021년 4월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2021년 6월	취업가능	△△△	-	-
96	직원2급	2021년 4월	법무법인 광장	고문	2021년 5월	취업가능	김△△	불법금융 대응단	-
97	직원2급	2021년 5월	두나무(☞)	고객보호실 장	2021년 7월	취업가능	이△△	핀테크현 장지원자 문역 부국장	-
98	직원2급	2021년 5월	유진투자증권(☞)	감사총괄임 원	2021년 7월	취업가능	송△△	금융교육 국	1년
99	직원3급	2021년 5월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2021년 6월	취업가능	정△△	자본시장 조사국	-
100	직원3급	2021년 5월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 원	2021년 7월	취업가능	채△△	생명보험 검사국	-
101	직원1급	2021년 6월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2021년 7월	취업승인	강△△	금융협력 관 실장	-
102	직원1급	2021년 6월	방위산업공제조 합	상근부이사 장	2021년 7월	취업불승 인	-	-	-
103	직원1급	2021년 4월	(☞)엠디엠	부사장	2021년 8월	취업제한	-	-	-

104	직원2급	2021년 6월	IBK연금보험(주)	영업부부장	2021년 8월	취업가능	원△△	인천지원 장	2년
105	직원2급	2021년 6월	교보리얼코(주)	고문	2021년 8월	취업가능	△△△	-	-
106	직원3급	2019년 9월	(주)카카오페이	정책실장	2021년 8월	취업가능	추△△	(노조위원 장)	-
107	직원1급	2021년 4월	(주)엠디엠	부사장	2021년 8월	취업승인	△△△	-	-
108	직원2급	2021년 7월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2021년 9월	취업승인	△△△	-	-
109	직원2급	2021년 6월	법무법인 민주	고문	2021년 8월	취업가능	△△△	-	-
110	직원2급	2021년 7월	한화디펜스(주)	고문	2021년 9월	취업가능	△△△	-	-
111	직원1급	2021년 7월	(주)삼성경제연구 소	상근고문	2021년 9월	취업가능	△△△	-	-

## [부록3]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 I. 분석 개요

- 사업연도 기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대상자가 재취업한 기관 및 기업이 재취업자 출신 부처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은 현황을 조사하였음
  - 데이터 조회일: 2022년 1월 13일(목)
  - 자료 출처: e-나라도움 정보공시 조회
- 조사 대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출신이 재취업한 기관
  - 공정위와 금융위는 일반보조사업이 있었으나, 재취업심사 대상자 중 재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받은 기관에 해당하는 바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국세청과 금감원은 시행한 일반보조사업이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II. 분석 결과

## 1. 기획재정부

#### □ 국제금융센터

[표 60] 국제금융센터 원장직 재취업 현황

직책	성명	재직 기간	주요 경력
제5대 원장	정△△	'07.05~'10.05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6대 원장	이△△	'10.05~'13.05	기재부 FTA 국내대책 본부장,

제7대 원장	김△△	'13.06~'16.06	대외경제국장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제8대 원장	정△△	'16.06~'19.06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지역발전위 지역발전기획단 단장
제9대 원장	최△△	'19.06~ 현	기재부 재정기획국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 2016.06.와 2019.06에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 재취업함

[표 61] 국제금융센터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 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2,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의 상시모니터링</li> <li>○ 국내외 금융시장간 정보수집 네트워크 구축, 국제금융 관련정보의 적기공급</li> <li>○ 국제금융정책관련 대응전략 제시</li> <li>○ 외환조기경보 시스템의 상시가동 및 관리</li> <li>○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정부의 IR 활동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중심지 소재거점 마련</li> </ul>
2018	2,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li> <li>○ 외국계 투자자 시각, 대한 투자 및 특이동향 상시감시 및 분석</li> <li>○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당국에 대한 건의,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 지원업무 수행</li> <li>○ 정부, 금융회사 등의 대외신인도 상향 지원 활동, 환 리스크 관리 등 국제금융업무 지원 등</li> <li>○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자본유출입 등 각 분야별 모니터링 수행</li> </ul>
2019	2,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li> <li>○ 외국계 투자자 시각, 대한 투자 및 특이동향</li> </ul>

		<p>상시감시 및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당국에 대한 건의,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 지원업무 수행</li> <li>○ 정부, 금융회사 등의 대외신인도 상향 지원 활동, 환 리스크 관리 등 국제금융업무 지원 등</li> <li>○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자본유출입 등 각 분야별 모니터링 수행</li> </ul>
2020	2,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li> <li>○ 외국계 투자자 시각, 대한 투자 및 특이동향 상시감시 및 분석</li> <li>○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당국에 대한 건의, 비상사태 발생시 정부 지원업무 수행</li> <li>○ 정부, 금융회사 등의 대외신인도 상향 지원 활동, 환 리스크 관리 등 국제금융업무 지원 등</li> <li>○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자본유출입 등 각 분야별 모니터링 수행</li> </ul>
<b>합계</b>	<b>8,200,000</b>	

※2021년은 해당 없음.

- 이들이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제금융센터는 2017년과 2018년에 각 20억 원, 2019년과 2020년에는 각 2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음
  - 국제금융센터는 해당 지원금으로 정책당국 등을 대상으로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 더불어, 국제금융센터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지금까지 447억원(매년 20여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아와 논란이 일기도 함
  -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직원 중 국제금융센터에 재취업한 2급 이상 퇴직임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관(前官) 예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장(2명)·주임교수(1명) 총 3명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음<sup>83)</sup>

## 2. 산업통상자원부

### □ 공사·공단 등

- 산업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곳 중 산업부 출신 재취업자가 있는 공사·공단의 현황을 살펴보았음

[표 62] 산업부 산하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기관별 합계
(재)FITI 시험연구원	-	120,000	-	140,000	260,000
한국가스 공사	7,049,000	7,049,000	10,500,000	12,861,000	37,459,000
한국가스 안전공사	9,643,853	9,658,792	19,968,456	12,067,000	51,338,101
한국광기 술원	384,000	77,000	1,577,000	2,000,000	4,038,000
한국남부 발전	2,557,743	3,573,700	15,871,573	259,200	22,262,216
한국동서 발전	2,830,200	3,705,800	3,862,650	1,337,170	11,735,820
한국수력 원자력	4,799,400	5,524,500	6,599,300	1,079,700	18,002,900
한국에너 지공단	603,906,400	664,929,058	520,897,000	717,109,000	2,506,841,458
한국전기 안전공사	98,486,505	100,165,211	98,604,648	104,313,950	401,570,314
한국전력 공사	243,417,452	286,601,788	267,961,623	373,323,250	1,171,304,113
한국지역 난방공사	449,200	546,257	446,800	501,800	1,944,057

83) 김영일 기자. 「한국은행, 법적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에 447억 지원」. 더 퍼블릭 (2020.10.24.자 기사).

년도별 합계	973,525,770	1,081,953,124	946,291,069	1,224,994,090	4,226,755,979
-----------	-------------	---------------	-------------	---------------	---------------

※2021년은 해당 없음.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부로부터 2018년에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2020년에는 글로벌 환경기준 대응 친환경 섬유소재 제조 지원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지원받았음. 2021년 10월에 산업부 국장급(3급) 출신이 원장으로 재취업하였음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 2017.12.와 2019.7.에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사장으로 재취업하였음. 한국가스공사는 산업부로부터 가스냉방 사업으로 매년 70~10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구 구축사업으로 40억 원을 추가로 받았음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직에 2016.10.과 2019.9.에 산업부 4급 출신 공무원이 재취업하였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지역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명목임. 그 외에 2017년에 한국형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이전 기반 구축으로 1억원을 지원받았음
- (한국광기술원) 광기술원 본부장 자리에 2016.11.와 2020.6.에 각 산업부 4급 출신이 재취업하였음. 광기술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사업(2017년 384,000천원),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기술 지원사업(2018년 77,000천원, 2019년 77,000천 원, 2020년 500,000천 원), 광융합산업 플랫폼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2019~2020년 각 1,500,000천 원)으로 산업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음
- (한국남부발전) 2021.3.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출신이 사장으로 재취업하였음. 산업부는 한국남부발전에 주로 지역별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음. 남부발전 본사의 경우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사업으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총 74,700천 원을 지원받았으며, 2018년에 발전에너지업종 감축연구회 과제지원사업으로 110,000천 원을, 2019년에는 하동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사업으로

12,369,473천원을 지원받았음

- (한국동서발전) 2018.2.에 동서발전 제7대 사장으로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재취업하였으며, 2021.8.에는 산업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하였음. 한국동서발전 역시 주로 지역별 지원사업에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본사의 경우 2020년 발전업종 감축연구화 공통과제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받았음
- (한국수력원자력) 2016.11. 산업부 제1차관 출신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제8대 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음.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역별 발전소의 장학금과 교육기자재 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음
- (한국에너지공단) 2021.6.에 산업부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출신이 공단 기후대응이사로 재취업한 바 있음.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부로부터 주로 농어촌전기공급사업이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장학금 및 시설개선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음
- (한국전기안전공사) 2018.4.에 산업부 울산자유무역관리원장(4급) 출신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으로 재취업하였음.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본부들은 산업부로부터 주로 취약시설개선사업, 주기별 점검, 긴급출동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지원을 받았으며, 공사 본부는 주로 전기안전 점검장비, 중대사고 조사 등으로 지원받았음
- (한국전력공사) 2021.5.에 산업부 제1차관 출신이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으로 재취업했음. 한전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해외사업모델개발 타당성조사, 축냉설비 등으로 지원받았음
-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부 4급 출신이 각각 2017.3.와 2021.2.에 상임이사로 재취업했음. 지역난방공사역시 지역지사별로 지원을 받았음

## □ 산업부 유관 협회/진흥회

###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2020.6.에 산업부 3급인 산업재난담당관 출신이 본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63]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2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프리카 인프라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li> <li>○ 중앙아 건설기계 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li> </ul>
2018	0	-
2019	48,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건설기계 융복합 솔루션센터 조성 사전기획</li> <li>○ 한·미얀마 건설기계 산업협력</li> </ul>
2020	40,587	○ 한국국제건설기계전
<b>합계</b>	<b>304,409</b>	-

- 본 협회는 산업부로부터 네트워크 구축, 전시회 개최 및 산업협력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음

○ 한국계량측정협회

- 2016.7.에 산업부 3급 출신이, 이어서 2019.10.에는 산업부 4급 출신이 본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였음

[표 64] 한국계량측정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61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불량계량기 신고시스템 운영</li> <li>○ 소비자감시원 운영</li> <li>○ 계량 사후관리 및 불량계량기 신고에 대한 홍보</li> <li>○ 계량기사업자 대상 교육</li> <li>○ 계량공무원 대상 전문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li> </ul>
2018	65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불량계량기 신고제도 운영</li> <li>○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li> <li>○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li> <li>○ 법정단위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li> <li>○ 소비자감시원 운영</li> </ul>
2019	63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li> <li>○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교육</li> <li>○ 불법, 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li> <li>○ 소비자감시원 운영</li> <li>○ 대중매체 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li> </ul>
2020	86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 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사용 촉진</li> <li>○ 소비자감시원 운영</li> <li>○ 불법, 불량 계량기 신고제도 운영</li> <li>○ 계량공무원 및 사업자 교육</li> <li>○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li> <li>○ ISO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li> </ul>
<b>합계</b>	<b>2,779,000</b>	-

- 본 협회는 매년 비슷한 항목으로 6~8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음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 본 협회의 경우 2020.8.에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출신이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65]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30,000	○ 인도네시아 공작기계 테크니컬센터 지원

		사업 타당성 조사
2018	150,000	○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19	0	-
2020	32,000	○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b>합계</b>	<b>212,000</b>	-

- 본 협회는 주로 타당성 조사 및 공작기계전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왔음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 본 협회의 경우 산업부 4급 출신이 각각 2018.4.와 2021.7.에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66]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140,000	○ 몰트리올의정서 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 국내 전시 지원사업
2018	0	-
2019	62,000	○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2020	0	-
<b>합계</b>	<b>202,000</b>	-

- 본 협회는 정책연구 개발 및 전시 지원사업을 명목으로 산업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왔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본 연합회의 경우 2019.8.에 산업부 연구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전제도 과장)이 이사직으로, 2020.12.에는 고위공무원(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이 상근부회장직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6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430,000	○ 패션 정보공유 및 패션시장 조사
2018	1,373,000	○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 ○ 패션 정보공유 및 패션시장 조사 ○ 유망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지원 ○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사업 ○ 섬유생산기업정보 조사 및 시스템 유지·관리
2019	1,380,000	○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 섬유생산 기업정보 조사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
2020	1,296,905	○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 글로벌 환경기준 대응 친환경 섬유소재 제조 지원 ○ 섬유패션 빅데이터 구축 ○ 섬유생산 기업정보 조사 및 시스템 유지·관리
합계	4,479,905	-

- 본 연합회는 산업부로부터 인력양성 및 조사 등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음

○ 한국시멘트협회

- 2020.6.에 산업부 4급 출신이 본 협회의 전무이사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68] 한국시멘트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20,000	○ 시멘트업종 감축연구회 공통과제 지원사업
2018	30,000	○ 시멘트업종 감축연구회 공통과제 지원사업

2019	103,000	○ 시멘트업종 감축연구회 공통과제 지원사업 ○ 시멘트업종 감축연구회 전략과제 지원사업
2020	28,000	○ 시멘트업종 감축연구회 공통과제 지원사업
<b>합계</b>	<b>181,000</b>	-

- 산업부는 시멘트업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018.4.에 산업부 4급 출신이 본 협회의 상무로, 2018.12.에는 제1차관 출신이 회장직으로, 2020.5.에는 4급 출신이 상무로 재취업을 한 바 있음
- 본 협회는 2020년에 수소모빌리티 쇼를 위한 추경으로 7천2백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음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2018.5.에 산업부 4급 출신이 본 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69]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61,000	○ 발전플랜트 기자재 제조 우수 중소기업 해외 유력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사업
2018	136,342	○ 전력플랜트 기자재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유력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019	101,000	○ 발전기자재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유력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020	0	-
<b>합계</b>	<b>298,342</b>	-

- 본 협회는 산업부로부터 주로 발전/전력 플랜트 기자재 관련 지원사업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왔음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2017.2.에 산업부 연구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 출신이 본 진흥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70]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85,000	○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2018	0	-
2019	272,056	○ 에너지산업 DC플랫폼 구축 및 실증지원 사업 ○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신남방 전력기자재 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2020	1,880,000	○ 중소기업 배터리 설치 ESS 사업장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
합계	2,237,056	-

-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경우 주로 전기산업분야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산업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산업부 4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2018.5.와 2021.7.에 각각 본 진흥회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이들은 모두 퇴직한 지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표 71]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	-------	------

2017	5,025,000	○ 전시산업기반구축 (2,025,000)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3,000,000)
2018	4,113,000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2,025,000)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2,088,000)
2019	4,113,000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2,088,000) ○ 전시산업기반구축 (2,025,000)
2020	10,551,000	○ 전시산업기반구축 (8,109,000)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2,442,000)
<b>합계</b>	<b>23,802,000</b>	-

- 산업부는 본 진흥회에 전시회 개최 지원 및 전시산업기반구축을 명목으로 매년 41~105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음

○ 한국철강협회

- 산업부 고위공무원이었던 FTA정책관이 2018.4.에 본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하였음. 이후 2021.4.에 산업부 고위공무원 정책기획관 출신이 상근부회장직을 이어받아 재취업하였음

[표 72] 한국철강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30,000	○ 철강업종 감축연구회 공통과제 지원사업
2018	110,000	
2019	29,000	
2020	20,000	
<b>합계</b>	<b>189,000</b>	-

- 산업부는 철강협회에 ‘철강업종 감축연구회 공통과제 지원사업’으로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음. 본 사업은 철강협회 회원사 및 국내 중소철강사를 대상으로 회의, 워크숍, 현장지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한국표준협회

-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2018.3.과 2021.4.에 각각 표준협회 회장으로 재취업하였음

[표 73] 한국표준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1,9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li> <li>○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li> <li>○ 기술표준 초청과정 운영</li> <li>○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기반강화</li> <li>○ 국제의장 간사활동 지원사업</li> </ul>
2018	4,86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체계 보급지원 기반강화</li> <li>○ 시험소 진출 타당성 조사</li> <li>○ 표준체계 전수협력</li> <li>○ 기술표준 초청과정 운영</li> <li>○ 국제의장 간사활동 지원사업</li> <li>○ IEC 국제총회 부산개최</li> </ul>
2019	1,9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의장 간사활동 지원사업</li> <li>○ 표준체계 보급지원 강화</li> <li>○ 표준체계 전수협력</li> <li>○ 협력 타당성 조사</li> </ul>
2020	1,47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제품의 다수인증 우너스토버리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민간보조) 수행기관 선정 재공고</li> <li>○ 국제의장 간사활동 지원</li> <li>○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 지원사업 (표준체계 전수협력)</li> </ul>
<b>합계</b>	<b>10,205,000</b>	-

- 표준협회는 주로 국제의장간사활동지원사업, 표준체계 보급지원강화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왔음. 2018년에는 IEC 국제총회 부산개최로 2,840,000천 원의 지원금을 더 받았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2017.4.에 산업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출신이 본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했음. 그 이전 2017.1.에는 산업부 3급 출신이 상근부회장직으로 심사를 받았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바 있음

[표 74]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6,16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효과</li> <li>○ MDB 활용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개발 전략 세미나</li> <li>○ 아프리카 플랜트 진출 확대 사절단 파견</li> <li>○ 아프리카 3개국 경제사절단 파견</li> <li>○ 제3차 한·아시아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li> <li>○ 중동 민간경제협력 기반 구축</li> <li>○ 중소형플랜트 수출지원사업</li> <li>○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li> </ul>
2018	4,67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B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 지원</li> <li>○ 제4차 한·아시아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li> <li>○ 중동 플랜트 기자재 사절단</li> <li>○ 중소형플랜트 수출지원사업</li> <li>○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li> </ul>
2019	4,81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기반구축</li> <li>○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사업</li> <li>○ 중소형플랜트 수출지원사업</li> <li>○ 아프리카 경제사절단 파견</li> <li>○ MDB 프로젝트 진출 활성화 기반 구축</li> <li>○ 중앙아 플랜트 엔지니어 교육사업</li> </ul>
2020	4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li> <li>○ MDB 프로젝트 진출 활성화 기반 구축</li> </ul>

		○ 중 소형 플랜트 수출지원 사업 ○ 중앙아 플랜트 엔지니어 교육사업
<b>합계</b>	<b>16,135,000</b>	-

-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중 소형 플랜트 수출지원 사업과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 등으로 산업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왔음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2017.3.에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 단장 출신이 본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75]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100,000	○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2018	0	-
2019	100,000	○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2020	100,000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기반구축
<b>합계</b>	<b>300,000</b>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산업부로부터 연간 1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왔음.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은 국내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완제품 및 부분품 전시, 해외 주요 업체와 국내업체 간의 마케팅, 대 국민 홍보를 위한 이벤트(에어쇼 등)에 사용되었음

○ 해외자원개발협회(사)

- 해외자원개발협회의 경우, 2017.1.에 산업부 4급 출신이 인력양성실장으로, 2020.5.에는 고위공무원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출신이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76] 해외자원개발협회(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2,84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전문가 초청 연수</li> <li>○ 석유가스 생산증진 산학 협력 연구단</li> <li>○ 석유가스 비전통자원개발 산학 협력 연구단</li> <li>○ 석유가스 물리탐사 산학 협력 연구단</li> <li>○ 연세대 그룹 운영</li> <li>○ 광물자원 선광·제련 산학 협력 연구단</li> <li>○ 전남대 그룹 운영</li> <li>○ 광물자원 탐사·개발 산학 협력 연구단</li> <li>○ 해양대 그룹 운영</li> <li>○ 한양대 그룹 운영</li> </ul>
2018	3,3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자원 탐사·개발 연구단</li> <li>○ 광물자원 선광·제련 연구단</li> <li>○ 연세대 그룹 운영</li> <li>○ 석유가스 비전통자원개발 연구단 운영</li> <li>○ 해양대 그룹 운영</li> <li>○ 석유가스 생산증진 연구단 운영</li> <li>○ 석유가스 물리탐사 연구단 운영</li> <li>○ 전남대 그룹 운영</li> </ul>
2019	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가스 물리탐사 연구단</li> <li>○ 석유가스 생산증진 연구단</li> <li>○ 연세대 그룹 운영</li> <li>○ 전남대 그룹 운영</li> <li>○ 석유가스 비전통자원개발 연구단</li> <li>○ 광물자원 선광·제련 연구단</li> <li>○ 광물자원 탐사·개발 연구단</li> <li>○ 한양대 그룹 운영</li> <li>○ 해양대 그룹 운영</li> </ul>
2020	0	-
<b>합계</b>	<b>6,645,000</b>	<b>-</b>

-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대학별 그룹 운영 및 석유가스·광물자원 연구단 사업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음

□ 그 외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에는 2016.5. 산업부 3급이 유통물류진흥원장으로, 2017.11. 기획조정실장 출신이 상근부회장으로, 2020.2. 제2차관 출신이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는 2017~2020년간 총 234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음(부천상공회의소 지원금액 합산)

○ (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초대 단장(2017.5. 재취업)과 제2대 단장(2020.10. 재취업) 모두 산업부 4급 출신 퇴직공무원임

[표 77] (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0	-
2018	1,000,000	○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2019	2,900,000	
2020	2,640,000	
합계	6,540,000	-

- 해당 법인은 산업부로부터 2018~2020년까지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총 65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음.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0억원(국비 105억원, 지방비 105억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 SK텔레콤(주)

- 2016.9.에 산업부 4급 출신이 에스케이텔레콤의 상무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78] SK텔레콤(주)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1,070,000	○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Smart Energy Eco City 조성
2018	0	-
2019	1,190,456	○ IoT, T-Map, Big Data 교통정보기반의 에너지솔루션을 적용한 Smart Street Lighting구축
2020	0	-
합계	2,260,456	-

- 본 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에코시티 조성과 스마트 스트리트 라이트닝 구축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음

○ (주)KT

- 2018.2.에 산업부 4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주)KT의 팀장으로 재취업함

[표 79] (주)KT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2,300,000	○ 지능형 에너지관리솔루션과 신재생인프라를 활용한 녹색성장 도시 실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문화체육시설 에너지 절감 BP모델 구축 ○ 에너지자립도 향상과 친환경에너지로 만드는 스포츠·관광·교육의 충북도 조성사업
2018	2,916,617	○ 김해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IoT/신재생 인프라 결합 관광·에너지 융합사업</li> <li>○ 스마트에너지가 전환하는 충청인의 일터·쉼터·삶터</li> </ul>
2019	1,202,610	○ 건물지원사업
2020	623,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크라이나 AMI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li> <li>○ 「따로 또 같이」 봉제생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li> </ul>
<b>합계</b>	<b>7,042,927</b>	-

- 케이티는 주로 에너지 관련 구축 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왔음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12.에 산업부 고위공무원인 산업혁신성장실장 출신이 본 대학교의 제8대 총장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8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108,300	○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
2018	141,500	○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
2019	293,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생산형장 애로기술지도 센터 조성 및 지원</li> <li>○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li> </ul>
2020	19,762	○ 인도네시아 산업분야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 구축 상세기획
<b>합계</b>	<b>563,362</b>	-

-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 청년전문가 양성사업 및 해외 산업 지원 등으로 지원해왔음

### 3. 국토교통부

#### □ 공사·공단 등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는 국토부 4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건설정책연구소장으로(2016.12.), 본부장으로(2020.1.) 각각 재취업하였음

[표 8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90,000	○ 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 운영사업
2018	80,000	○ 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 운영사업
2019	80,000	○ 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 운영사업
2020	265,000	○ 제10회 녹색건축한마당 (65,000) ○ 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 운영사업(200,000)
합계	515,000	-

-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주로 ‘제로에너지빌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음. 본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 지정부터 시작된 것임

##### ○ 한국공항공사

- 2018.3.에 국토부 고위공무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이 공사 부사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있음. 2018.5. 사장직에는 국토부 고위공무원(항공정책실장) 출신이 취업승인을 받아 지원하였으나 중도낙마하였음

[표 82] 한국공항공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8,950,000	○ 공항 소음대책사업

2018	13,260,000	○ 청주공항 계류장 확장 및 주기장 신설사업 (4,000,000) ○ 공항 소음대책사업 (9,260,000)
2019	8,420,000	○ 공항 소음대책사업
2020	7,800,000	○ 공항 소음대책사업
<b>합계</b>	<b>38,430,000</b>	-

-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에 공항 소음대책사업과 청주공항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음. ‘공항 소음대책사업’은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방음, 냉방시설 설치, TV수신료 및 전기료지원 등의 소음대책사업임(1994~계속)

○ 한국교통안전공단

- 2017.12.와 2021.2.에 국토부 고위공무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재취업하였음. 더불어 2021.8.에는 국토부 4급(국장급) 출신이 상임이사로 재취업하였음

[표 83]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1,996,000	○ 녹색물류전환사업
2018	1,860,000	○ 녹색물류전환사업
2019	0	-
2020	355,556	○ 버스운전인력양성 지원사업 (200,000) ○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38,756) ○ 울릉군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 (116,800)
<b>합계</b>	<b>4,211,556</b>	-

-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녹색물류전환사업과 버스운전인력양성,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음. ‘버스운전인력양성’은 버스운전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임(2019~계속)

○ 한국농어촌공사

- 2020.4.에 국토부 5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일반계약직으로 재취업한 바 있음

[표 84] 한국농어촌공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5,07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안지사] 상시배수장 위(수)탁 관리 (572,000)</li> <li>○ [예산지사] 지역개발지원(출렁다리) (4,500,000)</li> </ul>
2018	1,1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녕지사]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300,000)</li> <li>○ [함안지사] 상시배수장 위(수)탁 관리 (570,000)</li> <li>○ [충주.제천.단양지사] 고명동 한천지구 창조지역사업 (260,000)</li> </ul>
2019	1,0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녕지사]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300,000)</li> <li>○ [함안지사] 상시배수장 위(수)탁 관리 (57,000)</li> <li>○ [충주.제천.단양지사] 고명동 한천지구 창조지역사업 (210,000)</li> </ul>
2020	1,395,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녕지사]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100,000)</li> <li>○ [함안지사] 상시배수장 위(수)탁 관리 (425,000)</li> <li>○ [성주지사] 재해예방용 상시배수장(후포문명) 위탁 운영관리(55,000)</li> <li>○ [부안지사] 매화풍류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 (815,400)</li> </ul>
<b>합계</b>	<b>8,677,400</b>	-

- 국토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상시배수장 위(수)탁 관리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음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는 2017.11. 국토부 7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운전원으로 재취업하였음. 그 밖에도 2019.11에 각 6급과 7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운전원직에 대하여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으로 2019년에 63,403천원, 2020년에 16,000천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음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표 85] 한국부동산원 재취업 현황

직책	성명	재직 기간	주요 경력
원장	손△△	95.03~98.03	건교부 차관
원장	강△△	98.03~00.08	건교부 차관
원장	이△△	00.09~01.03	제17대 국회의원
원장	이△△	01.04~01.11	호남대 총장
원장	강△△	01.12~04.12	국무조정실
원장	장△△	04.12~07.12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원장	황△△	07.12~11.01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장	권△△	11.01~14.03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원장	서△△	14.03~17.03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원장	김△△	18.02~21.02	한국감정원
원장	손△△	21.02~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상임이사	박△△	16.01~17.12	경기도 교통국장
상임이사	이△△	19.05~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고위공무원급이 원장직으로, 4급 공무원은 상임이

사직으로 재취업을 해왔음

[표 86] 한국부동산원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60,000	○ 녹색건축 홍보사업
2018	281,000	○ 제8회 녹색건축한마당 (40,000) ○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사업 (180,000) ○ 녹색건축 홍보사업 (61,000)
2019	216,000	○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사업 (100,000) ○ 제9회 녹색건축한마당 (40,000) ○ 녹색건축 홍보사업 (76,000)
2020	176,000	○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사업 (100,000) ○ 녹색건축 홍보사업 (76,000)
<b>합계</b>	<b>733,000</b>	-

- 한국부동산원은 ▲녹색건축 홍보사업, ▲녹색건축한마당, ▲건축물 에너지 성능관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국토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음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2019.3.에 국토부 제1차관 출신이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으로, 2021.4.에 국토부 별정직고위공무원 출신이 대외협력부장으로 재취업하였음

[표 87] 한국철도공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296,362,000	○ PSO보상(철도공익서비스비용 보상) (296,222,000) ○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140,000)
2018	324,485,209	○ PSO보상(철도공익서비스비용 보상) (323,83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위탁 컨테이너 관리비 (533,209)</li> <li>○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120,000)</li> </ul>
2019	352,9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O보상(철도공익서비스비용 보상) (352,800,000)</li> <li>○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110,000)</li> </ul>
2020	9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 (95,000)</li> </ul>
<b>합계</b>	<b>973,852,209</b>	-

- ‘PSO보상’은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사업 등 철도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여 철도의 공익적 기능 확보를 하는 사업임(2005~계속).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관리비’는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을 지원하는 사업임(2006~계속)

## □ 민간기업

### ○ 이레일(주)

- 2017.4.에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 고위공무원이 이레일(주) 대표이사로 재취업하였음

**[표 88] 이레일(주)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8	13,333,129	○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019	22,080,540	○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020	26,539,511	○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b>합계</b>	<b>61,953,180</b>	-

- 국토부는 이레일(주)에게 '서해선(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3년간 총 619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음
-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년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사업자인 이레일의 손실을 배상해주기 위해 493억 원을 지급했음<sup>84)</sup>. 이는 이레일의 민간투자비가 당초보다 1,127억원 추가로 늘어난 데 대한 추가 임대료와 간접비를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이자와 중재비용을 더한 것임

○ 현대자동차

- 2021.6.에 국토부 4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현대자동차(주) 상무로 재취업하였음
- 2019년 현대자동차(주)는 국토부로부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5억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음. 이는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인천시와 실시한 '인천e음' 시범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것임

□ 해외건설협회

[표 89] 해외건설협회 회장직 재취업 현황

직책	성명	재직 기간	주요 경력
회장	홍△△	88.08~95.03	건설부 해외국장
회장	김△△	95.04~01.01	건설부 차관→ 한국주택공사 사장
회장	강△△	01.02~03.06	건교부 차관
회장	유△△	03.08~06.08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회장	이△△	06.09~09.02	상공회의소 부회장
회장	이△△	09.02~12.02	국토부 제2차관

84) 김희진 기자. 「정부, 올해 신분당선 등 철도 민간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배상금 860억원」. 경향신문 (2021.10.13.자 기사).

회장	최△△	12.02~15.03	건교부 차관
회장	박△△	15.04~18.07	국토부 제1차관
회장	이△△	18.07~21.08	서울시립대 교수
회장	박△△	21.08~	국토부 차관

- 해외건설협회의 경우 국토부를 비롯한 관·정 출신들이 회장직을 대물림 해왔음

[표 90] 해외건설협회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7	9,42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 (5,200,000)</li> <li>○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2,960,000)</li> <li>○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운영 (770,000)</li> <li>○ 해외건설 정책수립 지원 (400,000)</li> <li>○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93,000)</li> </ul>
2018	9,25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건설 훈련지원사업 (2,792,000)</li> <li>○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 (5,200,000)</li> <li>○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93,000)</li> <li>○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운영 (770,000)</li> <li>○ 해외건설 정책수립 지원 (400,000)</li> </ul>
2019	9,10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고급 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 (700,000)</li> <li>○ 글로벌 청년양성사업 (2,708,000)</li> <li>○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 (5,700,000)</li> </ul>
<b>합계</b>	<b>27,786,000</b>	-

- 국토부는 해외인프라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해외건설협회

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음

-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 선점 및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통한 해외건설수주 극대화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이 그 목적임
- 사업년도 기준, 해외건설협회는 국토부로부터 매년 90억 원 가량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왔음
-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국토부의 사업을 본 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해왔음. 2020년 협회 정기종합감사에서 ‘2015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가 보조금을 편취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고 2억3천만원 가량을 회수 조치 받은 바 있음<sup>85)</sup>

---

85) 국토교통부. <2020 해외건설협회 정기종합감사 공개문> (2020.02.12.)

## 4. 중소벤처기업부

### □ (재)경북테크노파크

- 2020.11.에 중기부 지방청장(4급) 출신 퇴직공무원이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취업하였음

[표 91] (재)경북테크노파크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국고보조금	사업내용
2018	740,000	○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
2019	365,156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105,156)
		○ 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사업(120,000)
		○ 콰테말라 섬유분야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140,000)
합계	1,105,156	-

- 경북테크노파크는 2018년에 중기부로부터 7억 4천만 원, 2019년에는 3억 6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음

### □ 중소기업중앙회

- 2018.12.에 중기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 출신 퇴직공무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였음
-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에 중기부로부터 '2019 TJB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 데이' 사업을 명목으로 총 6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음

## [부록4] 경실련 관피아 조사 및 제도개선 T/F

**위원장** 김 호 균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명예교수)

**위원** 김 종 근 ((사)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원 동 환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박 병 일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  
설 원 식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이 성 주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 효 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여대 경영학부 교수)  
나 준 희 ((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 한국교통대 교수)  
안 병 선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감사, 안병선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윤 순 철 (경실련 사무총장)  
배 귀 희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정 지 응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사무국** 권 오 인 경실련 국장  
오 세 형 경실련 부장  
정 호 철 경실련 간사  
박 은 소 리 경실련 간사



##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2022년 1월 23일 인 쇄

2022년 2월 15일 발 행

발 행 인 : 김 호 균

편 집 총 괄 : 김 중 근 / 권 오 인

편 집 진 행 : 오 세 형 / 정 호 철 / 박 은 소 리

발 행 처 :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서울 종로구 동승3길 26-9 경실련회관

전화 / 02-3676-2143(직), 02-765-9731(대표)

팩스 / 02-741-8564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하며, 전재를 할 경우  
반드시 자료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경실련 홈페이지 <http://www.ccej.or.kr> 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